

통일교육

과거 · 현재 · 미래

책임 저자 : 허문영 · 권오국

한만길 · 김영수 · 이영동 · 양정훈 · 전병길
박찬석 · 오기성 · 송두록 · 김병로 · 전영선
공용철 · 권희영 · 정용길 · 김흥광 · 이애란

통일교육

과거 · 현재 · 미래

책임 저자 : 허문영 · 권오국

한만길 · 김영수 · 이영동 · 양정훈 · 전병길
박찬석 · 오기성 · 송두록 · 김병로 · 전영선
공용철 · 권희영 · 정용길 · 김흥광 · 이애란

통일교육

과거 · 현재 · 미래

인 쇄: 2011년 11월 10일

발 행: 2011년 11월 15일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도서출판 오름(02-585-9123)

인쇄처: 도서출판 오름(<http://www.oruem.co.kr>)

ISBN 978-89-8479-607-2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통일교육

과거 · 현재 · 미래

발간사

오늘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적 실체를 지닌 정권이 병존하고 있다. 한 민족 안에 두 개의 다른 정치체제와 정권이 존재한다. 특수한 상호관계를 가지는 두 개의 국가가 다투는 두 형제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 광복 65년, 6·25전쟁 60년이 지났음에도,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분단 고도(孤島)로 남아 있다. 전 세계차원의 냉전적 대결구도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붕괴되었으나,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 민족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오늘의 분단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감상적 차원에서 회구하기만 하거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통일은 민족숙원으로만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분단구조가 우리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옥죄는 질곡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길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다. 통일을 갈구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방면에서 이질화된 제도와 의식을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려는 의도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에는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국가통제 아래 국가주도의 통일논의만 존재하였다. 이 시기 통일담론을 반공·안보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도 민족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민주화가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가 확산되자, 통일 분야에서도 ‘이념의 정치’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이 흐름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통일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통일정책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분단관리를 넘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학계와 시민사회도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평화의 가치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통일의 가치가 더 중요한가? 이 문제는 결코 이분법적으로 질문하고, 답할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분단구조가 갖고 있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닐진대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분리할 수

있겠는가.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헌법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전문에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 관점 또한 헌법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점차 통일무용론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 원인은 분단의 고착화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관심퇴조와 월남세대의 감소, 그리고 통일비용에 대한 그릇된 오해도 한몫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통일의 길은 더욱 험난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통일교육이 북한실태 또는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 정서와 괴리감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북한실태 교육은 북한실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통일유보론 내지 반통일론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는 남남갈등의 심화와 맞물려 소극적 또는 비판적 통일교육의 양상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비전 및 통일국가상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도 객관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통일의지를 제고하여 통일대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교육은 수많은 논의와 노력을 통해 방향, 목표, 내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체계와 내용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 이 같은 점을 반성하고, 2011년 통일연구원은 헌법 제4조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올바른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교육계·시민사회단체·언

론계·종교계·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운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10차례에 걸쳐 ‘2011 KINU 통일교육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총 23명의 발표자와 86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본서는 포럼에서 발표된 15편의 논문을 가려 뽑은 것이다. 최종 결과물은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동영상·파워포인트·강의 교재를 함께 엮은 『통일교육 교재』로 발간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통일운동 단체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통일교육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포럼 진행과정에서 문인철·김민아 프로젝트 연구원이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차례 ...

:: 발간사

사회통일교육 · 1

-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 3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 19 김영수 (서강대학교)
-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 | 43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가상공간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 77 양정훈 (수원대학교)
- 청년층을 위한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105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컨설팅)
-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수요조사 분석 | 127
허문영·권오국 (통일연구원)

학교통일교육 · 149

-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통일교육 콘텐츠에 대한 제언 | 151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 학교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 173 오기성 (경인교육대학교)
- 현행 학교통일교육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체제 추구 | 203 송두록 (서울고등학교)

학제적 사회통일교육 · 223

- 통일교육과 한반도형 평화인문학 | 225 김병로(서울대학교)
-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만남 | 237 전영선(건국대학교)
- 방송에서 바라본 통일교육 | 253 공용철(KBS)
- 분열과 통합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전망: 지구사적 관점에서 | 277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일교육 | 295 정용길(동국대학교)

탈북자의 시각 ·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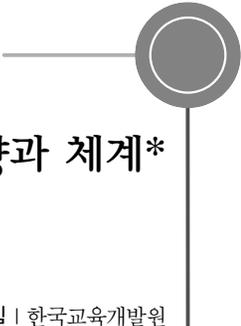
-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 현황 분석 | 321 김홍광((사)NK지식인연대)
- 탈북자의 시선, 통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347 이애란(경인여자대학)

:: [부록] 통일교육 콘텐츠 수요조사 설문지 | 363



사회통일교육

-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 한만길 · 한국교육개발원
-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 김영수 · 서강대학교
-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이영동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가상공간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 양정훈 · 수원대학교
- 청년층을 위한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병길 · 에스이노베이션컨설팅
-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수요조사 분석 | 허문영 · 권오국 ·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한만길 | 한국교육개발원

1. 문제제기

해방이후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냉전시대 형성된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반공교육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강력한 안보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한 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와 적

* 이 글은 지난 2008년 4월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임.

대적인 관계로 설정하였던 냉전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우리와 공존할 협력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지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통일관, 북한관은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강조하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이전의 남북 간 적대적 대립관계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통하여 10년 동안 새롭게 모색하였던 통일교육 패러다임은 평화공존 모형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교육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으로서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과 ‘비핵·개방 3000구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정 과제로서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북한 군사 위협 대비태세 강화,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3,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 시점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방향 전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처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40.

II. 통일교육의 변화과정

1. 반공교육과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은 명칭상으로 보아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변천해 왔다. 통일교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공식적인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반공교육, 멸공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념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반공교육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북한체제를 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남한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는 것이다. 나아가 반공교육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반공교육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의 모순, 북한체제의 허구성과 호전성을 알리는 한편, 남한체제의 우월성,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통일교육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반공교육은 북한을 적대시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동포이자 민족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교육은 결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서 반공교육과 이념교육은 독재권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따라서 당시의 반공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²⁾

2) 위의 책, p. 102.

1980년대 후반에 반공교육이 통일안보교육으로 변경되었다. 종래의 ‘반공교육이 반공논의와 통일논의’ 사이에서 상호 모순이 나타나고, 상충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유발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³⁾ 이로써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하고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북한은 우리에게 ‘적이면서 동시에 동포로서의 이중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는 합쳐서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비롯하여 통일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교육은 통일교육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의미는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통일안보교육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주도록 하였다.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통일안보교육의 중심을 통일에 비중을 두면서 안보의식은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3) 문용린 외,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2.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인 1998년부터 소위 햇볕정책으로 불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을 근간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남북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구축’, ‘남북한 당국 간 지속적인 대화’ 등을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또한 통일의 방식은 ‘일시적 사건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통일의 목표는 ‘정치적 체제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는 평화변영 정책에 대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변영정책은 통일, 외교, 국방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안보측면(평화)과 경제측면(변영)의 균형을 강조한다. 셋째,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변영을 추구한다. 넷째, 국민의 참여 및 합의 형성 등 국내적인 기반 조성을 강조한다.⁴⁾

이러한 평화변영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일교육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균형적인 대북관과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제시하였다. 2006 통일

4)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서울: 통일부, 2003), pp. 5~12.

교육지침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①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② ‘통일환경과 남북한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③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실현의지 함양’을 제시하였다.⁵⁾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사회적 포용과 배려, 남북한 사이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분단의 지속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국가번영과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으로서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평화통일과 통일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분명히 합의하고 있음을 일깨워야 한다.

5) 통일부, 『통일교육기본 지침서』(서울: 통일부, 2006).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상호간 대립 및 소모적 경쟁이 민족의 역량과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치명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위축된 민족의 역량을 드높이고,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 의식, 안보의식,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안보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은 의미상으로 다소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통일안보교육에서 강조하던 과거의 내용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등은 남북관계에 따라 변화한 측면이다.

3. 평화공존에 기초한 통일교육 접근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평화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과거의 통일교육이 우리 체제의 우위와 안보를 기반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접근이라면 새로운 통일교육의 모형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모형으로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⁶⁾

새로운 통일교육에서 교육목표는 남북한의 정치·제도적 통합을 지향하

6)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 208;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40을 참고하여 수정함.

〈그림 1〉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 모형

| | 체제우위 모형 | | 평화공존 모형 |
|------|--|---|---|
| 기본방향 | 안보·통일 지향: 안보와 체제 우위 강조 | → | 평화공존 지향: 이해와 화해·협력 추구 |
| 목표 | 남북한 국가·체제 통합 | → |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
| 접근방법 | 정치·이념적 접근 | → | 사회·문화적 접근 |
| 교육주체 | 정부주도: 교수자 중심 | → | 민관협력: 학습자 중심 |
| 교육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이념 중심 • 남한체제 우위 확인 • 통일정책과 통일미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중심 • 상호 이해와 존중 • 평화공존과 평화능력 |
| 교육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우위적 접근 • 일방적 전달 • 제한된 정보·자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비교와 이해 • 개방적 토론 • 다양한 정보·자료 |

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한다. 정치·제도적 통합은 체제 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 통합은 생활세계와 의식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법체제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사회통합은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관과 의식구조, 생활양식의 이질화, 차이, 차별, 불평등 상태를 극복함을 뜻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이의 문제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터득함으로써 극복해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의 목표는 남북한의 체제 통합을 지향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통합 노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자신의 가치 준거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

는 방법이 아니라, 북한문화가 우리와 상이함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을 이해하고, 또한 상호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한과는 다른 북한사회의 가치관과 생활방식, 행동양식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공존과 관용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교육주체의 면에서는 과거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정부의 경우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침, 내용체계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을 촉진·지원하는 법적 기반확충 및 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 기본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방법은 과거 체제경쟁의 차원에서의 비교우위적 접근이나, 제한된 정보와 자료를 통한 교수요원의 일방적 전달과 같은 교육방식, 공급자중심의 접근방식을 지양한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은 남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통한 상호이해, 다양성에 기초한 개방적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 추구,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교수학습,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III.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통일교육지원법에서 통일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것이다.”(제2조)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대로 통일교육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 평화적 통일 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가치는 그동안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제시된 가치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시대상황에 따라 그 의미나 중요성이 다소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우선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우리가 지향할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내적 정당성과 더불어 외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과의 상대적인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보다 성숙한 체제라는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이제 형식상의 민주주의,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민주주

의, 내용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존중, 정의와 복지, 관용과 공존,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누구나 신체적 위협이나 신분의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능력이 부족하다고 차별당하지 않고, 환경과 처지가 열악하다고 부당하게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가치가 통일교육의 주제이자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 협력적 대북관계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사실적 이해의 방법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 “북한사회 이해”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북한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불식시키고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북한의 입장이 정당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을 동포애로서 포용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체제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은폐하거나 약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또한 경계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현실과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은 전쟁의 상처와 대립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적대감으로 인하여 객관적 실체로서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빈약한 것이 현실적 한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동포, 한 형제리는 유대의식을 강조하면서 민족애와 동포애를 호소하는 자세 또한 감정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이며 비판적인 대북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현실, 정치체제와 이념, 사회문화적 특징,

주민의 생활상, 경제상황 등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아가 교류와 협력, 이해와 화합,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3. 합리적인 안보의식의 형성 → 국가의 안전과 국민보호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건전한 안보의식은 우리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가치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북한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상반된 이념과 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쟁도발과 더불어 군사적으로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안보의식은 언제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변화,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관점과 의미로서 안보의식의 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안보의식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북한을 포함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폭넓은 안보의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을 우리의 안보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남북관계와 주변국가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안보의식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남북대결의 과정, 전쟁의 피해와 후유증, 그리고 남북분단과 대결의 국제적 관계를 이해하고 전쟁방지, 안보의 중요성,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평화적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4. 관용적 문화 이해 → 한반도의 평화정착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 세계적인 개방체제로 변화하면서 우리와 다른 세계, 국가의 문화, 역사, 인종에 대하여 개방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새터민에 대한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새터민에 대하여 포용하고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 문화와 조류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분단체제에서 남북 간에 심화되어 온 상호 갈등과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상호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와 주변의 폭력과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방지하려면 국내·외적인 평화 저해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 주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평화의식의 중요성이 있다.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평화적 통일 실현의 태도 형성

통일교육의 한 방향으로서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 평화교

육은 탈상황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의 평화, 즉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평화교육의 의미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통일문제에서 제기되는 남남갈등의 양상을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평화는 남북한의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를 대결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주장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주제로서 북한문제, 통일문제, 한반도문제, 국제적 환경문제 등 수 없이 많은 주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6. 통일 과정에 대한 긍정적 이해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통일실현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과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통일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통일이 전체 사회에나 자기 자신에게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통일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의 과정, 통일이 실현되는 상황, 그리고 통일 이후의 미래상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이며 생산적이어야 한다. 또한 통일이 실

현된 이후에도 희망적인 미래가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대화, 교류협력의 역사, 통일의 민족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젊은 세대의 인식에 기초한 통일의 매력, 통일 이후 활동영역의 확대 등을 강조할 수 있다.

IV.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와 북한문제는 자주 정치적인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쟁점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때로는 교육현장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며,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통일교육의 주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키우는 기본 소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남북분단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면서 민주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주제를 활용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남북분단과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빈곤과 군사독재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세계적으로 놀라울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나아가 민주화를 성취한 저력을 가진 우리로서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남북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축적하는 데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 식량지원 문제는 분배의 투명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핵문제는 남한의 안보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사항이기도 하다.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협력 문제는 언제나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하여 보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 사항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김영수 | 서강대학교

1. 기존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

이 글의 목적은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참여주체의 역할을 성찰하고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요청은 무엇인지, 무엇을 챙기고 관리해야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실시된 사회통일교육은 ‘다양함 속의 혼란’으로 표현될 정도로 제각기 설정한 목표와 현실 여건에 맞는 교육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강사가 얘기하는 내용이 통일교육의 전부로 여겨지기도 했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의 방침과 계획만 수립하는 데 비중을 두었을 뿐,

실제로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피드백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된 사회통일교육 과정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도 없었으며, 교육운영자가 연초에 계획대로만 수행하면 된다는 타성 속에서 오직 몇 명이 참가했느냐와 강의 제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뿐, 실제 교육된 내용에는 별 관심이나 지도가 없었다. 더구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정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강사 선정방식으로 인해 사회통일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가르치는 문제가 제대로 점검되지도 않은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다.

한편, 통일교육 행사를 위해 동원된 일반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정부정책의 일방적 홍보 또는 강사의 방북 경험담, 그리고 탈북자의 얘기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동원된 청중은 강의 내용보다는 행사 끝난 후 다과회가 있는지, 기념품으로 무엇을 주는지, 언제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 관심사였다. 또 지역차원 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기관장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표심을 의식한 주요 인사들의 축사, 격려사, 인사 등으로 사회통일교육은 주가 아닌 종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관례화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하는 담당부서나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방안 없이 매년 상례적으로 실시되는 사회통일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사회통일교육 강사 또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나 비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일선에서 진행되는 사회통일교육은 이렇게 가르치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표준 강의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제목에만 ‘통일’이 들어가면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II.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통일교육을 목표로 한 바와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즉,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양상이 빚어지고 있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즉, 현장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¹⁾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민주평통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사로서 겪은 체험, 종료 후 수거한 설문지 응답반응, 각 지역협의회 간사들의 반응, 민주평통 사무처 각 지역 담당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²⁾ 여기에 기존 사회통일교육 효과를 분석한 실태조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³⁾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남북어깨동무, 좋은벗들, 평화재단 열린아카데미와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홍사단통일아카데미,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의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⁴⁾

1) 이 발제문은 2010년 수행한 통일부 연구과제 『사회통일교육용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중에서 발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연구과제는 2010년 10월 통일교육협의회에서 『바른 사회통일교육 길잡이』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 연구과제 수행기간인 2010년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접 강의한 서울지역 20개 협의회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의반응, 충남지역 6개 협의회, 전남지역 2개 협의회, 부산·울산지역 4개 협의회 반응을 직접조사한 것이다.

3) 함인희·김영수 외, 『통일교육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 통일부, 2002); 한만길 외, 『각급 학교 및 사회 교육기관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장희·김영수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계획』(서울: 통일부, 2001); 이우영, “통일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단기과정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통일교육원 주최 세미나 발표문, 1998.10.30).

4)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NGO단체의 실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강의 수락·실행과정 및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통일교육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통일’ 이 들어가면 진부한 것 같고, 안 들어가면 위에서 뭐라 그러고 ... 강사님이 좋은 제목 하나 정해주세요.”
- ② “사람 모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에 4강의를 몰아치니 마지막 시간엔 거의 다 가고 없어요. 강사님 양해해 주세요.”
- ③ “아침 시간이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 업은 젊은 엄마가 거의 다예요. 반응이 그렇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 ④ “선거 때라 축하할 사람이 많아서 강의 시간이 줄어들어 미안합니다. 원래는 60분 강의를 부탁했는데, 30분만 해주세요.”
- ⑤ “구청장이 출마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지나야 축사를 할 수 있으니, 60분 강의를 구청장을 때까지 끌어 주세요. 90분 이상 하셔도 됩니다.”
- ⑥ “강의 요약문을 보냈는데, 강의 듣는 분들에게 나눠드렸나요?” “강의 원고는 사무처에 보고하는 용으로 부탁한 거예요. 종이도 아끼고 나눠줘도 보지도 않으니 그냥 말로 해주세요.”
- ⑦ “강의 원고가 너무 적어요. 책자를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니 적어도 A4 30페이지 정도 써주세요. 두툼해야 뭔가 한 것 같고요.”
- ⑧ “통일교육 하면 지루해 하고 관심이 없어요. 제발 재미있게 해주세요.”
- ⑨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 갖지 말아주세요. 다 가버려 썰렁하거든요. 60분 강의 두 강좌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주세요.”
- ⑩ “여긴 군수가 민주당인데, 협의회장은 한나라당이예요. 그래서 사

이가 좋지 않아요. 강의하실 적에 참고하세요.”

- ⑪ “지역색을 잘 고려해서 특정 인물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지난 번 강사는 참석자들이 강의 중에 항의해서 강의가 중단된 적 있어요.”
- ⑫ “강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지난 강사는 왔다 갔다 한다고 시비가 붙어 강의 끝까지 못하고 갔어요.”
- ⑬ “어떤 강사는 자기 논문을 죽 읽어버리는 바람에 다들 졸고 재미없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혼났어요.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영 아니었어요. 제발 재미있게 해주세요.”
- ⑭ “통일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했는데, 10명도 채 안 되네요. 우리 사무국 인원들 10명 모두 참석해도 20명 안 되어요. ... 6회 마지막 강의 때는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좋은 강좌 개설해도 참석이 저조해 신이 나지 않아요.”
- ⑮ “통일 후 얘기 많이 해주세요. 최근 북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했어요.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 지난 정부 못했다고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짬 나요.”
- ⑯ “좋은 강사 좀 소개해 주세요. 탈북자 중에 말 잘 하는 사람 소개해주세요. 최근에 넘어온 탈북자라야 해요. 젊은 여성 탈북자면 더 좋고요.”
- ⑰ “시절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 정부 때 탈북자를 강사로 썼다가 윗분한테 혼났어요. 기껏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애써 놓았더니 반공교육으로 몰고 간다고요. 야단맞고 다른 팀으로 쫓겨났어요.”
- ⑱ “교장을 대상으로 강의를 먼저 해야 해요. 평교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장이 이해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북한이탈

주민 실태를 잘 알았어요. 앞으로도 교장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계속 해주세요.”

- ⑩ “인터넷 연결 안 돼요. 그냥 말로 해주세요.”
- ⑪ “과워포인트로 원고를 보내주세요. 요새 추세는 PPT이거든요.” “오늘 강의 주제는 PPT 필요 없는데요. PPT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PPT보다 보면 강의 흐름을 놓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세요.”
- ⑫ “질의응답 시간 꼭 주세요. 질문이 뭐가 나왔는지 위에 보고해야 돼요.”
- ⑬ “질문시간 주지 마세요. 이상한 할아버지들이 횡설수설하거나 말꼬리 잡는 투로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강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사람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얘기 길게 늘어놓는 바람에 좋은 분위기 망쳐버렸어요. 질문할 사람은 나눠준 종이에 써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사회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서 교육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는 ‘중간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적은 대신,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다.
- ② 통일교육 방향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주체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합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③ 통일교육 참여자들의 관심 부족과 열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 ④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고 싶어 하는 관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형성된 이해의 바탕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표출된다.
- ⑤ 사회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통일환경의 변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자료의 개발, 강사의 전문성 고양 등 교육현장에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⑥ 시민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청된다.
- ⑦ 통일교육을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아닌, 주되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⑧ 통일부담금이 개인에게 돌아갈 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통일이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와 함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⑨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부의 통일교육 방안이 일반인의 관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⑩ 교수 요원들에 대한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제대로 강의해 줄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 ⑪ 교사 통일교육 연수 때 강사가 몇 안 되어서 섭외가 어렵다. 통일교육을 제대로 하는 강사가 지방에는 소수여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⑫ 통일 후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크므로 이를 집중 연구, 그 결과를 미리 알려 충격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데, 이를 알려주는 강 의가 전혀 없다.
- ⑬ 통일교육이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우려될 정 도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이 전문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 안보와 화해·협력은 상호 배치되는 개념으로 강 의하는 강사가 있어 걱정이다.
- ⑭ 공공 사회교육기관에서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과 동일시한 나머지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열의와 관심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문제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의 통일 교육 과정과 내용은 안보중심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며 경직되고 획 일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민간사회교육기관의 경우는 교육내용이 다양하지만 프로그램 남발과 중복으로 특화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⑮ 민간 사회통일교육의 경우 대중매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본정 보 접근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하고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참여자들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 ⑯ 대부분의 사회통일교육기관이 상황이 열악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자체적인 자료를 개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다양한 교 육대상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 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는 악순환 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 사회교육기관에서는 기존의 자료 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통일교육 자체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다.
- ⑰ 다양한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교육 실태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다

양함 속의 혼란'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⑱ 공공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된 사회통일교육체계가 작동해야 정상화될 수 있다. 인력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행체계를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풀어나가야 한다.
- ⑲ 민간부문의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시장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사례를 적극 발굴,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III.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청

이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선 사회교육 현장의 사회통일교육 개선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통일교육의 표준 콘텐츠를 요청한다

다양한 사회교육기관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은 주로 안보중심의 통일관을, 민간 사회교육기관은 협력, 공존, 평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지향

한다.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일반 성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 뿐 아니라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와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이라는 역사적이고 범민족적인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화와 담론 형성과정으로서의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일정한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에 대한 제시가 교육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달된 내용이 통일교육 현장에서 공감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교수자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일 환경으로 인해 통일교육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목소리이다. 정부 차원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거,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침서에 담아 이를 기본으로 한 다음, 각 기관이 성격에 맞게 응용해 줄 것을 전달·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 의존적 적대관계, 협력적 적대관계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통일교육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컸다. 이는 현장의 고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고민이었다. 오랜 기간의 적대적 관계가 낳은 반공이데올로기 중심 통일교육,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국가안보를 중시해 온 안보중심 통일교육,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력을 중시하는 동반자 강조의 통일교육 등 다양한 통일교육 전범을 통해, 이제는 무엇이 통일교육의 핵심인지, 변화하는 통일환경 속에서도 빼놓으면 안 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교육인지를 잘 깨닫고 있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일교육 콘텐츠 확립·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사회통일교육 관련 시스템 및 제도의 체계화를 요청한다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에 기초해 이루지고 있다.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각 기관의 교육목표와 추진 방침에 의해 진행되어 일정한 시스템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 사회통일교육은 기관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상황에 부응하는 단기 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 사회통일교육기관은 재정적 기반, 기관끼리의 연관체계, 통일교육 실행능력 등의 교육 기본요건이 미흡한 수준이다. 공공 사회교육기관과 민간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맞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일교육 현장이 요청하는 도움과 안내, 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의 조력을 제도화하는 사회통일교육의 작동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교육의 중심을 확립하는 제도적 작업이 필요하다. 현행 상태로 방치할 경우, 편향된 다양성이 초래하는 가치관 혼란과 통일관련 국론분열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의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끌어 나가면 되지만, 민간 영역의 사회통일교육은 관련 NGO와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는 인식 전환과 접근이 필요하다.

3. 피교육생들의 참여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다

어떤 통일교육 현장을 가보더라도 숫자 채우는 것을 제1순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은 오랜 관행이자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민간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장을 벌여놓아도 숫자를 채우기가 힘든 현실에 고민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선입견,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세대특성, 삶과 밀접하지 않은 통일문제 자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소신과 의지를 갖고 통일교육의 장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민간 사회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의 참여 부족을 가장 큰 고민으로 제기하고 있다. 요컨대, 숫자를 채우는 문제는 통일교육 현장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육현장에서 겪는 고민이다.

한편, 피교육생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양적 참여문제와는 다른 질적 참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피교육생을 어떤 방법을 써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교육 담당자들의 틀에 박힌 관심과 관행을 전환·제고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참여를 독려하고 환기시키는 참신하고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강의 또는 강연이 끝나고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뒤풀이 행사를 광고하여, 현장의 숫자를 확보하는 교육지책을 단골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방식은 예산 확보 부담이 적지 않고, 교육과 다른 요소를 활용해 교육효과를 담보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원하는 교육대상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을 감안, 교육생 참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에 대한 전문연수제도를 활용해 교육담당자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현장 담당자들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청취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의가 좋았다’는 반응과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는 평가보다 더 좋은 참여 유인 요소는 없다는 사실에 착목,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4. 유능한 강사 섭외를 요청한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유능한 강사 확보 여부이다. 강의나 강연이 끝난 후 ‘오늘 강의 좋았다’, ‘내용이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통일교육을 준비한 교육담당자나 프로그램 운영자는 원한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 저런 강사를 섭외했느냐’, ‘통일교육은 재미없어 못 듣겠다’, ‘정부 정책 홍보 듣자고 이렇게 시간 허비할 수 있느냐’, ‘늘 같은 사람만 강의하느냐’ 등의 반응은 통일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선 ‘그야말로 죽을 맛’이란 심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고, 유능한 강사라고 평가 받고 있는 사람은 시간과 재정여건으로 섭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과 같이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새로운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대우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신진 강사는 새롭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열의가 있

어 강의환경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강사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공공 교육기관은 강사료가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고, 민간 교육기관은 재정이 열악해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많지 않은 강사료로 교육을 망치지만 앓을 정도의 강사를 초청하다보니 교육효과 제고가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 후 반응도 신통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강사진 섭외과정에서 강사 모시는데 급급하여, 강의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유명강사의 경우 강의 내용보다는 강사 네임밸류로 내용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통일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요컨대, 좋은 강사, 유능한 강사, 통일교육 효과를 책임지는 강사를 ‘발굴’ 하여 적절하게 ‘보급’ 하는 일이 강의 콘텐츠 개발과 함께 통일교육 효과성 제고차원에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강사풀을 형식적으로 제공만 하는 현행 차원을 넘어서 맞춤형 강사를 찾아내 섭외하는 문제, 유능한 강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이 향후 주력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IV.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안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요청을 토대로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매뉴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

회통일교육이 정해진 길지 않은 시간 — 보통 한두 시간 — 안에 끝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인 교육계획 설계자 및 운영자,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를 매뉴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효과 매뉴얼

- ① 강의 특성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 ② 교육대상에 맞는 주제 선정과 강의안이 필요하다.
- ③ 교육시간에 맞는 교육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 ④ 강의 호응과 반응은 강사의 책임이다.
- ⑤ 연속강의와 강사진 연합강의가 진행될 경우 강의구성 짜임새를 갖춰야 한다.
- ⑥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과의 소통과 대화를 시도한다.
- ⑦ 강의 종료 후 강사 자신이 강의 진단을 실시한다.
- ⑧ 교육담당자는 강의 반응 및 강사 호응도를 평가한다.
- ⑨ 통일교육 일지를 작성, 업무 연속성을 제고한다.
- ⑩ 지역 실무(사무)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2. 교육내용 전달 매뉴얼: 강사의 역할

- ① 보통 때보다 천천히 말해야 한다.
- ② 오늘 강의의 핵심을 먼저 분명하게 전달한다.

- ③ 강의 주안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 ④ 절대로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욕심내서는 안 된다.
- ⑤ 논문 발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⑥ 졸지 않는 강의를 해야 한다.
- ⑦ 파워포인트(PPT)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한다.
- ⑧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3. 교육시간 활용 매뉴얼

- ① 교육 시작 전에 도착, 교육장소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한다.
- ② 교육의 성격과 참석대상을 사전에 파악한다.
- ③ 강의시간과 분위기에 맞는 강의를 명강이다.
- ④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 교육효과를 높인다.
- ⑤ 강의 주안점을 반복·강조하면서 강의를 맺는다.
- ⑥ 강의진행계획에 맞춰 강의를 진행한다.
- ⑦ 교육시간 주역인 강사를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V.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상의 의견과 건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사회통일교육 현황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상에 나타난 통일교육 내용은 양호하다. 급변하는 통일 환경과 정책수요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진행, 콘텐츠의 현실 적실성과 교육활용도는 양호한 편이다. 단지, 우리 사회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만으로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강점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통일과 관련된 미래지향적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통일 미래상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절로 할애하여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지도방법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적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2시간 동안 주어진 교육시간을 활용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내용과 기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을 조합하여 어떤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이뤄내야 하는지를 지도하는 ‘성공적인 통일교육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강의 모듈을 제공한다면 통일교육의 표준화도 유도할 수 있고, 교육효과도 제고할 수 있어 ‘다양함 속의 혼란’으로 표현되는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영상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는 매뉴얼까지 곁들인다면 교육효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통일교육 현장 운영지침도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하면, 통일교육 현장의 가변성을 강사와 교육운영 담당자가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는가에 교육효과가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운영담당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지와 어떤 주제로 얼마 동안의 시간 안에 교육을 진행하는가를 강사 섭외과정에서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 강의

시작 전에 진행되는 의례와 행사가 강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주요 기관장과 정치인의 인사 및 축·격려사가 30분 이상 진행되다 보면, 통일교육이 뒤로 밀려나는 인상을 주게 되어 교육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현장 진행 매뉴얼이 함께 제시되어 교육현장의 통제와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통일교육의 성공적 진행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강사’ 문제이다. ‘누가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의 지적이다.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누가 가르치는가에 대한 요인이 사회통일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들어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효과성 여부는 별도로 세밀하게 측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인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단순히 북한실상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 그리고 북한보다 우리가 낫다는 얘기만으로 통일교육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로 구성된 예술단을 초청해 북한 노래 몇 곡 듣고 북한 춤 보는 것으로 통일교육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자로 구성된 예술단을 초청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지역행사로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호소도 제기되고 있고, 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쪽 출신 브로커라는 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생들로부터의 호응과 참여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 몰두하다 보니 돈이 들더라도 탈북자 출신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기관의 사회통일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유관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의하면 현재보다 통일교육의 체계와 작동원리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으나, 다양성과 설립 취지를 앞세운 민간기관이 주최하는 통일교육을 지도·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교육효과가 높고 통일교육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상의 평가를 토대로 판단할 때, 사회통일교육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되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누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육원 교수진을 갖추고 있어 교육의 수월성과 체계를 유지·보완할 수 있지만, 통일교육 할 때마다 통일교육 강사를 섭외·지원받아야 하는 일선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

통일교육위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지만, 통일교육위원 전원이 통일교육의 수월성과 효과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모두가 유능한 강사로 일선에 나서기에는 아직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역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교육위원이 사회통일교육의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통일교육위원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호응이 좋고 반응이 양호하게 나온 경우, 이를 모델로 삼아 사회통일교육의

표준 모형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을〉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준비된 영역이어서 부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정도이다. 현행 『통일교육지침서』에 있는 사회통일교육의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맞는 표준 강의 모듈과 매뉴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급·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를 보면, 학교용에 비해 통일교육의 주안점 소개라든가 교육과정별 권고사항이 빠져 있다. 학교용 활용도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주안점을 강조하고,⁵⁾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맞는 권고사항과 교과운영(도덕·사회·국어·예체능)에 맞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처럼, 사회통일교육 과정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참고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지침서(일반용)에 있는 지도방법이 오히려 학교용 지침서에 포함되는 것이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필요한 통일교육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교육 실행시 참고할 주요 내용만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기존 틀을 과감히 개선하여,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운영 지침 및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는 ①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고, ②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며, ③ 질의응답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생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거창한 명칭을 내세운 전문적 교육기법을 교육현장

5)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에 통일교육 주안점으로 제시된 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②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③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④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⑤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⑥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이 사회통일교육 과정에서도 주안점으로 강조되어야 함.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서울: 통일부, 2010), pp. 15~19.

에서 활용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이론적 아이디어나 용어의 참신한 기법 제시는 현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교수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숙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성인교육 형태의 학습과정에서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교수내용의 인지 정도를 평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언급과 “그러나 담당 교수자에 대한 총평과 인상, 교수된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반응은 다각적으로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권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 이는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의 호응도와 인기도에 함몰되다보면 교육의 목표와 진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학생 대다수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수학 과목을 없애거나 수학 담당교사를 바꾼다는 얘기와 연관되는 지적이다.

사회통일교육의 관건은 결론의 제시보다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와 관련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피교육자들 스스로 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 〈어떻게〉의 핵심이다.

한편, ‘다양성의 혼란’을 빚고 있는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접근보다는 잘 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장려하고 이에 부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늘려 맞추기’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시장의 원리에 맡기되, 통일교육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6) '95년판 『통일교육지침서』가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기본방향』(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1998), p. 75에 실린 표현.

VI.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통일교육을 <누가> 담당하는가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을 비롯한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통일교육 운영주체 및 강사를 대상으로 사회통일교육 매뉴얼 설명과 숙지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통일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통일교육 실행주체를 대상으로 사회통일교육 모범 강의를 실시, ‘표준화 속의 독창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범 강의 선정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넷째,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지역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무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통일교육 내용에 꼭 들어갈 콘텐츠를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이를 숙지할 수 있는 별도의 콘텐츠 책자를 만드는 교육내용의 표준화 체계 마련,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보완·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도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통해 ‘좋고 유능한 강사’의 요건을 예시, 효과적인 교육기법을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통일교육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누가>에 가장 큰 비중과 역

할이 달려 있음을 주목, 사회통일교육을 운용하는 참여주체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보수교육의 조기 가동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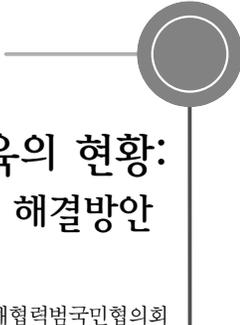
■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장희·김영수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계획』. 서울: 통일부, 2001.
- 통일교육협의회. 『바른 사회통일교육 길잡이』.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0.
- 통일부.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기본방향』. 서울: 통일부, 1998.
- _____.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2010.
- 한만길 외. 『각급 학교 및 사회 교육기관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 함인희·김영수 외. 『통일교육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2.

2. 논문

- 이우영. “통일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단기과정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서울: 통일교육원 주최 세미나 발표문, 1998.10.30.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영동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 서론

현 정부 들어 학교 및 사회에서 사용되는 통일교육은 지난 정부의 통일교육과 비교했을 때 다른 방향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환경변화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확연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전의 통일교육이 평화를 강조했다면, 현재의 통일교육은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위 두 사건을 통해 더욱 강경해지고 보수적인 입지가 강화되어 ‘통일 안보교육’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반공, 승공교육 → 안보교육 → 통일안보교육 → 통일교육 → 통일안보교육으로 변천해 왔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변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불신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의 통일교육의 목적과는 달리 국민에게 특정한 정치 이념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증오하게 하는 이념교육이나 통일교육이 아니라 철저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통일 전이나 통일 후에 독일민족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다.

우리의 경우도 객관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통일의 문제를 정권의 유지수단이 아닌 민족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향배와 무관한 객관성을 겸비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정부가 들어설 경우 현재의 통일교육의 방향은 변화되기 마련이다.

통상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나눈다. 일부에서는 학생 대상은 학교통일교육, 일반인 대상을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상별로 구분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생대상 통일교육이 학교통일교육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개념의 혼란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학교통일교육,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통일교육은 학생이 대상이지만 사회통일교육은 성인은 물론 학생도 포함된다.

II. 사회통일교육 현황

1. 통일교육 개념과 목표

가. 통일교육개념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개념을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과정까지 포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즉, 통일교육은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¹⁾

한편 사회통일교육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적 노력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²⁾ 사회통일교육은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통일교육, 사회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된다. 사회통일교육은 시행주체

1)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 3.

2)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p. 4.

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통일교육과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으로 나눈다. 사회통일교육은 대상에 따라 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사회통일교육은 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물론 성인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나. 통일교육 목표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상 통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 통일 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³⁾

하지만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목표는 각 단체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통일에 평화를 강조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안보를 보다 중시하는 단체가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갈등해결, 다문화 이해, 민주시민교육을 접목하는 단체가 있다.

2007년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에 대한 조사결과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 남북의 화해협력 및 교류가 24.2%,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 다문화이해교육이 21.2%,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이 4.0%,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건전한 안보관이 3.0%, 북한사회의 이해가 3.0%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다양하게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p. 9~11.

2. 통일교육의 변화

가. 반공교육의 전개

해방 후 1950년대까지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여 정권유지의 기반으로 삼았고, 1960년대 통일교육은 소위 혁명공약으로 “반공(反共)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하고…”로 시작되는 혁명공약은 각급 학교 이념교육으로 활용하였다. 1973년대 제3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반공교육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 시기의 통일교육은 ‘승공통일교육’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 통일교육으로 전환

(1) 1980년대

제4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종전의 승공통일의 기조는 유지하되 ‘안보교육’의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1987년 5차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의 명칭을 ‘통일안보교육’으로 변경하였다(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을 동시에 추구).

(2) 1990년대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이 사라졌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영역으로 ‘민주시민교육’, ‘자유, 평화, 민주교육’, ‘민족통합 교육’으로 정리하였다.

(3) 1990년대 후반 이후

통일교육에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평화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이며,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법에 따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25명)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15명)가 구성(2008년 삭제됨)되었고 통일교육협의회가 창립(2000년)되었다.

또한 통일안보교육 시범학교(초20, 중19 고9 총 48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며, 2000년도부터 매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만들어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배포(2007년도부터는 학교용 별도제작 배포)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은 체제우위를 강조하기 보다는 북한실상 바로 알기와 평화 공존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대두되어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6·15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정책의 기조가 화해협력으로 바뀌었음에도 통일교사의 성향과 지역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는 경향도 있었다.

다. 통일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

2008년 이후 정권의 변화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이전 정부에 비해 현격하게 변화 되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핵개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안보에 대한 중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의 경우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에 차이가 있으며,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통일교육기본계획’ 중 ‘2011년도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로 통일안보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⁴⁾ 중점 추진과제로 ‘통일안보교육 강화’⁵⁾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일부에서는 통일보다

〈표 1〉 학교 교육과정 시기별 통일교육 내용상의 특징⁶⁾

| 교육과정 | 고시연도 | 통일교육 내용상의 특징 |
|------|---------|--|
| 제1차 | 1954 | 반공교육(방공, 승공, 멸공, 이데올로기비판교육 등) |
| 제2차 | 1963 | |
| 제3차 | 1973 | |
| 제4차 | 1981 | |
| 제5차 | 1987 | 통일·안보교육 |
| 제6차 | 1992 | 통일교육(민족화해 협력교육, 민족동질성 회복교육, 평화번영 교육 등) |
| 제7차 | 1997 | |
| | 2008 이후 | 통일안보교육 강화 |

는 안보에 더 중심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대치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3. 통일교육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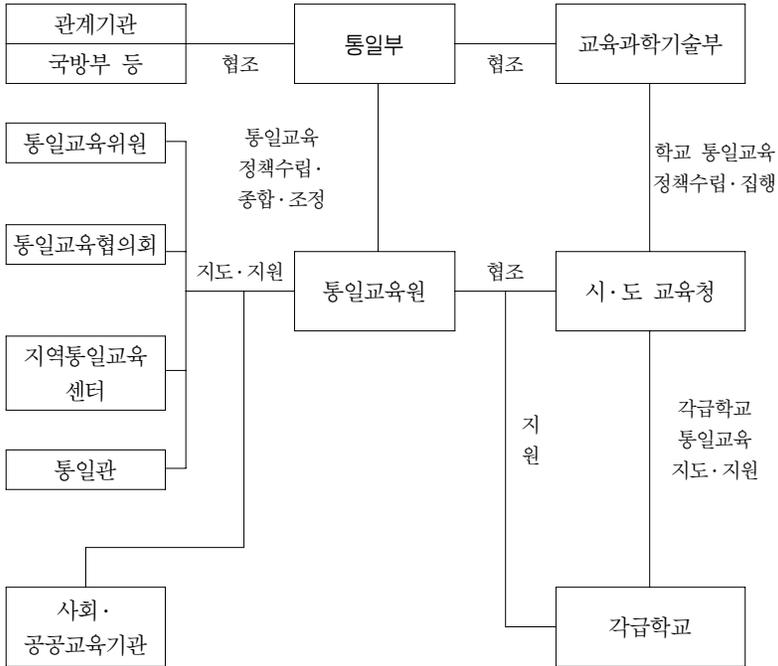
공공기관의 통일교육 추진체계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사회통일교육과 교과부가 주관하는 학교통일교육의 양 축으로 구성된다. 교과부, 교육청, 통일교육원, 국방부, 행안부 등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협의회와 지

4) 통일부, 『통일교육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2011), p. 14.

5) 위의 책, p. 16.

6) 차우규, 『통일교육 역사와 현황 그리고 과제』 (통일교육협회 청소년분과 워크숍 자료집, 2004). 7차 2008년 이후부분은 필자가 재편집함.

〈표 2〉 통일교육 운영체계⁷⁾



역 통일교육센터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반관반민의 통일교육,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기관 영역 간 협조체계는 아래 표와 같으나 유기적 협조체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통일교육운영계획』 (2011), p. 4.

4. 사회통일교육

가. 사회통일교육실시 주체

공공기관으로는 통일교육원, 교원연수원, 공무원교육원, 법무부, 국방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외동포교육기관, 그리고 헌법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통일교육원의 지도·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로는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및 사회·공공교육기관이 있다. 민간단체로는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공공기관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2년 5월 당시 국토통일원에 ‘통일연수소’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1996년 ‘통일교육원’으로 개칭). 통일부는 교과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통일교육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원을 통해 각 기관과 시도교육청을 지도·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학교용)를 발간·배포 하고 있다. 2000년부터 발행된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사회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들은 『통일교육지침서』 활용 여부를 나타내는 조사결과로 초·중고 교원의 경우 이 지침서 활용도는 예상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의 활용 여부⁸⁾

| | 자주 활용 | 가끔 활용 | 배포 받지만 활용 안 함 | 지침서 본 적 없음 | 사례 수 |
|----|-------------|---------------|------------------|---------------|---------------|
| 전체 | 6 (3.5%) | 40 (23.5%) | 51 (30%) | 73 (43%) | 170 (100%) |

〈표 4〉 통일교육을 위한 지침서의 활용 여부⁹⁾

| | 자주 활용 | 가끔 활용 | 배포 받지만 활용 안 함 | 지침서 본 적 없음 | 사례 수 |
|----|--------------|-------------|------------------|---------------|--------------|
| 전체 | 6 (27.3%) | 11 (50%) | 2 (9.1%) | 3 (13.6%) | 22 (100%) |

『통일교육지침서』를 활용하는 교원은 27%로 비교적 낮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43%의 교원이 『통일교육지침서』를 본 적도 없다는 점은 『통일교육지침서』의 보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통일단체 조사에서 사회통일교육시 현행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자주 및 가끔 활용한다는 응답은 77.3%(17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우리의 『통일교육지침서』는 ‘지침’이라기보다는 ‘북한 및 통일문제의 이해를 위한 교과서와 같은 성격’으로

8) 오기성 외, 『통일교육 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p. 12, <<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04년 5월 7일).

9) 위의 글, p. 18.

지침이 내용 체계에 혼재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룰 때 지침(guideline)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¹⁰⁾

통일교육 내용으로는 통일의 당위성과 안보만을 강조 할 것이 아니라 평화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원은 다음의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 5〉 통일교육 과정 현황¹¹⁾

| 과정 | 회수 | 인원 |
|------------|------|--------|
| 사회통일교육 과정 | 47회 | 2,215명 |
| 학교통일교육 과정 | 45회 | 2,730명 |
| 공무원통일교육 과정 | 26회 | 1,469명 |
| 통일교육전문 과정 | 2회 | 50명 |
|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 1회 | 36명 |
| 사이버통일교육 | 20회 | 3,400명 |
| 계 | 141회 | 9,900명 |

* 방북교육은 별도로 진행

10) 차우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 개선 연구,”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38회 시민학술포럼 발표문, 2003.11.13), p. 39.

1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통일교육운영계획』(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p. 5.

〈표 6〉 사회통일교육 과정 콘텐츠 예시¹²⁾

| | 과목 | 내용 |
|-----|------|--|
| 교과목 | 기본과목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
| | 전문과목 |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소통방안,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통일한국의 미래비전 |
| | 참여활동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종합토론 |
| | 체험학습 | 통일·안보 현장견학, 동영상 등 영상물 시청 |

* 통일교육협의회 단체임원만

교육 강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종합토론 체험학습으로 구성하되 과 정별로 강의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2011년 기준 50명)과 통일 교육위원을 위촉(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6개 시도에 걸쳐 협의회 를 구성하고 있음)운영하고 있다.

(2) 교육과학 기술부, 국방부, 법무부등 공공기관

(가) 교육과학기술부

추진방향으로는 통일안보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통일안보교육의 접근성 및 친밀성을 제고하고 전학교·전학생 대상의 통일안보 계기교육 실시(연 중), 호국순례 수학여행(애국 벨트) 등 보훈역사 체험코스 개발 및 활용,

12) 위의 책, p. 13.

48개 학교 통일안보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초20, 중19, 고9), 보훈선양 및 나라사랑 시범학교(16개교) 지정·운영, 참전용사 및 원로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나라사랑교육교수단 등의 안보강사를 활용한 교육, 통일안보 교육 자료 발굴·보급, 교원의 통일안보교육 지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시수 확대 등을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통일교육이라는 용어가 통일안보교육으로 바뀌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14억 6백만 원(11년 기준)이다.

(나) 법무부

추진방향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북한의 실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를 삼고 있으며, 전국 50개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안보강연을 실시하고, 서울, 부산 등 6개의 소년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과 안보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1천5백만 원이 소요예산이다(11년 기준).

(다) 국방부

추진방향으로 장병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역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역장병, 예비군 국가관·안보관 및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통일교육원 지원 기관 및 단체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협의회, 지역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회 등이 공공기관의 통일교육과는 별개로 통일부의 보조금을 받아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매년 4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GONGO의 성격의 단체이다. 통일교육협의회 설립을 계기로 통일교육 실시단체 증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으며 통일교육 기회의 증대를 통해 연간 3만 명 수준의 통일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창립당시 72개 단체로 출범한 통교협은 회원수가 2007년 96개에서 09년 76단체, 11년 현재 65개 단체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 사유는 09년 통일부가 촛불단체 배제를 요구하는 등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통일부와 진보단체 간의 마찰로 인해 20개 단체가 탈퇴하였고, 그 외에는 활동부진, 통일교육 환경 악화 등에 따른다.

초기의 통교협의 특징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여 초기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진보단체가 탈퇴하고 한 쪽으로만 치우쳤을 뿐 아니라 통일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독자성을 상실하였고, 통일부의 통일교육 사업 대리집행자의 역할을 한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나) 지역 통일교육센터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통교협보다 출발은 늦게 2004년도에 최초로 2개 단체가 지정되어 2009년 10개, 2011년에는 19개로 증원되어 예산은 1,088백만 원(11년 기준)으로 통교협보다 2배가 넘는다.

통일교육위원협의회가 14개, 대학 통일교육연구소가 4개, 기타 1개 기관 등이 지정되었으나 실무력에 한계가 있는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대학 통일교육연구소가 대거 지정됨으로 인해 얼마만큼 해당 기관의 회원만이 아닌

지역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 통일교육위원/통일관

17개의 중앙 및 시·도에 걸쳐 1,000여 명의 통일교육위원을 위촉 활동케 하고 있으며 교육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통일교육위원 강사료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일교육위원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르고 1,000여 명 모두 통일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서울, 오두산통일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 등 전국 12개의 통일관이 있다.

(4) 민간단체 통일교육

독일통일, 소련의 붕괴, 한중 수교 등의 영향으로 냉전이 해소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간단체는 1990년 중반 북한바로알기, 인도적지원 등의 영향으로 통일교육에 눈을 돌리게 된다. 경실련통일협회, 자유총연맹, 좋은벗들, 어린이어깨동무, 통일교육문화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이 초기부터 꾸준하게 민간통일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이 정권의 향배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단체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또한 강사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도 달라 수강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다양한 방법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 통일교육은 2000년 이후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다양해지면서, 평화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일교육에 접목하기도 한다.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통일교

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통일교육보다는 다양하다. 주요민간단체의 통일교육현황은 다음과 같다.¹³⁾

(가) 경실련통일협회

1996년부터 매년 2회씩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민족화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와 토론,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경실련통일협회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대상 및 인원 | 내용 |
|---------------|----------------------------|---|
| 경실련통일포럼 | 시민, 기업인, 학생, NGO 실무자 등 40명 | 남북 당국간 접촉 등 현장경험이 있는 명사 중심 초청 4회 |
| 민족화해아카데미 | 시민, 기업인, 학생, NGO 실무자 등 50명 | 남북현황, 교류협력, 민족화해 등 전문가 초청 강의, 토론회, 기행 등 10강 |
| 지역순회 민족화해아카데미 | 시민, 기업인, 학생, NGO 실무자 등 30명 | 남북관계 현황 등 5강 및 1토론회 |

(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반정보 및 법률적 지식습득, 실무능력함양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초청 11강좌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50명의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자(기업인, 시민, 학생)로 구성되었다.

13) 2009년 또는 2010년 통일교육현황으로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 중심으로 정리.

(다) 세계평화여성연합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 계층 대상으로 강좌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표 8〉 세계평화여성연합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대상 및 인원 | 내용 |
|------------------|------------------|--|
| 여성통일꾼 배움터 | 어머니 | 북한실상, 문화, 핵문제, 남북관계, 탈북자 문제 등 7강좌, 1토론회 |
| 다문화 가정 3·8선을 넘어서 | 다문화 가정 어머니 및 후원자 | 다문화 여성들의 분단현실 인식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강의 및 현장체험 1일 |
| 다문화 10대들의 통일세상 | 다문화 가정 초등생 88명 | 통일퀴즈, 탈북대학생강의, 영상, 현장체험 |

(라) 어린이어깨동무

대학(원)생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들이 어린이들을 멘토 형식으로 교육과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다.

〈표 9〉 어린이어깨동무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대상 및 인원 | 내용 |
|---------------------|----------------|--|
| 북녘, 또 다른 내 친구가 사는 곳 | 7개 초등학교 1,532명 | 수업형 순회교육 영상, 사진, 그림을 활용, 강의 형이 아닌 참여형 프로그램 |
| 통일열음이 양성 프로그램 | 대학원생 50명 | 어린이들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접근을 위한 방법연구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강좌 8회, 심화 5회 |

| | | |
|------------------------------|------------------------|--|
| 열음이(대학원생)와 지킴이(어린이)의 평화마주이야기 | 멘토 형식의 대학원생과 어린이 (20명) | 열음이와 평화지킴이 연계프로그램, 청년층을 평화통일 교육의 강사자(멘토)로서 발굴 - 분단과 갈등구조 이해 - 남북한 상호 이해 - 평화적 통합의 비전 찾기 - 남북한 갈등해소 등의 주제로 멘토형식 |
| 통일·평화의 다른 이름 | 66명 | 1회당 11명씩 총 6회, 주교사, 보조교사 2~3인으로 임진각 등 현장체험 |

(마)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바로알기를 위해 탈북자 출신 5강, 지역순회 9강, 시민강좌 4강,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0〉 좋은벗들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대상 및 인원 | 내용 |
|-------------------------|-----------------------|---|
|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들의 이야기 | 일반시민 400명 | 서울지역 총 5강, 지역 9강으로 구성 북한사회의 의료실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이야기, 남한 정착기, 북한사회와 인권, 북한의 식량난과 여성들의 삶, 북한현실 바로 알기 등으로 구성 |
| 지역유관단체와 함께 여는 시민강좌 | | 지역내, 정부기관이나 타 단체와 연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륜스님 등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올바른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 시민강좌(4강) |
| 시민평화 기행 | 110명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시민 | 거제도 포로수용소, 천안 독립기념관 기행 |

(바) 통일교육문화원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발간 등 소외계층의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표 11〉 통일교육문화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대상 및 인원 | 내용 |
|----------------------|--------------|---|
| 지역아동센터 통일교육 | 초중고생 | 폭넓은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저소득 아동들의 생활공간인 지역아동센터 및 교회, 복지시설, 공부방 등을 찾아가 교육 11개 아동센터 |
| 초중 고등학교의 통일CA반 | 중학생 | 초중 고등학교의 통일CA반에 강사를 파견하여 간 수업을 한다. 특히 학습자의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제고시킨다(3개 학교 참여형 통일교육) |
| 교회통일교육 | | 4개 교회 |
| 전국청소년 통일논술토론회 | 고등학생 연 2회 | 글로벌리더를 키우는 과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스스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재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회는 통일문제를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하고 논술과 토론, 스피치(주장)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자 연 2회 방학을 이용해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장애인 통일교육 | | 통일논의에 있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장애인교육은 해를 거듭하며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오디오 교재 발간,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일여행 |

(사)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교육 담당자(교사)들에게 현 정부의 북한 및 통일정책 이해와 소외 지역의 청소년 통일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통일안보교실 강의, 남북한 사회체험, 토론이론 학습 및 통일안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2〉 한국자유총연맹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대상 및 인원 | 내용 |
|---------------|-------------------------|---|
| 1차, 2차 열린안보교실 | 초등학생 각 50명 총 100명 | 1박 2일 프로그램 남북한 사회체험(남북한 학교생활 비교, 북한음식 먹기) 통일안보교육, 이론학습 함께 만들어요 통일한국(참여식 수업) 명예 통일안보 이꿈이 위촉 |
| 2차 열린안보교실 | | |
| 통일안보담당자 포럼 | 통일안보교육 담당자 350명 | 정부 관계자 초청 강연 |

(아)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8회의 강연과 2회의 토론

시민, 대학생을 대상별로 강좌와 아카데미를 개설하며, 통일의식 설문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발성 통일교육을 하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민간단체 통일교육은 공공기관의 통일교육과 달리 진행되고 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수강 예정자가 일부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특정분야 집중교육,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 소외계층 대상교육,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 강좌와 토론, 현장체험 결합, 연속시리즈 강좌, 수강생이 강사가 되어 멘토식 결합 등을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통일교육보다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 방법

〈표 13〉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대상 및 인원 | 내용 |
|-----------|---------------|---|
| 금요시민강좌 | 대학생, 시민 70명 |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 초청 7강좌 |
| 대학생통일아카데미 | 대학생 20명 | 6강, 1현장체험, 1대토론회 |
| 금요통일포럼 | 대학생, 시민 70명 | 핵문제, 정상회담 등 4주제발표, 2토론회 |
| 통일문화기행 | 대학생 및 일반인 80명 | 강원, 경기 분단현장 탐방 및 토론, 강연 1박2일 |
| 통일의식 설문조사 | 대학생 1,000여명 | 면접원이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고 현장에서 바로 설문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실시 |

에 있어서도 시청각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기자재(통일지도, 퀴즈, 윷, 신문, 먹을거리, 만들기, 토론하여 기록하기, 놀이기구) 등을 활용하여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민간단체 사회통일교육은 공공기관보다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대상은 성인보다는 청소년, 대학생 등에 편중되어 있다.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성인대상의 통일교육은 1회성 강연, 세미나, 토론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 공공기관 통일교육 비용¹⁴⁾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예산은 연간 15,544,331천 원 규모다.

14) 통일교육원, 『2011 통일교육기본계획』 (서울: 통일교육원, 2011), pp. 20~113. 통일부가 매년 취합 발간하는 통일교육계획서는 최근 자료의 경우 행안부 등 일부 정부 부서와 민주평통, 지자체의 통계가 생략된 관계로 통일교육비용은 이보다 많다.

〈표 14〉 정부 및 시도 교육청 통일교육 예산

| 기관 | 통일교육 예산 |
|-------|---|
| 통일부 | 88억 7천7백만 원 사회통일교육: 47억 원 학교통일교육: 41억 7천7백만 원 |
| 교과부 | 1,406,000천 원 |
| 법무부 | 15,000천 원 |
| 국방부 | 2,968,600천 원(2007년 기준) |
| 시도교육청 | 2,277,731천 원 |
| 계 | 15,544,331천 원 |

물론 여기에 민주평통과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예산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민 1인당 통일교육비용은 320원으로 극히 적은수준이고, 전체적인 통일교육 예산 또한 많지 않다.

통일교육 비용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볼 때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일비용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교육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

1. 통일교육 지침서 및 기본계획서상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정권에 따라 반공교육 → 통일안보교육 → 통일교육 → 통일안보교육 순으로 통일교육의 목표 및 기본계획이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 환경 변화에도 영향이 있지만 정권에 따른 변화가 주된 요인인 것이다.

통일교육 → 통일안보교육 과정에서 보듯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이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한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통일교육의 6가지 과제 중 ‘평화외교 함양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이 삭제돼 있다.¹⁵⁾ 또한 『통일교육지침서』는 과거 남북정상회담을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기술하다가 비판적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다. 기본적으로 안보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통일교육, 통일을 대비하는 화해협력, 평화교육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통일교육 강사들의 입지도 그만큼 줄어들고 퇴행하기 마련이다.

『통일교육지침서』가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활용되지 않는 이유로 지침서 내용이 교육현장과 괴리가 있어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교수자 자신의 취향과 의지에 따라 참고해도 되고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지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¹⁶⁾ 뿐만 아니라 지침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15) 『연합뉴스』, 2009년 7월 22일.

통일교육에 임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일부 통일교육 강사들 사이에 나타나는 시대에 역행하는 통일교육은 교육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방향을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안보의식을 높여나가는 교육(통일부 2011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 중)”으로 잡아 안보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정부통일정책 홍보교육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일부기관에서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민주평통은 예산을 볼모로 특정성향의 ‘통일전문가 강사명부’를 작성하여 이 중에서 강사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¹⁶⁾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듯 『통일교육지침서』의 기본방향이 수시로 바뀔 경우 강사나 수강생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통일교육 추진체계’상 통일부는 교과부 등 유관 부처들의 협조를 얻어 통일교육정책을 수립·종합 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통일교육지침법에서 삭제됨(2008년 12월)으로 조정기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있다.

2. 사회통일교육 문제점

『통일교육지침서』상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회통일교육 문제점으로서도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통일교육 이수자에 특별한 메리트가 없이는 수강생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

16) 차우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 개선 연구,”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38회 시민학술포럼 발표문, 2003.11.13), p. 42.

17) 『통일뉴스』, 2009년 3월 6일.

른 이유가 있겠지만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동일시하여 안보현장 견학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통일교육이 지나친 국가주도의 통일안보교육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부의 지역통일교육센터는 19개이며 이 중 14개는 통일교육위원회의 회가 담당하고 4개는 대학통일교육협의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실무력이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 지역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통일교육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로 구성된 (가칭) OO지역통일협의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보다 다양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만 민간단체는 재정적 한계로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어렵다. 통일교육은 정부의 독점만으로는 곤란하며 민간합동형 통일교육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통일교육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통일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GONGO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는 창립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설립목적(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및 상호 협력증진)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사회단체의 통일교육을 지도·조정하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분배하고, 그 집행만 감독하는 정부보조금 집행 대행기관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회원단체의 협의·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회통일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등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통일교육체제는 정부주도형의 독점적 지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환경의 변화, 시민의식의

성숙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현재 통일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상당부분을 NGO단체나 GONGO 단체에 이관하고 정부는 측면지원 및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 보다 폭넓게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해결방안 및 과제

1. 정권과 무관한 통일교육상 정립

정권의 향배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표가 달라질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과 불신, 무관심을 초래한다. 지금의 통일교육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통일교육 목표가 변화하게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교육상을 정립해야 한다. 즉, 남북이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확보에 대한 신념 및 가치관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하며 통일환경과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통일교육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을 구분하여야 한다. 최근의 통일교육은 안보교육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보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교육은 위축되고 남북 간 화해·협력을 말하기 어렵고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이를 혼재하지 말고 안보교육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별도로 시

행하면 된다.

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가.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강화

통일교육의 유형은 대체로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민관분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주도형은 과거의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형태다. 정부주도형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왜곡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관계로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 운영방향을 지닐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¹⁸⁾

통일부는 “기존 정책홍보 중심에서 실질적인 통합준비로 교육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기존 여론지도층 중심에서 전 국민적으로 통일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기존 정부(통일부) 직접교육에서 민간(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단체)을 통한 교육으로 전환, 정부는 이를 측면 지원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추진 한다.”고 통일교육지원법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통일부는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일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민간차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¹⁹⁾ 즉, 정책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통인 교육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통일교육

18)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248.

19)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30년사』(서울: 통일교육원, 2002), p. 38.

〈표 15〉 사회통일교육 실시에 대한 견해(일부 미응답)²⁰⁾

| 정부만 실시 | 정부+민간 협력적 실시 | 정부의 통일교육 기능을 대폭 민간에 이양 | 민간단체가 전적으로 실시 | 계 |
|--------|-----------------|---------------------------|------------------|------|
| 0 | 65명 | 31명 | 2명 | 74명 |
| 0 | 66.3% | 31.6% | 2.1% | 100% |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지금은 민관분담형의 통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본격적인 통일교육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통일교육협의회가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통일교육협의회는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성, 효과의 효율성에 따른 거버넌스의 성립조건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 정부와 민간간의 통일교육의 거버넌스의 확산이 필요하다.

나. 통일교육지원법 개선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은 매우 소극적인 법이다. 통일교육지원법이 ‘지원법’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의 체계가 ‘~할 수 있다’는 식의 권유형에서 ‘~하여야 한다’는 식의 의무조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원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최대의 무게 중심을 실어주어야 한다.

김창환 박사는 독일의 경우를 사례로 우리의 통일교육지원법과 관련하여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통일 전 서독은 우리의 통일교육지원법과 같은 통일교육법을 갖고 있지

20) 이영동,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않았지만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교육기관과 관련한 법이 있었고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법이나 규정은 ‘통일교육을 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식의 구속력 있는 강제규정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 전 서독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이해하고 시행하였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이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통일 전 서독정부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자발적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활용하였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 등 중심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요청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²¹⁾

다.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검증된 외부기관에서 사회통일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을 인정해주고, 중·고생들의 통일교육 수강자들에게 봉사활동시간 인정,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징벌인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받은 사람들에게 일정시간 사회통일교육으로 대체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고 통일교육 수강을 촉진할 것이다.

통일교육 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통일교육지원법에서

21) 김창환 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연구』, p. 24, (www.unikorea.go.kr)(검색일: 2004년 4월 19일).

〈표 16〉 통일교육지원법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일부 미응답)²²⁾

| 학교통일교육 | 지역통일교육센터 | 교육이수자에게 인센티브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 공공기관 통일교육 | 고발조항 폐지 | 계 |
|--------|----------|--------------|-------------|-----------|---------|------|
| 22명 | 12명 | 23명 | 43명 | 12명 | 2명 | 114명 |
| 19.3% | 10.5% | 20.2% | 37.7% | 10.5% | 1.8% | 100% |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들고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은 자칫하면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이라는 실정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법 제11조 통일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것은 자유스러운 통일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경연대회, 통일교육 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등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협의회의 통일교육사례발표는 한계는 있지만 좋은 예라고 하겠다.

합리적인 강사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일부 민주평통 및 일부 교육청에서 특정 강사료를 고집하고 있다. 예산을 불모로 특정 강사료를 요구할 경우 사회통일교육은 물론이고 학교통일교육도 퇴행되고 관심이 멀어질 것이다.

22) 위의 글, p. 131.

3. 사회통일교육 체계의 변화

가.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분리

작년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이후 안보교육이 강화되었다. 분단국가에서 안보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 안보교육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대처해서는 곤란하다.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안보교육을 강조할 경우 남북의 회해나, 협력, 인도적 지원을 말하기 어렵다. 어정쩡하게 통일안보교육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을 분리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통일부의 통일교육 기능의 재고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교육 30년사』에서 밝혔듯이(기존 정책홍보 중심에서 실질적인 통합준비로 교육내용을 보완) 통일부의 통일교육은 정책홍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 쪽이 강하다. 이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통일교육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통일부의 통일교육이 정권의 향배와 무관한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울시 통일교육원을 통한 교육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3의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다. 제3의 기관에서 통일교육 담당

통일교육원의 주기능을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기능으로 하되 통일교육은

(가칭)사회통일교육센터(통일교육진흥원)가 담당한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과의 관계는 협의·조정을 하되 독자적 지위를 갖는다. 새로운 기구는 보다 객관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장을 임명하고 위원들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임명하게 된다. 사회통일교육센터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며 운영은 민간에서 맡아 진행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중앙과 지방의 전국적 통일교육기관으로 재정적인 부분은 정부예산외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통일교육원과의 관계는 독립구조로서 위상을 갖는다.

4. 무관심 해소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전제조건은 통일문제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국민의 관심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원, 학계, 통일교육단체 간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몇 번의 모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했다. 회의를 체계적으로 정례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 콘텐츠, 활성화 방안과 통일교육 진흥을 함께 연구할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인 ‘통일교육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할 때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보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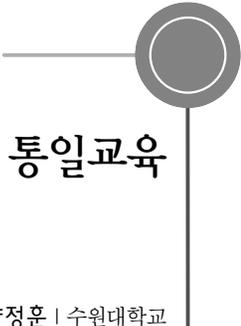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창환 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연구』. 서울: 통일부, 2002.
- 오기성 외. 『통일교육 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부, 2003.
- 통일교육원. 『2011 통일교육운영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 _____. 『사회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 _____. 『통일교육원 30년사』. 서울: 통일교육원, 2002
- _____.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통일부. 『통일교육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2011.
-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2. 논문

- 이영동.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차우규. “통일교육 역사와 현황 그리고 과제.” 통일교육협회 청소년분과 워크숍 자료집. 2004.
- _____.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 개선 연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38회 시민학술포럼 발표문, 2003.11.13.



가상공간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양정훈 | 수원대학교

1. 서론

남북관계의 현안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둘러싸여 있는 양국의 문제들은 풀리지 않을 매듭처럼 어렵게 꼬여 있다. 더불어 이질화되어 있는 현상을 그대로 안고서 가시적으로 제도적인 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더라도 정작에 내적 통합을 성취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학문적, 정책적 접근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통일교육의 내실화다. 그동안 통일교육 방법에 있어 인쇄와 칠판문화에서 벗어나길 싫어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는 반면, 컴퓨터를 활

용한 온라인 교육을 우선시 하는 분야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주입식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쓰이는 분야도 있다. 과거 주입식 교육방법이 오늘날 통일교육에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 기성세대에게는 효율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미래를 책임질 정보화 시대의 주역들에게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진다. 시대적 변화를 봤을 때도 미래교육에는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이다. 빠른 시간 내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고 이해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학습효과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교육을 이러닝이라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교육을 뛰어넘은 가상세계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기반 토대 위에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 현재에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관심이 있는 일부 지도자나 시민들에게만 이루어지고, 대다수 국민이나 남북문제를 주관하는 공직자들 대상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서로를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곧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통일정책 또한 교육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알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은 새로운 교육방법에 의해 일정부분은 통일과 통일을 위한 정부정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유는 북한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통일교육 방법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통일교육이 국가의 모든 분야와 일반 국민들에게도 올바로 인식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효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배워왔던

이러닝 통일교육을 넘어 감성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즉, 3차원 가상세계의 교육으로 기존 온라인 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제시되어 온 교육방법이다. 동시적 커뮤니케이션, 3차원 그래픽과 아바타를 활용한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다양한 사이버 공간의 교육적 연구방법이다. 인터넷 세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30개 이상의 가상세계들이 온라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80%가 다양한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Jarmon, Traphagan, Mayrath & Trivedi, 2009). 이러한 가상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러닝을 통한 통일교육

이러닝(e-learning)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컴퓨터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분산학습(distributed learning)을 추구하는 교육유형이다. 그리고 이러닝 체제는 기본적으로 개방형 교육체제의 성격을 지니므로써 누구든지 특별한 조건이 없이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결국 앞으로의 이러닝 체제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임의접근(random access)이 가능한 교육체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이러닝을 통한 일반교육

2000년부터 여러 부처에서 사이버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학습할 수 있다. 누구나 필요한 교과목을 신청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과정의 일부를 이러닝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Blended Learning, 실무·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한 미니 이러닝 전문과정 등을 통한 이러닝도 실시되고 있다. 이러닝 과정은 학습과 직무의 연계 및 병행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 기본소양 및 능력개발, 그리고 변화대응 능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러닝은 교육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스스로의 학습동기를 가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 및 교육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학습 커뮤니티 구성으로 요약된다(노일순, 2002: 39~41).

현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이러닝 과정이 있다. 이들의 교육과정을 보면 법제실무, 인사실무, 법·제도, 국회실무, 민원실무, 회계실무, 행정실무, 행정서비스 마케팅기획, 리더십 향상 등 변화관리 대응역량,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토론, 한글맞춤법,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 기본소양,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등 약 65개 정도이며 과정별로 수강할 수 있다.

2. 이러닝을 통한 통일교육

양현모(2000)는 2000년 당시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대부분 통일의 당위성 인식(분단의 배경과 폐해, 그리고 평화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 북한의 변화가능성 및 북한의 대남전략), 평화통일환경의 조성(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대북포용 정책과 국가안보,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관계의 현황),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및 분단국 통일의 교훈(통일사회의 미래상,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민주복지사회의 구현) 등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교육 내지는 소양교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현재 연간 계획으로 이러닝공간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통일교육과정이다(〈표 1〉 참조).¹⁾ 통일교육원은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이러닝 통일교육을 확대하여 이러닝 통일교육 상시 학습과정을 개설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2008년부터 공직자 및 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 이러닝 통일교육은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훈련 수요증대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8년도의 이러닝 통일교육과정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²⁾ 우선, 교육과정의 목표는 ‘급변하는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대비 직무역량 강화’와 ‘상시학습제도를 활용하여 전(全) 대북정책 이해도 제고’이다. 교육대상은 사회지도자 및 공직자이며, 교육과정은 〈표 1〉의 4개 과정이다. 수강인원은 각 과정당 100명 내외(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상의 이해 및 실무는 35명 내외), 그리고 매월 1회 4개 과정을 2주간(연간 9회) 교육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8년도 이러닝 통일교육과정은 2000년의 통일행정요원 교과과정과 비교할 때, 북한의 사회현실을 이해하고 장래의 체제 통합에 대비하는 차원뿐 아니라 실무적인 남북협상의 이해와 대응책을 보다 강조

1)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의 제반 규칙 즉, 학습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학사관리와 운영 요원에 대한 규정.

2)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검색일: 2009년 3월 2일) 요약.

〈표 1〉 2008년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교육과정

| 과정명 | 북한의 사회·문화와 남북통합의 이해 | 북한의 정치·경제 | 통일문제의 이해 | 남북협상의 이해 및 실무 |
|----------|---|---|--|--|
| 학습 목표 | 북한주민의 생활과 가치관을 알아보고, 북한의 문화·예술 등을 학습하며, 남북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과제와 전망 등을 학습 | 주체사상과 권력구조 등 정치체제를 학습하고, 북한의 외교실태 등을 알아보며 북한의 군사력, 북한 경제의 현황과 개혁·개방 등 향후 전망 예측 | 통일의 개념과 편익비용,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한반도정책 및 정부의 통일정책 등을 이해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 학습 | 남북협상의 의미를 알아보고 실무역량을 강화 |
| 교육 과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 2. 북한주민 생활의 변화 및 문제 3.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1) 4.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2) 5. 북한의 음악, 미술, 영화(1) 6. 북한의 음악, 미술, 영화(2) 7. 통합의 의의와 필요성, 통합이론과 과제 8. 남북한 통합의 주요 쟁점과 과제 9. 남북한 사회통합의 의미와 중요성 10. 새터민 적응 실태와 시사점 11. 남북한 사회통합의 방향과 과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2. 북한정치체제와 권력구조 3. 김정일 정권 권력구조와 통치이념 4.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와 대응 5. 북한 외교실태 6.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의 군사력 7. 북한의 군사전략 평가 및 전망 8. 북한 경제현황 9.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10.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과 체제 11. 대외과학기술협력 문제점 및 전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일의 개념과 논리 2. 통일의 편익과 비용 3. 통일환경과 통일의 준비과제 4. 국제적 환경변화 5. 주변국의 한반도정책(1) 6. 주변국의 한반도정책(2) 7. 세계화 시대의 통일문제 인식 8. 통일 접근법과 국가 비전 9.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0.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11. 민족공동체 기반 조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상의 기본 개념 2. 협상 전략 및 전술 3. 남북협상의 특수성 4. 북한의 협상 행태 5. 남북회담의 역사와 개최현황 6. 남북 합의서 체결현황 및 주요 남북합의서 7. 남북 협상 주요 사례 및 쟁점 8. 남북회담 업무의 실무 |

출처: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 검색일: 2009년 3월 2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는 강좌가 추가되었다.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이 북한의 사회·문화와 남북통합의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 통일문제의 이해 그리고 남북협상의 이해 및 실무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전반적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접근방법들을 적절하게 배분한 것이다. 이 중 남북협상의 기본개념, 전략전술 및 남북협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남북회담의 역사, 현황 및 주요 남북합의서 학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협상의 이해 및 실무과정은 다른 과정들에 비하여 전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 과정은 애초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고안된 것으로 남북협상의 주요 사례와 쟁점 및 회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숙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수강생의 규모도 약 1/3이며 학습방법도 인터넷 온라인이 아닌 코스웨어에 의한 자율학습이다.

과정의 구성도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과목당 시차 수가 1시간에 지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급, 중급, 심화학습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과목 구성의 개선점을 지적하면, 우선 남북주민 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사회·문화와 남북통합의 이해 과정에 북한전통과 관습, 그리고 기타 다양한 사회상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이 가져다 줄 실질적 이익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정치·경제 과정에서는 실제 정치 및 군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는데, 북한 경제사, 경제원리, 경제현황 등의 과목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통일문제의 이해 과정에서는 다른 분단국들의 통일 사례가 더 소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와 교육을 다루는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일부 선동주의적 정치가 혹은 선정주의적 언론에 의해 대북정책의 노선에서 정치적 이념의 상충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임기제 정부를 갖는 민주주의 체제인 관계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남남갈등의 해소나 남북화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상의 이해 및 실무과정에서는 수준별, 직급별 교육과목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집단별 속성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함이 지적되고 있다.

III. 이러닝 콘텐츠 분석에 따른 통일교육

1. 이러닝 콘텐츠 유형 분석

가. 학습 유형

이러닝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 번째, 동영상, 음성 자료 등을 이용한 교육자 중심의 설명학습: 언어를 통한 교수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교수방법이다. 교육자가 주요 역할을 하고 학생은 강의를 듣거나 노트를 작성한다.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 화면에 제시된 글, 그림, 애니메이션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학습자 단독으로 진행되는 학습: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학습자가 혼자 학습한

후 제공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학습 형태이다.

세 번째, 게임형식으로 이러닝학습 콘텐츠를 설계한 게임형: 게임의 요소인 흥미, 도전감, 달성목표, 성취요소, 경쟁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수업형태이다. 오락적인 요소와 교육적인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네 번째, 모의상황 실습, 과학실험 등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수업을 설계한 시뮬레이션형: 실험실습이 필요한 수업이나 상황이해를 위하여 모의적 상황의 설정이 필요한 수업에서 실제와 유사한 가상적 상황을 제시한 후 학습자가 이를 경험하거나 학습하도록 하는 학습 형태이다.

다섯 번째, 어떤 주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조사하는 탐구조사 학습: 탐구할 문제나 주제에 대하여 탐구계획을 세우고, 가설을 설정하며 필요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학습을 말한다.

여섯 번째, 게시판이나 채팅을 사용한 토론학습: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정보나 아이디어, 의견 등을 나누는 토론활동을 통한 학습이다.

일곱 번째, 학생들이 문제나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제중심 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 문제중심 학습은 교육자에 의해 제시되거나 학습자들이 설정한 문제 또는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소그룹을 편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작성하는 학습자 주도학습을 말한다.

여덟 번째, 문제풀이를 주로 하는 학습: 자격증 과정이나 기타 시험대비형 수업, 또는 문제풀이의 반복연습이 적용되는 수업형태이다. 학습자에 대한 진단평가가 내려진 후 수준에 적합한 문제를 제공받아 풀이한 후 교육자 혹은 튜터에게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아홉 번째, 전문가와 질의응답 등 학습자와 전문가 간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학습: 프로젝트기반 학습, 논문작성 수업, 실습중심 수업 등 전문가의 조언이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학습자가 비실시간 및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의 측면에서 전문가의 학습조언 및 도움을 받는 학습 형태이다.

열 번째, 학습자-학습자 간 동료교육 학습: 지식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심화보충형 학습에서 동료 간 교육학습이 필요하거나 유용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를 돕고 가르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다.

열한 번째, 이러닝 체험활동 학습: 직접 경험이 필요한 학습상황(이론적 원리의 체득 등을 위하여 실제연습이 필요한 상황)이나, 학습자가 모의상황을 통하여 이를 이러닝상에서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학습 형태이다.

이러한 이러닝 콘텐츠 유형은 분류를 위하여 구분된 것으로 실제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되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콘텐츠 유형 분석

이러닝 기관들에 의해 운영된 이러닝의 콘텐츠를 분석해 보면 콘텐츠의 유형은 다섯 가지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크로마동영상+html은 일반영상 강의 모두를 교수와 마주앉아 교육을 받는 느낌을 주며,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플래시 html 등을 이용하여 듣고 볼 수 있는 삼위일체형 강의를 구현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Top-Left-Right-Bottom형으로 각 원격대학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이아웃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즉, 주 메뉴를 제외한 콘텐츠 관

런 메뉴를 한 공간에 위치하게 하여 사용자 위주의 화면을 구성하였다. 이러닝을 실행하는 기관 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인 특징으로 어느 강의 콘텐츠에서나 전체 강의시간을 표시하였고 타임 바와 인덱스를 통해 해당 부분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동영상과 연결된 교안부분을 영상에 관계없이 클릭만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버튼을 함께 달아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넓혀주고 있다. 이외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간반복과 이어듣기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호작용과 관련 앞뒤에 플래시 등을 이용하여 웹 형식의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팝업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부가기능이 구현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칠판동영상+html은 교육자의 강의 편의와 학습자의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백묵을 이용한 칠판강의와 교안이 연결된 강의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역시 Top-Left-Right-Bottom 형으로 크로마 영상 대신 칠판영상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각 이러닝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이아웃이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칠판부분의 영상이 100%와 200%의 수시선택이 가능하며 한걸음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영상부분과 웹부분의 위치전환도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즉 강의를 듣는 중에 교수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200% 버튼을 누르면 교안부분까지 영상이 끊김 없이 확대되었다가, 100%를 선택하면 다시 이전상태로 복귀되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변형된 형태도 사용되고 있다.

셋째, 전자칠판은 강의자가 화면에 들어가 펜마우스를 이용하여 중요부분을 강조하는 강좌로써 학습의 중요 부분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강의 방식이다. 이 유형은 Top-Left-Main-Bottom형의 변형으로 일부 이러닝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넷째, WBI(web-based instruction)는 학습이 일어나거나 조장되는 유의미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웹의 특성과 웹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개하는 하이퍼미디어 문자를 비롯하여 그림, 음성, 비디오 등의 매체를 서로 결합시켜 다룰 수 있는 제작방식을 의미한다. 즉, 이 강좌는 영상이 주요 부분만 나오고 대부분 준거프레임 별로 음성강의로 이루어지며, 프레임의 이동에는 항상 학습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크로마 동영상의 강의 형식과 강의진행 화면 캡처방식을 혼합한 강의 방식은 학습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주로 영상 방식과 플래시를 이용한 WBI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이 유형은 실습 가미 형태로 이론을 듣고 직접 사례를 실현해 보는 IT 교과목의 주류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용할 수 있는 교과목에 유용하다. 이외에도 크로마 동영상+칠관, 또는 WBI 혼합 유형 등이 있다.

2. 학습자 특성분석

구교정(2005)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2003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정보화 원격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원 983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적용하여 원격교육의 효과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① 정보화 원격교육의 효과성은 하위영역별로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자기개발기여도가 5점 만점에 3.58로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도(3.36), 현장적용도(3.18) 순으로 나타났다. ② 정보화 원격교육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 수준과 교육기관 수준으로 나누어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한 결과, 효과성에 매개역할을 하는 학습자의 학습참여도는 교육기관 간 차이가 16.4%, 동일 교육기간 내에서 학습자 개인 간 차이가 83.6%로 나타났다. ③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여 원격교육 효과성 관련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인 학습참여도를 통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 요인, 운영자 요인, 학습참여도 요인이 원격교육 효과성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학습자 요인은 학습참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원격교육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호(2005)는 웹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에서 학습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습자의 태도와 교육의 성과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선호도 분석, 독립변수(강의요인, 상호작용, 시스템 요인), 매개변수(학습자 태도), 종속변수(교육성과) 등의 31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웹기반 원격교육(멀티미디어 정보론, 경영 정보론)을 받고 있는 C대학의 대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① 강의 요인(강의 내용, 강의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을수록 학습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② 상호작용(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이 활발할수록 학습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③ 시스템요인(접속 용이성, 이용 편리성, 안정성)이 좋을수록 학습자는 원격강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④ 학습자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원격강의의 효과는 높아진다. 원격교육의 성과는 학습자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운(2009)의 연구는 교수매체를 중심으로 분류한 5가지 유형(크로마 유형, 칠관 유형, 전자칠관 유형, WBI 유형, 혼합 유형)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만족도가 각각의 콘텐츠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원격대학 성인학습자 42,25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① 크로마 유형의 경우 여러 부문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사회과학 계열과 경상 계열의 학습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인문·교양 계열과 IT 계열의 20대 이하와 30대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먼저 학문의 특성으로써 교수자의 영상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는 크로마 유형의 경우 실습과 학습자 주도학습이 강한 IT 계열의 경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연령대별 특성으로써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에 길들여진 20대 이하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② 칠판 유형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복지 계열과 인문·교양 계열, 40대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모든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던 20대 이하 층의 유형별 만족도에서 혼합유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IT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칠판방식은 칠판영상이 주가 되어 중심내용이 보조자료로써 활용되는 형태로 학습자로 하여금 교수자의 강의에 의존시키는 경향이 커서 수강은 쉬우나, 학습자 스스로가 이해와 정리에 애로가 발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③ 전자칠판 유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IT 계열은 학문의 특성상 참여자가 없었다. 특히 사회복지 계열과 20~3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경상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40대의 사회과학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연령대별 만족도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의 40~50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 계열의 경우는 판서강의에 익숙지 못한 학습자 층이 칠

관 유형과 비교하여 불편한 점을 드러낸 현상이라 보인다. ④ 혼합유형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문·교양 계열과 IT 계열, 40대와 50대 이상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모든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던 20대 이하 층의 유형별 만족도에서 칠판유형과 함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사회과학 계열은 학문의 특성상 참여자가 없었으며, 사회복지 계열과 30대 층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⑤ WBI 유형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상 계열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사회과학 계열은 학문의 특성상 참여자가 없었으며, IT 계열과 인문·교양 계열,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교수자의 음성과 프레임이 추가 되어 이루어지는 WBI 유형의 경우 웹상에서 다양한 멀티 요소에 길들여진 20대 이하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가상세계의 통일교육

1. 가상세계 콘텐츠 개발을 통한 통일교육

우리가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따른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콘텐츠를 학습할 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만큼 학습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콘텐츠를 통한 통일교육 승패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콘텐츠의 이

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가상세계의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통일교육 현실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3차원 가상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출된 가상적인 환경내에서 수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아바타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새로운 컴퓨터 매개체(김남주, 2007),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그래픽으로 제작된 가상공간에서 개인용 아바타를 통해 다중참여자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인위적으로 설계된 환경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김사훈, 박사옥, 2010).

가상세계는 학습자에게 비디오 게임과 시뮬레이션 같은 환경을 제공하지만, 그에 수반하는 즐거움 못지않은 교육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원격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중심학습 등의 가능성은 가상세계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가상세계의 활용은 면대면 수업에서의 수업방식을 그대로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오는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로 변형될 수 있는 이러닝을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한호(2008)는 본래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기 위한 매개체로 설계된 이러닝이 실제로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를 컴퓨터로 변형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가상세계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수업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교수자는 수업내용의 전달자 대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Zheng, 2006).

그러므로 가상세계는 동시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이러닝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이러닝은 비동시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응답이 지체되기도 하고 학습자가 한꺼번에 메시지를 탑재함으로써 일

방향적 일련의 독백형태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Pawn, Paulus, Yalcin & Chang, 2003). 자신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에만 관심을 보일 뿐 다른 학습자의 질의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문제 등이 나타났다(이은주, 2009). 이에 반해 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교육은 실시간의 다중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김사훈, 박상욱, 2010; de Freitas & Veletsianos, 2010; Veletsianos, 2009; Von Der Emde, Schneider & Kotter, 2001).

가상세계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상세계가 기존의 이러닝이 교육환경에 제공한 것을 보완하며 통일교육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 활용방향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상세계를 활용한 교육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의 경우 가상세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가상세계가 게임으로 연결하는 편견으로 강한 거부감과 교육매체로 가상세계의 활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김사훈, 박상욱, 2010)가 가상세계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유발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가상세계가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간과한 제도에서도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게임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별하는 현실에서 가상세계가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는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될 가능성도 내포한다(송승근, 2007). 반면 게임으로 판단된다면 전체이용자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4가지의 유연한 등급을 가질 수 있어 놀이적 측면을 강조하는 가상세계와 게임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상세계를 통한 통일교육용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 교육효과는 더욱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상세계의 콘텐츠를 보면,

첫째, 가상세계의 교육을 일반 교육 수업에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가상세계의 활동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함이다. 공공기간이나 학교 등에서 가상세계 통일교육 강좌를 설계하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만 교육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기존 이러닝과 차별화된 환경으로서 새로운 교육방법의 하나이다.

둘째, 가상세계 체험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가상세계는 통신공간, 가상세계 공간, 행위공간의 다양한 활용양태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적 연구의 대부분은 기존에 설계된 알파한 체험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상세계 속에서 대상 언어를 사용하여 북한의 역사 탐방과 음식문화, 그리고 금강산과 백두산 등 문화유산 등을 동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들을 단순히 컴퓨터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적용시켜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2. 스마트폰을 활용한 통일교육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및 장치들이 발달하면서 컴퓨팅 환경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보다 경량, 소형화 되어 PC 기반의 컴퓨팅 환경에서 모바일 컴퓨팅 환경으로 사용자들의 영역을 급속하게 옮기고 있다. 또한 급속하게 발달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능으로 인하여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³⁾이 개발·등장하고 있고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 애플리케이션의 철자는 우선, Application, 즉, 뭔가를 적용하고, 응용한 그런 것들을 말하

이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고속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기로 발전하고 있으며(정준구, 장기진, 2010),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발달로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무선데이터 통신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TV, 광고,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스마트폰을 인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 모바일 단말기가 대세이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의 큰 장점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통일교육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관련 애플리케이션, 음악, 영상, 게임 등 멀티미디어 등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로 확장시켜 주고 있듯이 통일교육에 따른 콘텐츠 개발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본다.

V. 통일교육의 활용도

앞 장에서의 글이 통일교육을 위한 시대적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방법론적 입장을 고찰해 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적인 면을 보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각급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

는 뜻이다. 컴퓨터나 전자기기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일종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래서 아이폰을 켜보면 알겠지만, 화면에는 하나하나의 아이콘들이 보인다. 이것 하나 하나가 전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줄여 말하면 '앱'이라고도 한다.

으며, 이에 따라 많은 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각종 통일교육을 받고 있다(정숙경 외, 2005: 49).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통일교육의 목표, 북한사회의 이해, 남북통합의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협상의 이해 등으로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교육은 북한 및 통일의 이해와 남북협상의 실무 등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체계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 통일교육은 교육내용과 방법론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교육내용을 보면, 정권의 성격에 따라 통일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진다.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개인의 가치관 혹은 사상에 따라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비록 구체적인 사실의 관찰에 의존하는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이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북한 및 통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 현재 기성세대는 본인의 경험과 신념에 따라 남북관계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원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존재하고 각기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남한 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습자가 전문가가 아닐 경우 이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 수립에 있어서의 지나친 혼란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하였지만, 통일교육은 여전히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른 분야보다 정치 혹은 경제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암묵적으로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북한체제의 소개와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왔다. 통일교육의 주체가 정부인 관계로 공급자 중심의 이러한 교육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사회, 문화, 자연, 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시각의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식과 가치관의 단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통일교육은 다양한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개선하여야 할 마지막 점은 교육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는 데 치중하지 말고 남북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여러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양현모, 2000: 117~119). 현재 통일교육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과 큰 차이가 없이 소양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전문적 내용이 없어 화해·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수요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정세, 안보 등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기본적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한 정보, 대북교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진단 및 이의 해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북한의 경제와 무역 관련단체나 회사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법률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을 보면,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며 각 시·도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통일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들이 북한 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들은 통일부와 협조하여 구체적으로 대북접촉을 시도하고자 계획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북한과의 교류가 소원해지는 반복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따른 방향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을 염두해 둘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분야는 교육의 신속성이다. 남북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은 새로운 내용을 신속하게 다루어야 한다. 비단 통일교육뿐 아니라 모든 정보화 시대의 교육은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일교육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전달은 여전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이고 또 주민들마저 언론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북한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한된 북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시스템의 설계는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상공간, 사이버 공간 등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수록, 기본적인 필수학습과 심화학습의 조화, 학습자의 개인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대규모의 교육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교육, 신속한 정보의 전달 등은 기존의 강의실 위주의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VI. 결론

가상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일교육이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교육 방법을 대체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가상공간을 활용한 이러닝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발전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종래와 같이 교수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뛰어 넘어 학습자가 교육자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보급은 강의실이라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했고 한 단계 뛰어 넘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환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보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한국에서도 학교 교육이나 사기업체 임직원의 교육, 그리고 공공기관의 교육이 이러닝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기법이나 내용도 풍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더불어 이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기관의 직무역량 강화 및 지도자들의 올바른 통일관 등을 위해 통일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통일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활용이 가능한 이러닝 콘텐츠는 통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제환경변화와 최근 한반도 정세,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방향, 대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통일교육 대상 확대 등 16개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대상과 시간 그리고 교육과정은 남북 체제 통합과 통일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통일교육이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과 마찬가지로 주로 통일과정을 다루고 있어 앞으로는 통일이

된 이후도 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지금보다 신속하게 합류할 통일교육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러닝 통일교육과 가상세계의 콘텐츠 개발을 통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가장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다.

끝으로,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먼저 현실에 적합하고 내일의 교육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피교육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 또한 직접, 간접으로 교육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통일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교육내용이 결정되는 구조였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교육내용이 아닌 기존의 이념과 체제를 홍보하고 전달하던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은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내용을 편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야 편익 대비 교육성과의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다양성, 신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도 가상세계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이러닝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자와 학습자의 교류,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다양한 학습도구의 제공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가상공간, 이러닝공간을 활용한 교육은 시대의 요구이자 교육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한 교육이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_____. 『통일문제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Jarmon, L., Traphagan, T., Mayrath, M., & Trivei, A. *Virtual world teaching, experiential learning, and assessment: A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course in Second Life*. Computers & Education, 53. 2009.

Pawn, F., Paulus, T. M., Yalcin, S., & Chang, C. F. *Online learning: Patterns of engagement and interaction among in-service teacher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7(3). 2003.

Zheng, D. *Affordances of 3D virtual environments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An ecological psychologic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2006.

2. 논문

권기성·최진석. “가상조직에 대한 정체성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31권 4호. 1997.

김남주. “온라인 다중참여 역할 수행게임 활용 초등 영어교육의 효과분석.”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김대복. “사이버가정학습 학습주제별 콘텐츠 유형 탐색.” 『e-연구 통신, 교육연구』. 2007.

김사훈·박상욱. “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초등 영어교육 프로그램 적용연구 교육 과정 설계와 적용 분석 모형개발.” 『교과교육학연구』, 14권 2호. 2010.

- 김성윤. “사이버 사회통일교육.” 서울: 펜과 파스텔, 2004.
- 노일순. “사이버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e-Learning 학술연구』, 제1권 1호. 2002.
- 송승근. “세컨드라이프의 게임성 및 심의 방안.” 『한국게임학회지』, 제4권 2호. 2007.
- 양정훈. “통일교육에 따른 사이버 교육활용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2권 2호. 2004.
- 양현모. “새로운 남북관계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제9권 3호. 2000.
- 이수경·권진희. “웹기반 훈련(WBT) 프로그램분석을 통한 가상교육 발전전략 탐색.” 『교육공학연구』, 제16권 4호. 2000.
- 이은주. “의무적인 비동시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5권 1호. 2009.
- 이지연·김사훈. “3차원 가상세계의 교육적 활용 연구의 국내외 연구동향.” 『교육공학연구』, 제26권 제3호. 2010.
- 정숙경 외. “통일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사회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통일교육협의회 부설 통일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
- 정준구·장기진. “실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수용 요인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4호. 2010.
- 정한호. “교실수업에서 나타나는 이러닝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교육공학연구』, 제24권 2호. 2008.
- 최성우. “미래사회와 정보화 교육.” 『서울교육』. 2000.
- 황궁섭.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사이버 통일교육 활성화.” 『Unizine』, 8월호. 2008.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 (검색일: 2009.3.2).
- de Freitas, S & Veletsianos, G. “Editorial: Crossing boundaries: Learning and teaching in virtual wor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1(1). 2010.
- Stern, R.C. and R.S. Robinson. “Perception and Its Role in Communication and Learning.” D.M. Moore and F.M. Dwyer, eds. *Visual Literacy*.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1994.

Veletsianos, G.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virtual character expressiveness on learning and agent~learner interactions."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5(4). 2009.

Venkatesh, V. "Determinants of Perceived Ease of Use: Integrating Control, Intrinsic Motivation, and Emotion in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000.

Von Der Emde, S, Schneider, J., &, Kotter, M. "Technically speaking: Transforming language learning through virtual learning environments (MOO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5(2). 2001.

청년층을 위한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병길 | 에스이노베이션컨설팅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다.”

— 나단 푸쉬 前 하버드대 총장

I. 100여 년 전 젊은 그들

- 조선말기 개화사상(開化思想)에 영향을 받은 김옥균은 국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다 33살 때인 1884년 개화파 세력들과 함께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킨다.

- 1898년 개화사상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23살의 청년 이승만은 독립 협회와 언론 활동을 하며 정부전복을 획책하였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 1893년 17살의 나이로 동학(東學) 운동에 참여한 청년 김구는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항일운동을 하며 현장활동과 투옥을 번갈아가며 했다.

김옥균, 이승만, 김구뿐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풍전등화(風前燈火) 가운데 있는 조선의 운명을 바꾸어 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다. 이것은 19세기 말 조선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었다. 어떤 이들은 개화사상과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그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또 어떤 이들은 서구문물인 서학(西學)을 반대하며 동학(東學)을 만들고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고 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의 청년정신은 조선말과 일제시대 젊은이들에겐 일종의 햇불과도 같았다. 이상재, 안창호, 조만식 같은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의 역할모델이 되기도 했다. 암울했던 일제시대의 젊은이들에겐 항일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분명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통일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떨까?

II. 청년통일운동 3세대

1. 기획하기 보다는 기획 당했던 과거의 젊은 세대

경제용어 중에 ‘3D업종’이란 용어가 있다. 3D업종이란 건축업, 광업, 제조업 등 소위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 산업을 말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3D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기피한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도 이러한 3D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통일문제가 그렇다. 통일문제는 이질화된 남북을 융화시켜야 하고, 한반도 주변국 간의 얽혀 있는 일종의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에 어렵다(Difficult). 또한 통일문제는 좋은 의도로 접근한다 해도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는 진흙탕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깨끗한 옷도 진흙탕에서는 더러워지기 마련이다(Dirty). 그리고 통일문제는 여기저기에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의 교류에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위험부담이 크다(Dangerous).

한국 사회의 3D의 정점에 있는 통일문제는 당위성은 있었으나 청년세대의 특권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담론보다는 반공(反共)에 핵심가치를 두었고 정부의 독점적 기획에 의해 움직였다. 사회적 이슈들이 독점적 형태로 공급될 때 담론의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의도와 목소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수요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통일문제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의 쌍방향 소통보다는 정부 중심의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었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반공’에 기초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배타적인 취급을 받는 것을 넘어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친북좌경’ 취급을 받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반공에 의한 통일’이 모든 여론을 독점했고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사회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분위기였고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교육을 통해 신념화했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상상력은 제한되고 있었다.

2. 청년 통일운동 세대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상상력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먼저 젊은 세대의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대 구분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 세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위적이고 주관적이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르다. 현재 세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공감이 가는 구분이 바로 거대한 역사적 이벤트 전과 후다. 대표적인 것이 제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다. 제2차 대전 이후의 경제적 풍요, 대중문화, 신좌파, 성개방, 여성 해방, 인권/반전/반핵/환경 운동 같은 시민운동의 성장, 윤리적 소비 등이 제2차 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 속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이다.

한국 사회도 다양한 기준에 의해 사회과학자, 언론 등이 세대를 규정한다.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 IMF 외환위기, 대북포용정책, 인터넷 대중화 등의 사건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세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청년통일운동의 경우 아직 명확한 구분점은 없으나 청년들의 에너지가 분출되었던 사건의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청년들의 에너지가 분출되었던 대표적인 시점은 1960년 4월 민주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다. 4월 혁명과 6월 항쟁은 청년 대학생들이 시작해서 시민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민주운동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운동이 ‘청년통일담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가. 청년통일1세대(1960년대~70년대)

1960년 4·19 혁명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기치를 들고 자유당의 독재에 맞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 4·19 이후 청년들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다.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이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면서 학생들 간의 대화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움직임이 처음 일어나게 되었으나 곧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부터 1961년 5·16 사이에는 기존의 ‘북진통일’과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분단을 해석하고 남북 교류와 통일을 조망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청년들 가운데 있었다.

1960년 10월 24살의 청년작가 최인훈은 잡지 <새벽>에 금기시되어 왔던 분단을 처음 묘사하며 남북을 오가며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선택을 사실감 있게 표현한 소설 ‘광장’을 발표했으며 1961년 31살의 젊은 언론인 조용수는 혁신계열의 생각을 담은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5·16 이후 사회전반에 ‘반공’이 강화되면서 민간,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통일담론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한다. ‘반공통일’에 기반한 국가정책은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의 생활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여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반공포스터, 글짓기, 웅변대회가 개최하며 반공의식을 함양하게 했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는 꼭 반공 유적지를 방문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교련 과목을 통해 남학생은 총검

술과 같은 기초군사 훈련과 군가(軍歌)를 배웠고, 여학생들은 전시에 부상자들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간호교육을 받았다. 각급학교에는 학생회 대신 나라를 지키는 학생들의 모임이란 의미의 ‘학도호국단(學徒護國團)’이 조직 되어 학생회를 대체했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반공에 대한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 받았다. 매주 주말 텔레비전 정규 방송에서는 ‘배달의 기수’ 라는 반공 프로그램이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공중파 채널에 방영되었으며 ‘추적’, ‘113수사본부’, ‘전우’ 같은 반공 드라마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제작되어 황금 시간대의 안방극장을 독차지했다.

병영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가는 일명 3M(마르크스, 마오쩌둥, 마르쿠제) 심취하기도 했고,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으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을 품었다. 하지만 이상은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과 성과를 내기에는 현실이 무게가 너무나 버거웠다.

나. 청년통일2세대(1980년대 후반~1990년대)

철용성과 같은 ‘반공에 의한 통일’의 독점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성공을 거두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물론 통일문제도 마찬가지였다.

1988년 3월 29일 서울대학 총학생회 선거유세과정에서 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는 ‘남북학생관문점회담’을 북한 김일성대학 학생회 측에 공개 제의했다. 남북학생회담은 당국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었지만, 이 제안은 4·19 혁명 이후 처음으로 민간주도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들의 통일 담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체제 경쟁 상대였던 사회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이후 한반도 그

것도 휴전선 아래 지역에 섬처럼 갇혀 있었던 국민들의 생각과 사고의 지평(地浬)이 넓어졌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당시 유행했던 말 처럼 대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배낭을 메고 유럽과 미주 대륙, 아시아를 누비고 다녔고 이전 세대가 보고 듣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된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통일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가서 역사의 유적이 되어 버린 베를린 장벽과 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를 휴전선 철책과 판문점에 대비시켜가며 ‘우리나라는 언제쯤’ 하며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전반적인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북한서적을 읽고 북한 영화를 보고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일명 ‘북한 바로알기 운동’ 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1989년, 민족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었던 21살의 대학생 임수경은 해외여행 자유화 덕분에 북한에서 열린 사회주의권 청년들의 잔치인 ‘세계 청년학생축전’ 에 참석할 수 있었다. 임수경의 방북은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남북한을 비롯한 한민족 전체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이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점을 활용해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 과거보다 자유로워진 환경은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이 연대하여 통일의 에너지를 크게 분출시킬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늘어났다.

다. 지금은 청년통일3세대?(2000년대 이후)

청년층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통일담론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수년동안 정점에 이르게 된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북한에 대한 열린 시각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강했다. 1990년대 초반 학생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가며 했던 통일 운동과는 또 다른 모습의 통일 논의가 전개되었다.

남북의 청년들이 금강산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축제는 거기까지였다. 남북교류의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한국사회가 세계화를 추구하며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로 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열기는 식고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국경과 국적의 의미가 열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의식은 과거와는 달리 점점 약해지고 있다. 또한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남북의 길이 막히고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은 거대담론의 통일문제에서 더욱 관심이 멀어져 갔다. 더욱이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치며 북한이란 존재에 대해 혐오와 염증을 느끼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이제 과거 남북학생회담 추진은 이미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구국의 강철대오’를 외쳤던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전대협)’과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역시 추억 속의 단체가 되어버렸다. 이제 대가는 민족해방계열인 NL과 민주민주계열인 PD의 열띤 노선투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문제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같은 핏줄인 북한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제3세계의 빈곤문제나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 주고 어린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남아메리카의 커피 농부나 동남아시아의 사탕수수 농부들이 생산한 작물을 공정한 가격에 사는 데 관심이 많다. 다문화가정 자녀문제, 길거리 노숙자 문제, 윤리적 투자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열정을 쏟는다.

한때 정치권력이나 학생운동에 의해 최대의 여론독점을 누렸던 ‘통일문제’는 점점 잊혀지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마저 다른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돌리면서 통일의 당위성이나, 같은 핏줄인 북한을 돕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통일담론은 정부 주도의 ‘반공에 의한 통일’이라는 담론독점이 깨어져 나갔지만, 대신 세계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물론 아직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처럼 독점을 누릴 만큼의 위치에 있지 않다. 통일문제는 당위성보다는 다양하고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꼭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대답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고, ‘독일-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이지만 두 개의 나라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에 통일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넘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담론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통일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III. 2011년 한국청년들

1. G세대? P세대?

사회가 양극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좌절만 하고 있지 않다.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자신과 사회를 같이 생각한다. 최근 들어 예전과는 다른 젊은 세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2010년 1월 조선일보가 기획 보도한 G세대와 2011년 4월 중앙일보가 기

획 보도한 P세대가 대표적이다.

가. G세대

먼저 G세대를 보자. 녹색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Global)의 영어 첫 문자에서 따온 G세대는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세계화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그린(Green)은 또 ‘환경세대’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도 지닌다. 일부에서는 G를 너그러움을 뜻하는 Generosity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한국의 G세대는 고도 성장기인 1980년대에 태어나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향진한 2000년대에 성장한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한 해 63~70만 명씩 속속 성년에 접어들면서 지난 100년간 고단하게 전진해온 한국 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G세대는 집단적 가난을 체험하지 않은 첫 세대다. 압축성장 시대, 민주화 운동 시대를 몸으로 겪는 대신 교과서로 배웠다. 절반 이상이 20대 초반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 해외에 나갔고 수만 명이 조기유학·단기연수 등을 통해 밀도 있게 글로벌 사회를 경험했다.

이들은 최신유행 패션숍이나 유흥가를 주도한 기존의 X세대와는 달리 G세대는 환경운동·반핵평화포럼 등과 같은 곳을 활동무대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펴는 매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젊은이의 건강한 세계관을 강조한 개념이다. 각종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이들도 대표적인 G세대이다. G세대는 세계화를 뺏속 깊이 경험했고 기성세대가 갖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한국적인 것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기존의 틀을 거부하며, 실용적이고 세련되고 심플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나. P세대

P세대는 제일기획이 2003년 연구보고서 ‘대한민국 변화의 태풍 — 젊은 그들을 말한다’ 에서 처음 사용됐다. P는 참여를 의미하는 participation, 열정을 의미하는 passion, 잠재력을 의미하는 potential power, 패더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paradigm-shifter의 각 단어의 공통 접두어에서 따온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촛불시위, 대통령선거 등을 주도한 우리 사회변화의 주역을 P세대로 명명하고 있는데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노마디즘(유목적인 특성),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 출범으로 정치 참여 기회와 영향력의 증대, 외환위기 이후의 세계화의 확산,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으로 인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보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 등이 P세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분석됐다.

P세대에게는 과거 486세대가 가졌던 사회의식과 X세대의 소비문화, N세대의 라이프스타일, W세대의 공동체의식과 행동이 혼합돼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P세대나 일부 언론이 받아들이는 P세대의 의미는 ‘신안보주의’ 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이 단어는 본래의 의미에서 변형돼 중앙일보에서는 애국심(Patriotism)을 발휘하고 있는 20대 젊은 층을 지칭하며 진보·보수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실용(Pragma-

<중앙일보가 정의한 P세대>

| | |
|------------------|----------------------|
| Patriotism 애국심 | 북한 위협 실감, 애국심에 눈뜨다 |
| Pleasant 유쾌 | ‘현빈 세대’ 군대도 즐겁게 간다 |
| Power n Peace 평화 | ‘힘이 있어야 평화 지킨다’ 각성 |
| Pragmatism 실용 | 진보·보수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
| Personality 개성 | 소셜네트워크로 자기 생각 적극 알린다 |

tism)적인 자세를 보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G세대와 P세대는 용어만 다를 뿐 그 의미 안에는 다양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공통분모를 조합해 보면 “글로벌시대 열린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자기 개성이 강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공통 분모 속에 통일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IV. 청년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요즘 청년들은 이런 것에 열광하고 참여하고 싶어 한다.

사용자 참여를 이용한 뉴스 사이트인 ‘디그’
아프리카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나무나라’
네티즌의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키바’
네티즌의 배너달기로 공부방을 후원하는 한국의 ‘도너스캠프’
사람들이 기부를 실천하는 네이버의 ‘해피빈’
개인들의 소규모 자본 참여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팝펀딩’
네티즌 참여로 금광을 찾는 ‘골드코프 챌린지’
다양한 사용자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노센티브’
맞춤 교과서를 만들어주는 ‘코백션’
지식을 공유하는 ‘네이버 지식인’
시민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지도와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맵피마을’

청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들을 리더를 넘어 성자(聖子)처럼 여긴다.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 페이스북 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그렇다. 이들은 모두 약관의 20대 나이에 처음 일을 벌였다.

비록 기술개발과 통일은 큰 연관이 없긴 하지만 청년세대를 열광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청년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은 앞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나단 푸쉬의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다. 믿을 수 있는 신조는 통일의 가치가 내포된 시대정신을 말하며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시대의 가치가 반영된 리더십을 말한다.

이것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편안한 카페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승, 선배, 친구들과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며 함께 앞날을 그려 보는 것’이다.

1. 흔들 수 있는 깃발(커뮤니티)

가. 웹2.0 시대

커뮤니티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공동체를 말한다. 지금 청년세대들의 공동체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를 쉽게 도와주는 웹2.0 서비스는 개인의 힘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열었다. 집단지성을 이용해 세계 최대 백과사전으로

성장한 위키피디아 외에도 북마크를 공유하는 델리셔스, 사진을 공유하는 플리커, 동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등 다양한 사이트가 웹2.0 사이트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참여의 폭과 공유의 폭이 한층 넓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웹2.0을 구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기술은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웹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정부 역시 많은 행정정보와 통계 자료들을 웹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와 공여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서로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SMS와 메신저, 채팅,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모여 집회까지 여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통일 분야는 어떨까? 우수한 정보 인프라에 힘입어 북한과 통일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경직되어 있기에 북한&통일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들을 토의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인터넷 공간에는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토론 이슈들도 많지만 유독 북한&통일만은 토론이 잘 되지 않는다. 이슈가 제기되면 일단 상대가 어느 편인가를 파악하게 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자체를 거부해 버린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웹2.0에 녹아 내려가고 있지만 통일분야는 웹1.0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의 경우 블로그를 개설해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통일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통일부 이외에 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연구소나 단체들도 웹을 통해 교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쌍방향의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단순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통일논문공모나 UCC 공모도 좋지만 다양한 통일 관련 이슈를 갖고 토론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다. 왜 ‘모의 UN 총회’, ‘모의 국회’, ‘모의 법정’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모의 남북정상회담’, ‘모의 남북국회회담’, ‘모의 통일정부 국무회의’는 잘 볼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열된 논문이나 UCC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히며 대화하고 타협하는 토론이 더 효과적 일수 있다. 밑바닥에서 최고의 실력 쌓고 치열한 경쟁을 뚫으며 무명에서 명성 있는 가수로 탄생한 ‘슈퍼스타K’ 멤버들을 모셔다가 ‘통일콘서트’를 하고, 이것을 앱으로 만들어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통일정책들의 대안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토론하는 ‘슈퍼스타 통일’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2. 부를 수 있는 노래(문화)

가. 창의성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창의성에 있다. 그리고 창의성은 문화와 정신적인 가치를 토대로 한다. 여기서 문화는 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및 감성적 능력의 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청년들에게 익숙한 웹2.0과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통일에 관련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자. 스마트폰에는 오키리나나 사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를 응용하여 북한의 개량악기를 즐길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악기 개량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많이 해왔다.

전통악기의 제한성으로 연주가 불가능한 음악도 개량악기에서는 가능하도록 변화를 주었다. 북한의 개량 악기인 옥류금, 장새납, 개량 가야금, 개량 해금 등을 어플로 만들어 체험해 본다면 북한문화를 이해하고 통일에 관한 영감을 갖는 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경제 개발을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 많은 미국 대학들은 캐피탈리즘(Capitalism)이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경영학 부교재로 많이 활용한다. 이 게임은 이름처럼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습득하며 게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다. 캐피탈리즘 이외에도 심시티와 같은 도시건설 게임도 있고 소셜미디어가 활성화 되면서 팜빌, 시티빌 같은 경제 게임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원리들을 북한에 적용하여 게임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 북한의 도시들을 현대화 시키고 북한 농촌의 수확증대를 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급시켜 보자. 게임을 만드는 이들이나 게임을 하는 이들 모두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응용하고 창조적으로 접근하면 북한/통일과 관련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나. 개방성

창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의 개방성이다. 개방성은 방사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네트워크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을 통해 여러 개체가 서로 소통한다. 네트워크의 마디(node)와 각 마디를 잇는 선(線)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많은 마디들이 선을 통해 자신들의 정보와 가치를 공유한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는 여러 문제로 인해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통제하면 대부분 통제가 가능했으나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정부의 완벽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운영중인 트위터 계정이나 유튜브 친북 동영상에 접속했나 안했나가 아니라 북한체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친북이나 무조건적인 반북이 아닌 북한체제의 모순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체제에 대해 건강하고 상식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과거에 제정된 법의 기준(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전기통신법)을 소셜미디어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오프라인에는 60년 이상 휴전선이라는 갈림의 선이 있었지만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휴전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열린 네트워크에 대해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군사적인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화적인 힘이다.

3. 믿을 수 있는 신조(새로운 시대정신)

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에 성공하고 지식정보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났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곳은 몇 군데나 될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다. 한국까지 포함하면 7개 나라 밖에 안 된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는 많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국민소득은 높지만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적다. 강대국을 정하는 기준이 다양하지만 적정인구(5,000만 이상)와 소득(2만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식이 성장

했다.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 축의 수레바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선진사회에 합당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가의 마인드 곧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기업가 정신은 새롭게 도전해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마음가짐과 행동력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은 통일을 준비하는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데 있어 도전을 주는 정신적인 가치가 된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기업가는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고 경영을 혁신해 나간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끌어 내야하고, 통일문제에 적용시킬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다양한 인적자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인재를 키우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자본 창출과 맥락이 닿아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기업가 정신은 주로 경제적 이익에 가치를 둔 기업가 정신을 뛰어넘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향한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빈곤, 교육, 사회 양극화, 환경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문제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남북분단은 한민족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회적인 문제다.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4. 따를 수 있는 지도자(리더십)

가. 관용의 리더십

리더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자질은 자기희생을 통한 숭선수범(率先垂範)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다. 여기에 통일시대의 리더에겐 과거의 갈등과 상처를 감싸고 아우를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교수는 저서 『창조적 계급의 등장(The Rise of Creative Class)』에서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창조적 인재를 끌어 모을 수 있는 3T를 이야기 했다. 3T란 기술적 인프라(Technology)를 잘 갖추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Tolerance)가 넘쳐야 우수한 인재(Talent)가 모여드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Tolerance)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텍사스 오스틴 같이 첨단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나 뉴욕, 런던, 토론토 등 무역과 금융 등이 발전한 글로벌 도시들을 보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들 역시 성장의 배경에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있다.

개방성과 다양성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관용(Tolerance)’이다. 즉 나의 절대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통일을 지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역시 ‘관용’이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20세기 이념의 잣대를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빨갱이’가 되고 ‘수구꼴통’으로 재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관용’의 마음을 갖춘 리더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나. ‘근시안적(近視眼的) 통일’을 벗어나야

관용의 넓은 바다에서 통일을 향한 항해를 하려면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앞을 조망해야 한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근시안적(近視眼的)인 생각이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테오도르 레빗(Theodore Levitt) 교수는 현재 주어진 제한된 제품 기능에 안주하는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는 뜻으로 마케팅 근시안(Marketing Myopia)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미국 철도회사인 암트랙(Amtrack)은 다른 철도 회사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비행기의 출현으로 곤경에 처했으며 세계에서 처음 전동타자기를 발명한 스미스 코로나(Smith corona)는 다른 타자기 업체와의 경쟁이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PC) 때문에 몰락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례는 많다. 이처럼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현실의 제품에만 신경 쓰는 것을 마케팅 근시안(Marketing Myopia)이라 한다.

통일문제 역시 근시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많다. 더 넓고 높은 통일을 지향하기 보다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분단 관리’의 성향이 더 짙은 모습이다. 어찌면 시간이 더 흐르면 기존의 통일논의는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흐름에 밀려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통일을 준비하는 리더는 선견지명을 통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닦기를 원하는 리더십이다.

V. 마치며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이후 나타난 ‘남북학생회담 제안’은 순수한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적인 억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이 외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의 구호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청년의 열정이 배어 있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선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 스스로 신념을 갖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문화를 꽃피우며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통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젠다의 설정이나 통제, 감독이 아니라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청년들의 ‘통일담론’에 애써 알파벳 이니셜의 ‘세대’를 붙이지 말고 훗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평가에 의해 이 세대는 이뤘었다는 느낌의 미덕을 보이는 어느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

청년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변화가 필요할 때 늘 그 수원지 역할을 해왔다. 통일 문제역시 마찬가지다. 기성세대들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패기와 열정으로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다. 비록 지금은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청년들의 통일과 관련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통일교육은 그 잠재력은 깨우쳐 주는 멘토(Mentor)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수요조사 분석

허문영·권오국 | 통일연구원

1. 서론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국가적인 숙원임에는 분명하나 통일의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민족·국가적인 ‘미해결의 과제’를 남길 수 있다. 그럴 경우 ‘통일은 왜 하였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낳게 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논의들은 주장하는 논자들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 왔었는가? 시민사회의 통일론은 감성적으로 치우친 면이 없었는가? 정치권은 통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는가?”와 관련된 자기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의 통일논의는

공론(公論)은 없고, 사론(私論)만이 논의를 지배해 온 측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제시된 기본원칙도 무시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최소한 헌법적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신통일논의는 “통일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왜 지금의 삶보다 더 낫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서독은 통일 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통일 이후에도 국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왔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독일의 통일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기반을 모색하고,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일부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통일교육 운용실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가 통일교육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향후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주제선정에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요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통일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통일교육콘텐츠 제작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I. 통일교육 운영현황

통일부 산하 민간단체는 1968년 6월 28일 허가된 ‘국민정신중흥회’를 시발로 하여 박정희 정부시절 총 4개 단체가 신설되었으며, 전두환·노태우 정부(25개 단체), 김영삼 정부(26개 단체), 김대중 정부(37개 단체)와 노무현 정부에 이르면 그 수가 대폭 증가하여, 2007년 12월 현재 총 205개 단체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2011년 4월까지 통일부 등록단체는 2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등록법인이 대폭 증가한 이유로는 남북민간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기대하거나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신설된 단체가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등록법인을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통일활동 전반을 다루

〈표 1〉 통일부 등록법인

2011년 4월 기준

| 활동분야 | 단체수 | 비중(%) |
|---------|-----|-------|
| 통일활동 전반 | 66 | 28.3 |
| 학술연구 | 39 | 17.7 |
| 경제협력 | 12 | 5.2 |
| 사회문화 | 15 | 6.4 |
| 인도지원 | 52 | 22.3 |
| 새터민지원 | 42 | 18.0 |
| 개성공단 | 2 | 0.1 |
| 통일교육 | 5 | 2.1 |

〈표 2〉 조사대상 기관, 응답자 특성 분석

| 전체 | | 사례수 | 퍼센트(%) |
|---------------------|---------|----------|--------|
| | | (n = 50) | |
| 통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기간 | 무응답 | 13 | 26 |
| | 1~5 | 19 | 38 |
| | 6~10년 | 8 | 16 |
| | 11~15년 | 3 | 6 |
| | 16~20년 | 4 | 8 |
| | 21~25년 | 0 | 0 |
| | 26~30년 | 3 | 6 |
| | 합계 | 50 | 100.0 |
| 기관 소재지 | 서울 | 41 | 82 |
| | 서울 외 지역 | 9 | 18 |
| | 합계 | 50 | 100.0 |
| 응답자 성별 | 남성 | 34 | 68 |
| | 여성 | 16 | 32 |
| | 합계 | 50 | 100.0 |
| 응답자 연령 | 20대 | 4 | 8 |
| | 30대 | 7 | 14 |
| | 40대 | 17 | 34 |
| | 50대 | 17 | 34 |
| | 60대 이상 | 5 | 10 |
| | 합계 | 50 | 100.0 |
| 기관 성향 | 무응답 | 2 | 4 |
| | 진보 | 4 | 8 |
| | 중도 진보 | 9 | 18 |
| | 중도 | 17 | 34 |
| | 중도 보수 | 15 | 30 |
| | 보수 | 3 | 6 |
| | 합계 | 5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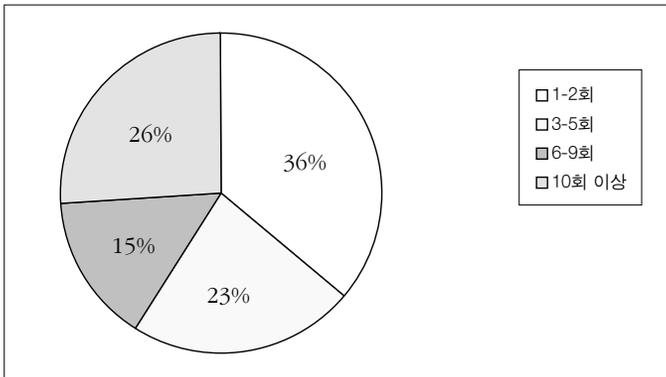
는 단체(66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도지원(52개), 새터민지원(18개), 학술연구(39개) 등의 순이다. 상기 등록법인 중에서 대북지원 지정단체가 91개 단체로 등록법인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등록법인에 대한 이번 수요조사는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전화·팩스·e-mail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총 233개 단체 중 50개 단체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포함)를 운영하는 단체는 약 100여 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그 외 단체들은 통일관련 활동이 극히 미비하였다. 어떤 단체의 경우 연락처가 불분명하였고, 심지어 사무실 하나에 2개 단체가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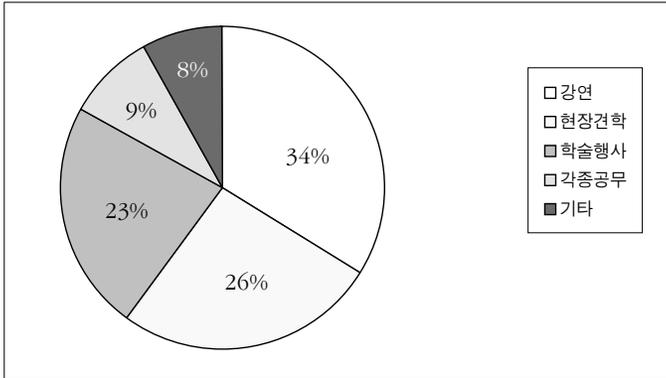
〈표 2〉에서 보듯이 응답기관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10년 이상 된 단체는 20%에 불과했다. 서울 지역에 편중(82%)돼 있고, 4~50대 간부(64%)들이 주로 응답해 주었으며, 기관성향을 묻는 질문에 중도(34%), 중도보수(30%), 중도진보(18%), 진보(8%), 보수(6%), 무응답(4%) 등의 분포였다. 다음은 주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한 내용이다.

1년간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는 1~2회(36%), 3~5회(23%) 등 5회

〈그림 1〉 연간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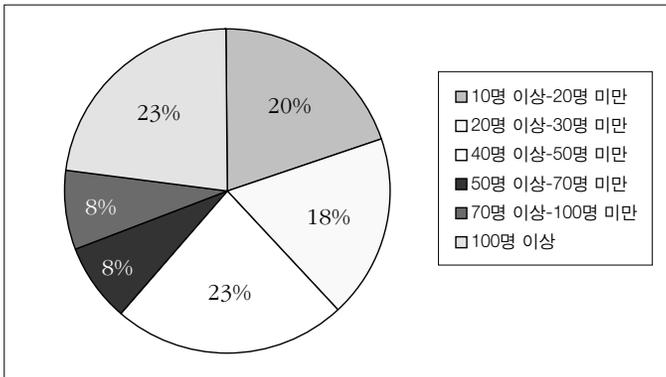
〈그림 2〉 통일교육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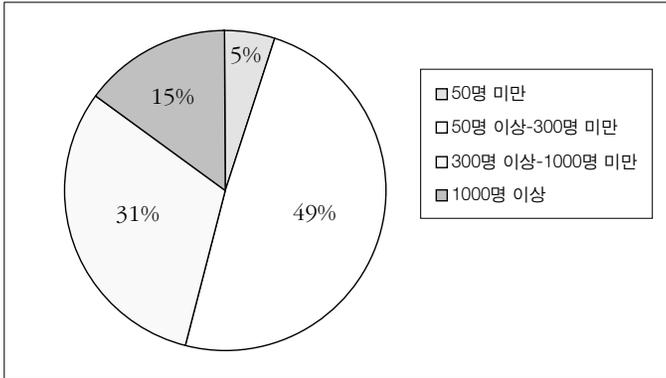
이하가 59%로 교육운영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강연(34%), 현장견학(26%), 학술행사(23%), 각종 공모/전시(9%), 기타(8%)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강연·학술행사 등 일방주입식 교육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1회당 교육대상자는 50명 미만에 불과한 행사가 61%

〈그림 3〉 1회당 교육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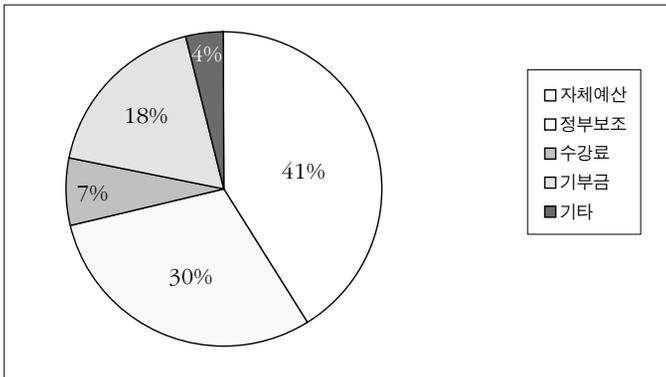
〈그림 4〉 연간 교육대상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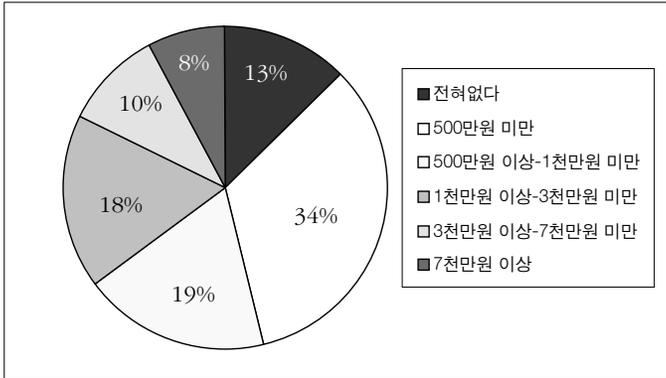
에 달함으로써,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교육대상자 규모 면에서도 50~300명 미만(54%), 300~1,000명 미만(31%) 등 1,000명 미만이 80%에 달했다.

민간단체의 재원은 자체예산(41%), 정부보조(30%), 기부금(18%), 수강료(7%)의 순을 보였으며, 자체예산을 편성하여도 47%가 연간 500만 원

〈그림 5〉 재원마련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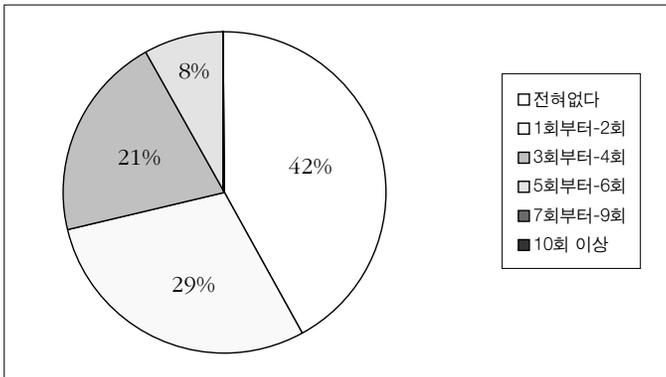
〈그림 6〉 자체예산 편성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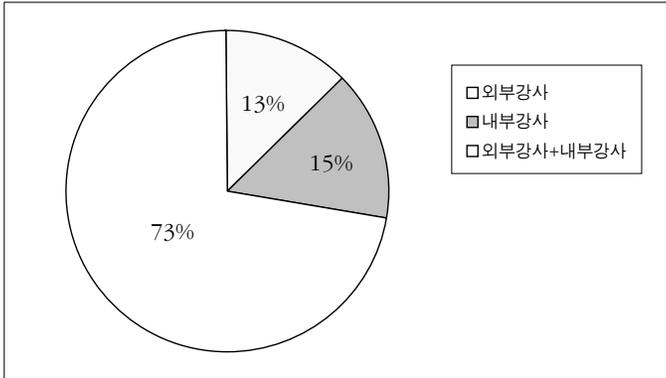
미만에 해당하였다. 사회통일교육 단체의 자체예산 편성이 매우 낮고,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 담당자의 최근 5년간 공공연수 경험은 전혀없음(42%), 1~2회(29%), 3~5회(21%), 5~7회(8%)이며, 8회 이상은 전무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일교육연수를 연평균 1회도 못 받은 담당자가 92%에 달하는

〈그림 7〉 교육담당자 5년간 연수경험



〈그림 8〉 강사조달 방법



것으로 직무관련 연수경험이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조달 방법과 관련해서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모두 활용한다(7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내부강사(15%), 외부강사(13%) 등으로 조사되어 외부강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편임도 알 수 있었다. 이외, 교육대상자 특성을 묻는 질문에 통일교육의 주된 대상은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계층(39%)이, 직장인(31%)을 포함한 비학생계층(60%)이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교육 운영실태를 요약하자면, 단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교육활동 또한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5회 이하(59%)가 가장 많았고, 교육 1회당 규모 또한 50명 미만(61%)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마련 방식도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 담당자의 직무연수 경험도 42%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부강사의 의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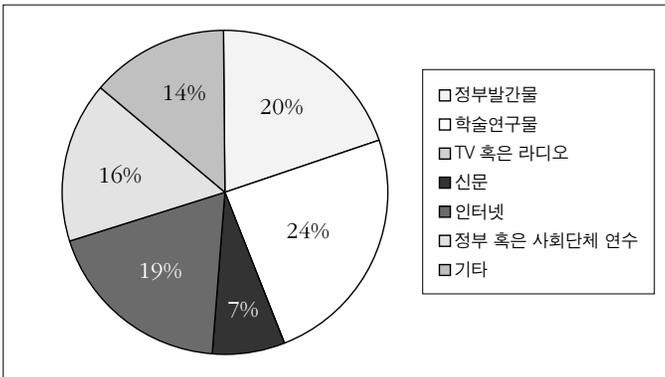
III.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방향

민간 통일운동 단체는 재정이 열악하므로 전문인력의 충원이 어렵고, 통일교육 자료의 입수와 분석이 힘들기 때문에 심도 깊은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통일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은 정책·학술연구서이므로 통일교육 현장에 곧 바로 적용하기가 쉬운 편이 아니다. 통일교육원 자료 또한 정부정책의 홍보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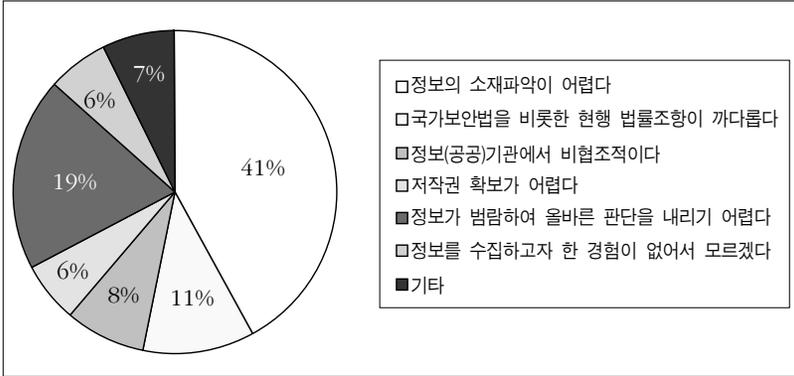
이는 본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기관의 42%가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회원/청중동원(14%), 교육자료 부족(14%), 시설공간부족(13%), 전문성부족(9%), 강사섭외(8%) 등의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통일교육 자료 획득방법은 학술연구물(24%), 정부발간물(20%), 인터넷(19%), 정부 혹은 시민단체 연수(16%) 순으로 나타났고, TV 혹은 라디오

〈그림 9〉 통일교육 자료 획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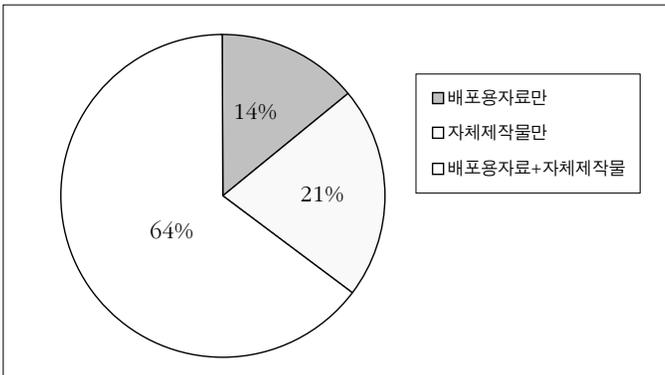
〈그림 10〉 자료 입수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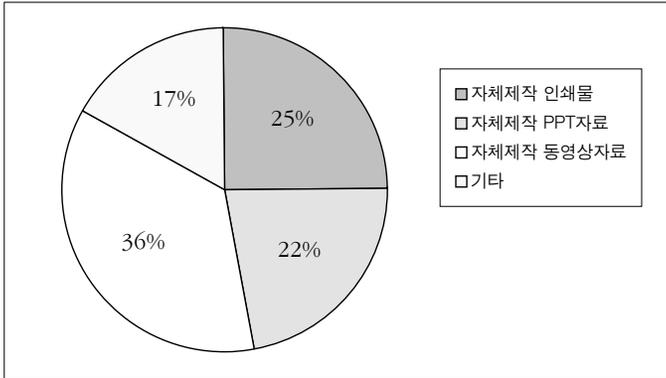
는 0%로 응답하였다. 자료입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 소재 파악의 어려움(41%)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정보의 범람(19%), 국가보안법(11%), 공공기관의 비협조(8%), 저작권(6%), 입수경험부족(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일교육 교자재로서 자체 제작물만 사용한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공

〈그림 11〉 교자재 자체제작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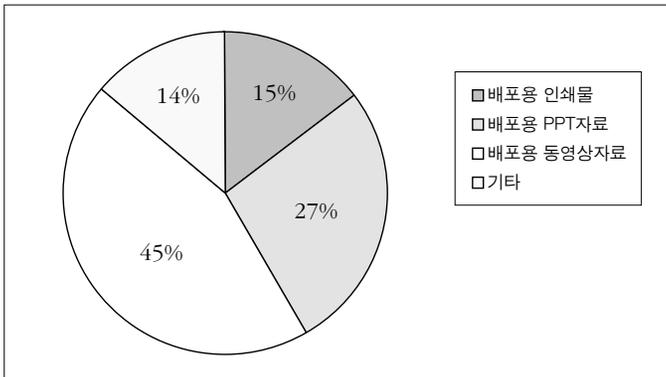
〈그림 12〉 자체제작 교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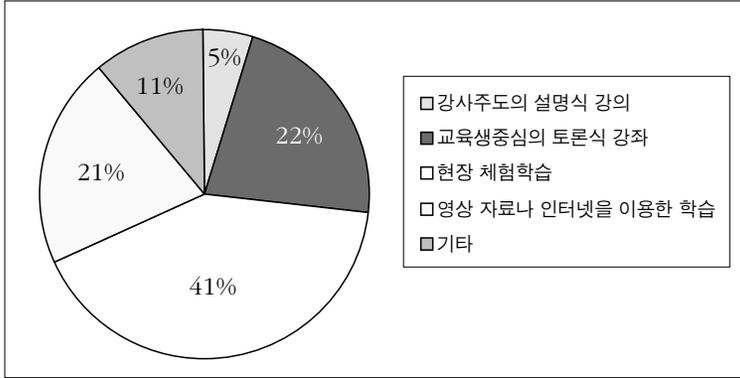
공기관이 배포한 자료만을 활용하는 단체가 14%에 이르고, 배포용자료와 자체제작물을 모두 이용하는 기관은 64%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체제작 교재의 형태로는 동영상(36%)이 다소 높게 나왔고, 인쇄물(25%), PPT(2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 배포용으로 제작한 교자재 중에서 최고의 교육 효과성을

〈그림 13〉 배포용 교자재 중 교육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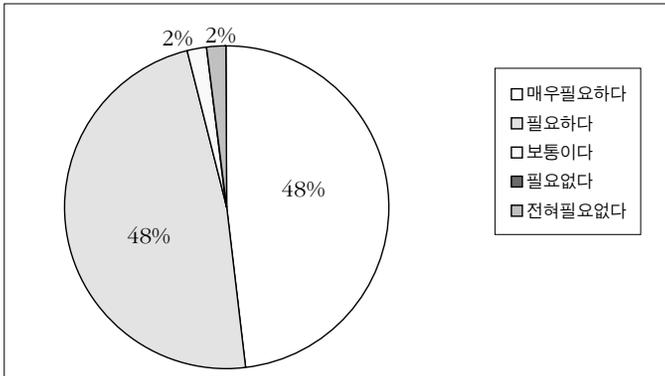


〈그림 14〉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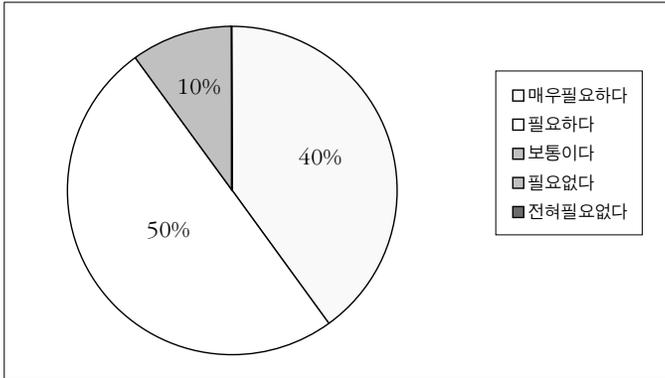


보이는 교자재는 동영상(45%), PPT(27%), 인쇄물(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담당자가 평가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과 관련된 질문에는 현장체험 학습(41%), 토론식강좌(22%), 영상자료/인터넷(21%), 강의(5%), 기타(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쌍방향, 시각형 교육방법이 교육 효과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15〉 시청각 자료의 개발 필요성



〈그림 16〉 PPT 강의 자료의 개발 필요성



통일교육 관련 동영상자료를 포함한 시청각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필요하다’ (48%), ‘필요하다’ (48%) 등 거의 모든 사람이(98%) 동의하였다. PPT 강의 자료의 개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매우필요하다’ (40%), ‘필요하다’ (50%)의 긍정적 응답이 90%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PPT와 연계된 동영상은 몇분이 적당할 것인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15분 이내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10분(29%), 5분(16%), 45분 이상(6%) 등으로 조사되어, 대체로 15분 이내에서 동영상이 제작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볼 때, 기본교재를 토대로 PPT와 동영상을 연계하여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경우, 통일교육 단체들이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V.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9%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 64%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또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지원과 협력’의 대상에서, ‘경계 또는 적대’의 대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도발들이 우리 국민의 대북관을 변화시킨 중요 요인이었다. 여기에 과거 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신안보세대’의 등장이 <통일의식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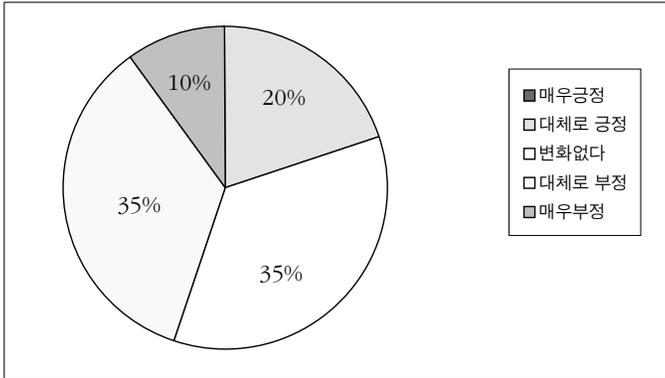
〈표 3〉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단위: %)

| | 2007 | 2008 | 2009 | 2010 |
|------|------|------|------|------|
| 지원대상 | 21.8 | 21.9 | 17.4 | 19.3 |
| 협력대상 | 56.6 | 57.6 | 50.7 | 44.7 |
| 경쟁대상 | 3.3 | 3.8 | 2.3 | 3.3 |
| 경계대상 | 11.8 | 11.3 | 20.6 | 20.7 |
| 적대대상 | 6.6 | 5.3 | 9.0 | 12.0 |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각 년도 통일의식조사

〈그림 17〉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인식변화



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를 묻는 질문에 ‘매우부정적 변화’ (10%)를 포함, ‘부정적 변화’가 45%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매우긍정’은 0%, ‘대체로긍정’은 20%에 머물렀다. 이 같은 현상은 필요한 교육 콘텐츠 분야를 묻는 설문항목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통일교육시 가장 필요한 콘텐츠 범주로 통일정책(3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실상(24%), 경제교류(15%), 안보(13%), 인권(11%)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아래의 주제(〈표 4〉) 중에서, 시민·사회 단체로 하여금 3개 주제에 대한 선택을 요청한 결과, 통일비전(16%), 통일의 필요성(14%), 평화체제 구축(12%), 남남갈등 극복방안(8%), 통일정책(8%), 한반도 주변정세(6%), 남북경협(5%), 북한민주화(4%), 북한이탈주민(3%), 통일비용(3%), 통일편익(2%), 독일통일의 경험(2%) 등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교육 현장실무자들은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제보다도 통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공감대를 피교육생에게 불러일으키는 강의교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서술형 질문에 다수의 응답자들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입체적 내

〈표 4〉 통일관련 콘텐츠 세부주제 선호도

| | | | |
|----------------|---------------|-----------------|---------------|
| ① 통일비전 () | ② 북한실상 () | ③ 통일정책 () | ④ 남북체제 비교 () |
| ⑤ 한반도 주변정세 () | ⑥ 북한인권 () | ⑦ 북한이탈주민 () | ⑧ 통일편익 () |
| ⑨ 통일비용 () | ⑩ 통일의 필요성 () | ⑪ 남남갈등 극복방안 () | |
| ⑫ 독일통일의 경험 () | ⑬ 3대권력 세습 () | ⑭ 북한군사력 () | |
| ⑮ 남북경협 () | ⑯ 평화체제구축 () | ⑰ 북한민주화 () | ⑱ 한국전쟁 () |
| ⑲ 이산가족 () | ⑳ 국군포로 () | | |
| 기타 자유주제(_____) | | | |

용설명과 시각자료(사진, 도표)의 적극적 제공을 주문하였다. 또한 기존에 출간된 통일교육 교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교재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한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이 너무 다르게 변화되므로, 일관된 정책의 수립을 주장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여하튼, 이번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평화’와 ‘안보’는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보다는 ‘안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공/안보 논리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단 한번도 공산주의를 실행한 적이 없었다. 반공논리는 1945년이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따라서, 반공 대신 새로운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 안보 논리도 허점이 있다. 안보 논리하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주민들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구분이 모호하다. 어디까지를 주적으로 설정하고, 어디까지를 선량한 북한주민으로 규정할 것인가? 인민군, 당원, 고급관료, 탄압기관의 종사자 등도 우리의 주적이 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안보담론이 가진 부작용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안보만 강조하다 보면 통일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안보’와 ‘통일’도 함께 강조해야 한다.

둘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이뤄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데서 그 역량이 드러난다. 국론이란 이름의 통일된 목소리는 획일화 사회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원래 민주주의란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야 그것이 건강한 사회다. 다만, 상대방의 주의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획일화 사회를 이뤘지만 변화의 동인을 잘라버림으로써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작금의 사태를 맞이했다. 우리 사회는 한때, 권위주의 정부체제하에 있었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성을 자양분으로 하여,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다. 통일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조급증을 버리고 좀 더 거시적·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방안’과 ‘통일세’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 있어야 한다. 왜 통일세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제시할 때, 비로소 국민은 정부정책에 호응할 수 있다. 국민동의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민주주의가 대의제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넷째, 북한동포를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함께 이뤄갈 주체로 보아야 한다. 기존 통일논의에서 북한동포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북한 당국과의 논의만 존재했을 뿐, 북한사회의 일원인 북한동포들의 의견은 무시되어 왔다. 서독의 동방정책도 궁극적으

로 동독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었다. 독일통일을 결정한 것은 서독주민이 아니라, 동독주민이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통일은 곧 북한동포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아님을 선언할 때 통일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한반도 주변국의 힘의 배분상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일반적으로 당해야 하는 그런 약소국가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변화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분명하게 내외에 천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주변국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설득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여섯째, 통일한국의 주역인 다음세대에게 통일논의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사회 주축세대가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 태어난 세대로 바뀌고 있다. 1990년대의 'X세대'와 'N세대'를 거쳐, 이제는 'G세대'와 'P세대'가 등장했다. 통일이란 바로 이들 세대가 살아야 할 공간이며, 이들이 젊어져야 할 미래이다. 젊은 세대의 관심은 다른 세대와 달리 통일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일논의의 공론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곱째, 미시담론과 연결된 세밀한 통합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거대담론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통일의 추동력을 담보해 낼 수 없다. 개인의 가치와 사고를 인정한 미시담론과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통일운동은 성장할 수 있다. 만약, 국민 개개인이 통일의 필요성을 일상에서 느끼게 될 경우, 국가와 역사란 이름의 거대담론의 강제 없이도 통일의 요구는 증대할 것이다.

여덟째, 극도로 분열된 통일논의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사 연구에 대한 천착이 요구된다. 어느 순간 학계

또는 시민사회의 통일담론에서 남북관계사에 대한 탐구는 점차 사라져 버렸다. 남북관계사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면,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하나의 합일점을 추구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우리 사회는 통일과 관련해서 두 얼굴이 존재한다.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나 강했기에 일방적으로라도 분단을 해소하려는 열망이 높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정치권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경쟁의 영역으로 자리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통일의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그냥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체제의 질곡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으며,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사회발전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비정상적 분단상황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의 명령이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는 종종 그러한 가정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실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련의 급작스런 사건들이 이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사회에게 얼마나 크나큰 고

통의 기억을 남겼던가를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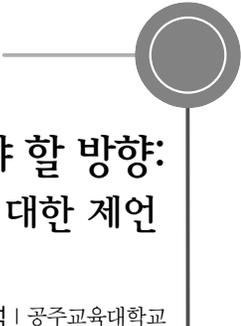
한반도의 미래 역시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역사행로를 걸을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전향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지향적인 도식적 사고보다는 미래 돌파 또는 형성적인 논리의 정립이 요구된다. 통일교육 역시, 현 시대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모색·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사회, 열린사고, 열린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의 통일교육이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도 노정하였다. 기존 통일교육 내용이 북한실태 또는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의 정서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실태 교육은 북한실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통일유보론 내지 반통일론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초래했다.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 홍보교육 또한 보수·진보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 속에서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통일역량을 약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따라서 통일비전 및 통일 미래상에 대한 객관적인 통일교육을 준비·시행함으로써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한편, 통일의지를 제고하여 통일대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때다.



학교통일교육

-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통일교육 콘텐츠에 대한 제언 | 박찬석 · 공주교육대학교
- 학교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 오기성 · 경인교육대학교
- 현행 학교통일교육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체제 추구 | 송두록 · 서울고등학교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통일교육 콘텐츠에 대한 제언

박찬석 | 공주교육대학교

1. 서론

학교통일교육은 2008년을 전후하여 평화와 안보의 비중 정도가 확연하게 분리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008년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통일교육에서 평화로 진척되는 내용을 강조하였다면,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북안보의 재무장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학교통일교육은 어느 시점이 나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의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루는 통일교육은 과거, 현재에 대한 인식과 미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전문가들은 학교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과 방침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통일의지를 올바르게 모아가려는 각오를 견지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을 올바르게 구성하려는 인사들이 어느

정권이나 어느 시기에 요구되는 학교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통합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진정한 구축은 관계된 인사들의 노력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은 변화무쌍한 구조적 상황에 기반한다. 학교통일교육은 남북한 간의 갈등과 북한 변수 그리고 남북관계, 국제환경 등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국가·민족적 통합을 추구하는 엄청난 부침과 논란에 놓여져 있다.

그만큼 학교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동과 진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분명 학교통일교육은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상황 호전 등에 의해 개선과 진척이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의 통일교육은 승공, 안보, 통일, 북한인식, 평화, 상생 등의 담론을 담고 그 목표와 내용을 바꿔 가면서 발전해 왔다.

그동안 학교통일교육은 북한사회를 이해하면서, 민주사회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내용을 강화한 바가 있었다. 또한 거대한 논의의 변화된 흐름 속에서 학교통일교육은 민족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평화와 안보의 조화,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교육적 통합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 경험도 있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은 각 상황과 환경에 상응하는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체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우리 사회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시각의 확대와 민족전통에서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열린 민족주의의 지향,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조화를 심화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속하여 왔다.¹⁾

1) 박찬석, “통일교육, 안보와 평화의 융합,” 이은숙 외, 『북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통일』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그럼에도 학교통일교육은 분명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면서 학교에서의 건전한 통일논의를 가능하게 할 통일교육 콘텐츠의 기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학교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분단 이후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는 민족성과 시민성을 조화롭게 발전하는 교육이 요청되었다. 그러한 사회적 요구가 그동안의 교육과정의 개정 속에서 민족 주체의식과 함께 보편적 교육을 중시하게 하였다. 우리 사회는 세계역사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민족적 긍지를 갖고자, 우리 민족정신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인간존중사상, 평화애호사상 및 조화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중심을 두었다. 그 이유는 남북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분단되었지만 통일을 슬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²⁾

학교통일교육은 분단에서의 반공과 자유 그리고 국가변영을 위한 노력으로 발전하여 왔다. 분명히 남과 북은 같등하였고 그 같등이 이념으로 강화되었음에도 통일의 근거를 대한민국에서 건설적으로 시도한 것이 의미가

2) 김기석 외, “남북한 분단교육의 형성과 그 극복-통일 후 교육통합을 위한 새로운 지평의 탐색” (서울: 한국연구재단, 2001), 국제협력공동연구 KRF-98-010-193.

있다. 대한민국은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선동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던 반공 시기를 지나 현실적인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논의와 숙고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통일문제를 반영하는 건전한 통일교육은 상대인 북한이 있기에 그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 남북한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의 동향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1993년 통일교육으로 자리를 잡고도 반공적 색채나 안보교육으로 통일로의 진척이 함몰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 내용을 갖고 있으나, 남북한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민족통합을 주장하는 입장들은 냉각되는 수가 많다. 그만큼 통일교육은 민족의 분단 이후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통일정책의 변천과정과 맞물려 전개된다.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통일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통일교육을 담고 있는 교과서 목표와 내용은 공산주의를 절대적인 악으로 보는 반공 입장의 정부수립 및 과도기, 통일과 대북안보를 강화하는 군부통치기, 민족화해와 화합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이행기로 변천하였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전개된 통일교육의 실재를 파악해 보면,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은 <표 1>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초기의 반공정신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군부 통치기에서의 학교통일교육은 반공을 뛰어넘는 공산주의 이념교육으로 학문적 접근을 통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교육은 민족 통합적 통일 지향에 방해가 되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자유 민주주의 우월성 교육에 대해 비판하는 교사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학교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요구를 발전적 방향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강화시키려는 통일교육 입장이 전개되고 있다.

〈표 1〉 교육과정에 따른 통일교육의 변천³⁾

| 시대 구분 | 정부수립 및 과도기 | | 군부 통치기 | | 민주주의 이행기 | | | |
|-------|--------------|--------------------------------|---|--|--------------------------------|--------------------------------|--|---|
| | | 제1차 교육과정 (1948~ 1963) | 제2차 교육과정 (1963~ 1973) | 제3차 교육과정 (1973~ 1981) | 제4차 교육과정 (1981~ 1987) | 제5차 교육과정 (1988~ 1992) | 제6차 교육과정 (1993~ 1997) | 제7차 교육과정 (1998~ 2007) |
| 내용 | 반공교육 의 기초 | 반공교육 의 재논의 | 승공통일 교육의 성립 반공교육 과 국가 안보교육 강조 | 공산주의 이데올로 기 비판 교 육의 실시 와 그 대항 적 논의들 의 등장 | 통일·안보 교육의 지향과 비판 | 민족 통합 적 통일교 육의 모색 | 통일교육 의 대안적 인식의 확 대와 남남 갈등의 증폭 | 자유민주 주의적 가치와 안보 강화 및 북한 인권 문제 접근 강화 |

학교통일교육의 변천은 그 내용상 반공교육과 승공통일 교육, 공산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그리고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의 단계는 통일교육이 민족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환적 사고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변천된 통일교육은 시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보수와 진보의 통일적 논리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교육은 평화와 안보, 주변정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 대비 등의 균형적인 원칙에 입각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전문가는 보수와 급진 사이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통일논리의 정착과 확산을 그

3)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박찬석,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내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한 논리가 수많은 통일교육의 변천에서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인 것이다.

III.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상의 학교통일교육 변천 과정을 통해 볼 때, 학교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의적 논의로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편에서는 반공주의적 잔영이 남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을 모색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 실례로 북한과의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타도를 주장하는 논리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지향하여야 할 ‘포용적인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방향의 실천’을 그 내용을 삼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1. 문제점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를 구축하는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단서가 통일교육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발전은 학교통일교육이 더 이상의 분과성을 띠지 말고 어느 정권에서의 교육 환경이든지 평온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보인 길들여지지 않은 북한

이해 논리나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한 보수적 응징논리들이 통일교육의 결정적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보수와 진보정권의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갖는 인식구조가 평화와 안보, 주변 정세에서의 통찰에 있어서 균형성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데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사고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단명한 인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민주당 정권이나 이후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분단 이래로 일관된 통일교육의 방향이 해당되는 정권의 부침이나 지나침에 의해 그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분명히 일관된 통일교육은 온건한 논리와 건실한 비판을 수용하는 정책에서 지향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그에 대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러한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잖게 통일교육의 실질적 통합력을 저해한다.

건실한 보수와 진보에 의해 운영되고 검토되고 수용 가능한 통일교육의 작동이 요청된다. 북한이 60년간 시종일관 그들의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현재, 우리는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진정성을 갖는 통일교육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구성은 각 정권마다 진보나 보수로 편향된 인사들이 표준적인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지속하게 하는 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실 통일교육을 작동시키는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과 통일교육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 측면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우리의 통일교육은 그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가.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점은 국제환경 및 주변정세, 남북한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황과 통일교육 내용의 문제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환경 및 주변정세가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구축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국제환경과 주변정세에 따라 심대한 영향을 받아 왔다. 통일교육의 목표나 내용은 국제환경 및 주변정세가 유연해질 때 다각적인 인식과 더불어 평화와 안보 중 평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국제환경 및 주변 정세가 냉각될 경우에는 통일교육의 방향이 주변 국가나 북한에 대해 경계하는 인식이 강화되며 평화와 안보 중에서 안보적 측면이 부각된다. 그러한 변화 과정에 있어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나 교사가 상황적 변화에 있어서 유연하지 못하며, 국제환경 및 주변정세가 조성하는 시기에 올바른 교육내용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구성에 있어서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국제환경과 주변정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통일교육의 전문가들은 변화무쌍한 국제환경과 주변정세에 대해 고정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예를 들면 세계관 및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유연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경향에 있어서도 통일교육을 배우는 학생들의 국제적 인식과 융합적인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생들은 국제환경 및 주변정세를 배우는 통일교육을 통해 성장한다. 학생들은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의 상황과 통일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인식의 기초를 통일교육을 통해 배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연하지 못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이되면 그 학생들은 통일교육이 다루는 문제에 해결력을 찾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교사 및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국제환경과 주변정세에 따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인식과 접근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둘째, 냉온적 사고로 인하여 변화무쌍한 남북한 관계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 대해 협소한 인식과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남북한 관계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럼에도 남북한 관계가 긍정적 대화로 이루어지면 그나마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의 공격적 상황이 드러나면 분명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반공교육이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통일을 향한 마음과 정서를 갖게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공교육의 실시가 가능하게 한 것은 남북한 관계의 휴전 상태지속과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더라도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에 관한 교육자료나 영상자료도 분명 북한 인식과 북한이해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 남북한은 분단되었고, 그러한 분단을 극복하는 길이 통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방해하는 냉각적인 남북한 관계는 해빙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친밀한 남북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견제하여야 하는 입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남북한 관계가 지나치게 냉각되거나 북한 정권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을 과시하는 경우도 겪어 보았다. 양자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정부의 노력, 민간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갖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 문제점 제기는 매우 정상적인 것이며, 그러한 문제 제기가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설명에 있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 접근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이견이 갈등을 야기한다. 남남갈등에 대한 극단적 보수나 진보의 시각은 우리 사회를 매우 긴장시킨다. 따라서 극단적 보수와 진보는 온건한 보수와 진보를 자극하여 다양한 성향의 교사가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단절적 입장으로 이념적 전선을 형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명 남남갈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그러한 갈등 양상이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로 직행하게 하지 않도록 합리적 주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적 접근은 남남갈등의 원인 제공자들도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련의 보수성향의 교사나 진보성향의 교사가 주장하는 통일교육도 건전한 시민의 통일인식으로 수렴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에 대해 보수세력이 불안하게 여긴다면 진보성향의 인사들의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한 진보세력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보수 성향의 인사들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분단 인식 구조에만 국한되는 곤란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즉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은 보수의 동조 없이 성공적일 수 없다. 또한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은 진보의 신바람 없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렇기에 학교통일교육은 실제적인 국민적 통합을 생각하며 건전한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수적 통일교육 논의나 진보적 통일교육 논의는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방향을 벗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나친 반공 주도적 사고방식이나 민족지상주의적 통일론에 근거한 논의로 빠지면 그 결과는 일방적인 통일논리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보수와 진보의 통합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통일교육은 건전한 시민교육에서 논의되는 교육적 시사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어야 한다. 분명히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보수와 진보가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과 동시에 보수와 진보는 자파의 논리에 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입장의 생각에 대해 개방적이며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민주주의 이행기 이후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은 민족화해와 화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 지향적 입장과 세부적인 국가안보적 입장이 통합적으로 교육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8년 이래로 1980년대 말부터의 통일·안보 교육적 성격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정체되어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통일교육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응징을 통한 무력의 우위에 입각하여 전개하는 안보논리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은 자제되어야 한다. 2008년 직전까지의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은 평화에 주안점을 두었던 흑백논리 구조였다면, 2008년 이후 학교통일교육은 안보교육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표출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및 안보논리를 이전보다 강화한 보수적 통일의지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아전인수적 논리들이 교과서통일교육의 전반에서 반영되었다 삭제되고, 평가 절하되다가 지나치게 평가 절상되는 내용으로 비화되고 있다.

분명 학교통일교육은 북한 당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해 배려를 하는 이중적인 북한인식이 존재한다. 그러한 통일교육의 북한인식은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분명 통일미래를 살아야 할 세대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암묵적으로 반통일 정서나 반복 의식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수정하는 열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전문가 집단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너무도 다양한 통일의 이견들을 잘 수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 행위자적 측면의 문제점

행위자적 측면에서는 정부차원, 교육당국 차원, 학교 관리자 차원, 교사 차원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균형적 인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일교육은 정치적 영향에 따라 지나치게 경도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통일교육은 1998년 전후해서는 이전의 안보와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뒤로 한 채 남북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논의에 방점을 두었다. 실증적인 사례를 보면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성공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보수세력에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통일 노력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러한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적 잣대를 두려는 새로운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였다. 이 정권은 남북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논의 보다는 실질적인 안보 태세와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통일교육은 평화적 대화와 안보적 태세라는 입장이 잘 조성되어야 하는 것에서 보수와 진보로 지나치게 나누어지면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 자료는 분명 ‘평화와 안보’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태도는 일방적으로 ‘평화적 대화’의 편중적 비교 우위를 두거나 ‘안보적 태세’를 강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향성은 통일교육을 주변색개로 비추어지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양자에 대한 비중 있는 생각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구도에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화합적인 통일교육 접근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교육당국은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분명히 실천적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대상인 학생들에게 통일미래를 찾게 하는 숭고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학생들의 군부대 방문과 땅굴 견학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귀중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실천활동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안보교육이지 통일미래를 담보하는 활동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평화적으로 북한인민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교육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스스로의 편향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접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한 방향이 통일로 향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통일의지를 폐쇄적으로 하게 하는 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 우리의 통일교육은 남과 북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부류를 제어하고 사회를 통합하려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교육이다. 그러한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적이라고 해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교육당국은 자신의 이념적 속성에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인식의 통일교과서나 통일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개방성과 수정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단절하거나 폐지하려는 방안은 매우 타당하지 않은 경향이라고 하겠다.

셋째, 학교 관리자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나 인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통일교육을 국가, 사회 그리고 학교가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국가적 미래의 통일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에 학교장은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님에게 당당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 현실이 열악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통일교육을 확실하게 추려 나가야 한다. 즉 학교 관리자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상황에서 보다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 분명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는 길을 찾고 나라의 안보를 철저히 보장하는 노력들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 관리자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성실한 진행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혹은 무관심한 태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태도는 결국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통일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학교는 통일교육을 진지하게 접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통일교육을 다루는 도덕, 사회 교과가 2009년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로 인하여 교실에서의 통일교육이 실시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기적으로 5월, 6월에 집중되어야 할 통일교육이 학년과 상관없이 1학년에 집중하여 배우기 때문에 진지한 통일교육 관련 내용에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사가 직접적으로 강도 높은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융통성 없는 교과운영 속에서 통일교육은 그 기반이 줄어들며 흔들리고 있다.

분명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태도는 단호하다. 2011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 설문 조사에 의하면 통일교육의 충분 정도에서 통일교육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은 8.3%, 통일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의 교사가 91.7%로 드러났다.⁴⁾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통일교육이 학교현장에

4) 서울교대 산학협력단, 『통일부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 중간보고회 자료』(2011.4.8.), p. 30.

서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해결 방안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지적에 합목적성을 갖는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겠다. 분명 통일교육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본 연구자는 대체로 커다란 중심고리에서 대한민국의 통일교육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 이유는 우리의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에 걸쳐 모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각각의 위치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통일관이 국민 통합적 입장을 갖는지를 국가 지도자, 교육계 인사, 통일교육 전문가, 학교 관리자, 교사들은 생각하여야 한다. 늘 국민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을 주장하지만 시간이 흘러 갈수록 국민들이나 학생들의 관심과 그들의 참여에서 멀어지는 통일교육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 올바른 통일교육이 잘 드러나는 길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교육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통일교육 내용이 문제이며 그 내용을 얼마나 절실하게 이야기로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통일교육의 문제 해결력의 하나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가의 문제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는 그 나이에 알맞게 설득되고 논의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그 내용이 평화이든 안보이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요소라면 그것이 추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좌우 이념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성을 갖고 합의를 이루려는 정신을 기초하여야 한다. 통일은 집요하게 좌파나 우파 그리고 북한의 호전성,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밝히는 것에 국한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안보 심의 논리는 분단 이래로 60년 이상 지속한 반공교육이나 이념교육에서 드러나고, 2010년을 전후한 북한의 호전적 실력행사에 의해 그 대립적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평화중심의 논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강조되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 갖는 문제는 보수와 진보는 상대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정도가 깊지 못하다.

예를 들면 진보세력은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당하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갖는 보수세력에 대해 공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보수세력은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면서 동시에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 진보세력이 북한에 대한 접근에서 보수세력에 대해 반기를 드는가를 심도 있게 파악하며 그 논리의 진정성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양자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자나 전문가들의 책무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일교육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대한민국의 통일 미래는 보다 안전하며,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국민 중심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통일교육 내용을 모색하여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은 2000년대 이후 통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전개되어 갔다. 이러한 학교통일교육이 그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교과교육이나 재량

활동 교육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일교육으로 한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앞서 북한을 알게 하는 노력을 통일교육 관계자는 강조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의 현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둘 수 있는 교육내용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내용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북한이해에 대해 올바르게 객관적인 인식을 중요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그동안의 현실적인 성과와 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더 학교통일교육적 기초와 실천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도약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문제나 통일 문제가 당사자의 노력에 기초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그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보능력과 평화적 심성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의식이나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민족문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나 냉소적 태도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학교급별 접근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아주 현실적인 교실의 문제에 대한 안보와 평화적 접근이 동시에 요구된다. 일상적인 경우에 대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통일교육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같은 공간을 생활하고 있는 친구의 이해이며, 주변사람에 대한 이해는 물론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에 대한 이해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그러한 이해 정도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실천하고 파악할 수 없는 협소한 내용으로 친구를 이해하려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자신의 민주적 소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친구와의 관계를 상하 주종 관계로 이해하는 습성을 버리게 하고, 양성평등적인 입장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요구된다. 이처럼 중학교 통일교육은 자신이 속한 교실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성립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조성되지 않았으면 조성될 수 있게 통일교육적 프로그램이 성립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는 우선 ‘남과 북의 평화’를 포함하여 주변 강대국과의 안보와 평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을 떠나서 평화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상호협력을 이해하는 학교통일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남북 평화통일의 출발선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이 힘의 우위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이 아니며, 승패의 게임이 아니라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 협력하여 이루어 가는 통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대학생이 되거나 시민이 되어서도 분단과 전쟁위기의 특수한 조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입장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⁵⁾

5) 박효중, “한국 보혁갈등에 관한 일고찰: ‘포스트 민주화 패러다임’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서울: 법문사, 2007), pp. 110~111.

IV.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과 미래 논의

통일교육이 안보이해와 평화 관심에 입각하여 전개하게 하려면, 기존 학교통일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욱 의미 있는 효과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제 학교통일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에서의 편안함을 주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진정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 통일문제나 북한이해가 학교 사회의 갈등요소를 포용하는 문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통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자유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더불어 평화와 안보를 학생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구체적 실천이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은 교실현장에서의 문제인 자율적 의사소통 및 인권문제의 적극적인 개선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일문제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과 그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안보적 능력에서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의 전형과 한반도 구성원의 통합을 실현되어 통일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학생들이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학교통일교육은 우리가 통일을 향해 공유되어야 할 기본바탕인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한 민족전체의 안녕을 위한 통일관, 올바른 북한관,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관 및 국가안보와 세계안보, 그리고 공동체 안보를 강화하는 안보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을 강화할 것이다.⁶⁾

이에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은 우리 사회가 보다 책임있고 실질적인 통일

논의의 틀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통일교육은 한반도의 긴장과 완화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적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평화와 안보의 기초가 건설한 통일교육의 강화 과목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첩경은 바로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의 강력한 의지로 학교통일교육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하는 학교 수업이 요청된다.

6) 고정식·길은배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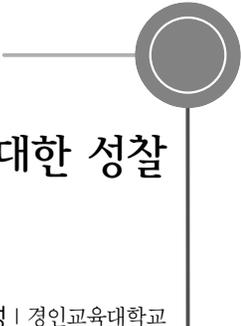
1. 단행본

- 고정식·길은배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통일·반공교육의 변천과정 분석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3.
- 김창근.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하나 될 미래를 위한 준비』. 고양: 인간사랑, 2007.
- 박찬석.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 배한동. 『새로운 통일교육론』.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Derr, R. L. 이종각 역. 『학교교육의 사회적 목적분류학』. 서울: 문우사, 1985.
- Wilson. 최재천·장대익 역. 『통섭(Consilience)』.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5.

2. 논문 및 기타자료

- 김기석 외. “남북한 분단교육의 형성과 그 극복-통일 후 교육통합을 위한 새로운 지평의 탐색.” 서울: 한국연구재단, 2001.
- 박종철. “민족주의의 개념 및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 민족통일연구원 편. 『통일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찬석. “통일교육, 안보와 평화의 융합.” 이은죽 외. 『북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통일』.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 박효중. “한국 보혁갈등에 관한 일고찰: ‘포스트 민주화 패러다임’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서울: 법문사, 2007.

- 서울교대 산학협력단. 『통일부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 중간보고회 자료』. 2011.4.8.
한만길. “북한 교육의 변화 동향과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편. 『북한교육발전
과 국제협력 심포지엄』. 2005.11.21.
- 황인표. “통일교육론 체계화와 도덕과 교육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학교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오기성 | 경인교육대학교

1. 서론

신정부 등장 이후 약 10여 년간 이루어진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통일교육 방향성 재정립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통일교육이 중립성과 객관성, 안보교육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2010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은 통일교육의 무게중심이 통일보다는 안보에 실려지는 모습을 다분히 보이고 있다. 안보차원의 병영체험을 학교통일교육에 확산해야 한다든지, 안보관련 선도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바로 그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교통일교육의 시수와 내용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중요 방향의 변화와 교육의 위축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며, 얼마나 가능할까? 이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우선 교육과정과 학교현장의 모습, 통일의식 등을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성찰해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1.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현재 학교통일교육은 주로 도덕,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래,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는 도덕, 사회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예체능 교과를 포함하여 모든 교과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¹⁾ 아울러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를 도덕과 시수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예컨대, 2007개정교육 과정에서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제외한 정규 교과활동을 위한 총 교육시수는 10,248시간이다. 이 중 통일교육 관련 도덕(바른생활) 및 사회(일반사회

1)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1997);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2011).

및 한국사) 교과 의 시수는 119시간 정도(약 1.16%)로 추산된다. 반면 2007 개정교육 과정 도덕, 사회과의 총 시수와 통일교육 관련 내용의 시수를 비교해 보면, 총 1,420시간 중 약 114시간 정도로서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

그러나 2009개정교육 과정에 접어들게 되면 통일교육 시수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개정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하고 있다.³⁾ 이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이 추가된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통일교육과 관련이 깊은 사회/도덕과는 초등학교의 경우 3~4학년 272시간(창체 204시간), 5~6학년 272시간(창체 204시간), 중

2) 이 수치는 연구자가 200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통일교육 시수를 분석하여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임. 반면 2009년 16개 시도 교육청 집계에 의하면 실제 교육시간은 학년당 평균 초등학교 5.4시간, 중학교는 4.7시간, 고등학교는 5.7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경,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구현』(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26.

3) 교육과학기술부, 『개정 교육과정 총론』(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41호, 2009).

학교의 경우 사회(역사 포함)/도덕은 510시간(창체 306시간),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역사, 도덕 포함) 35시간(창체 24시간)으로 운영된다.

통일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회/도덕과의 경우 2009개정교육 과정은 내용 영역별 공통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핵심개념 및 주제를 설정하여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내용 영역 간 중복부분을 통합 설정하며, 주제 중심 접근을 통해 교과군내 내용 영역을 통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 특히 학년군간·교과간 내용 연계성 강화 및 양과 수준의 적정화 차원에서 학년군·교과군을 고려하여 도덕과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의 필수 학습내용을 정선함으로써 교과 내용을 약 20% 정도 감축 조정이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은 3~6학년 동안 한 단원(제재)에서 골고루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학년의 하나 단원에서만

〈표 1〉 도덕과 시수

| 학년군 | 3~4학년 | 5~6학년 | 7~9학년 | |
|----------|-------|-------|---------------------|----------------|
| 적용 방식 | 1개 학년 | 1개 학년 | 1개 학년 (7 또는 8학년) | 1개 학년 (9학년) |
| 주당 수업 시수 | 2시간 | 2시간 | 3시간 | 2시간 |

* 출처: 강현석 외, 『2009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개발지침 연구(II)』(서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0), p. 117

*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은 통일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4)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교육과정 개편 구상(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제5차 회의, 2007.7.30); 강현석 외, 『2009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개발지침 연구(II)』(서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0), p. 87.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학교 또한 1~3학년 동안 1단원(제재)에서만 다루어지게 될 것이며, 더욱이 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은 도덕과뿐만 아니라 사회과에서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교육 실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실태는 교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질적 면접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2010년 통일교육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육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78.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변적 성격의 단체나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와는 달리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현장에서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사인 윤웅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육에 대해 흥미있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흥미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2.1%).⁵⁾ 그리고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응답자 중 그 이유로는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6.9%,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0%,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3.3%이며, ‘선생님의 설명 위주 때문’이라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이렇듯 어린이들은 학교통일교육에 대해 낮은 흥미도를 보이는 것은 통일교육의 내용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교수·방법이 주로

5) 통일의식 조사의 대상 어린이들은 인천시내 공립초등학교에서 2002년 2월 현재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6학년 어린이들로 남녀의 구분 없이 3개반(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윤웅상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pp. 8-14 참조.

강의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06년 손기웅의 “학교통일교육 현황과 개선방안”⁶⁾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며, 통일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 결과 북한의 공식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22%에 불과하였다.

현재의 수업 방식은 강의식교육(47.1%), 시청각교육(27.6%), 토론식교육(12.7%), 현장학습중심교육(3.4%)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수업방식으로는 현장학습중심(42.7%)이 가장 높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Cyber통일교육센터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통일부에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참여할 마음이 없다’(57.1%)의 분포를 보여 매우 저조한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면 초·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연수는 어떤 상황일까. 우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북한 및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 자라나는 세대의 눈높이를 고려한 통일교육 방법 등에 대한 원론적 및 각론적 이해를 돕고 통일교육 담당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직무연수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2006년 6월까지 초·중등 통일교육 직무연수는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 5월부터 통일교육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교육연수원은 없는

6) 손기웅,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차 청년위원회 결과보고』 (서울: 민주평통, 2006.6), p. 4.

실정이며, 간혹 자격연수 등에서 통일관련 과목이 일부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목 설정도 비교적 드문 실정이다. 다만, 지역통일교육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 개소 이후 지역별로 200~300여 명 교사를 동원하여 특강이나 세미나를 실시하는 통일연수는 1년에 1회 정도 있으며, 여기에 종전부터 실시해 온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이 실시되고 있다.

3. 통일의식

학생들의 통일의식은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경이 지난 10년간(1997~2010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⁷⁾ 통일의 관심이 1997년 71%에서 2010년 57.3%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통일의 필요성 인식도는 1997년 85%에서 2010년 66.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이 통일을 주로 한민족 의식, 전쟁위협 해소와 같은 당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보다 실질적인 필요성과 이익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한 영역이면서 통일로의 도정에서 필수적 요소인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⁸⁾ 6·25전쟁의 발발 연도가 1950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전체

7) 이미경,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구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18.

8)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 전국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중앙일보』, 2008년 6월 23일.

응답자의 56.8%,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6·25전쟁의 발발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 일본(13.5%), 미국(13.4%), 러시아(10.9%), 중국(3.4%)라고 응답했고, 심지어 2%는 남한이라고 답했다. 특히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28.4%), 일본(27.7%)에 이어 북한(24.5%)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

6·25전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통일교육에 있어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안보교육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애국심은 개인의 생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III.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1. 공감대 결핍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동북아 정세를 포함하는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한반도는 주변국들 간의 관계의 추이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경직과 이완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국익에 따라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중적 관점과 입장이 공존하

는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체제유지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한은 궁극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형제라는 입장의 이상주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 안보와 통일의 이중적 구조 때문에 통일교육은 관련자들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상대방 견해의 배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통일교육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 교원연수 실태는 이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학교 통일교육을 특정 교원단체 소속교사가 주도하는 통일교육과 정부지도에 따른 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하는 통일교육이 서로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곧 학교 사회 내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침서』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행 『통일교육지침서』 활용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 관련 교사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⁹⁾ 2000년부터 발간되어 보급되고 있는 현행 통일교육기본 지침서를 활용하고 있는 교원은 27%로 비교적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총 170명 응답). 특히, 43%의 교원이 『통일교육지침서』를 본 적도 없다는 점은 『통일교육지침서』의 보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총 48명의 응답자 가운데, 내용이 교육현장과 괴리

9) 오기성 외, 『통일교육지침 재정립방안연구』(서울: 통일부, 2003), pp. 11~13.

된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고, 내용이 반대하다는 응답이 27.1%, 내용이 난해하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침서의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2. 양 중심의 통일교육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이 실시되는 것 이외에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가장 흔한 형태는 북한이탈주민 초청 강연, 통일안보교육 관련 강사의 강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반화된 형태로 볼 수는 없지만, 최근 통일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통일캠프, 통일학교, 통일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통일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한다든지,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 본다든지 하는 체험학습 형태의 통일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참여 및 현장견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흔한 것은 오두산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임진각, 땅굴, 철의삼각전적지, 금강산, 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확대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함양하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형태의 현장학습은 일회성 ‘훈련’이 되기 쉽다.

관광차원의 통일관련 현장학습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이다. 현장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과정이 없으면 단순한 관광이 되기 쉽다. 통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임진각 등은 통일관련 현장학습의 좋은 장소이지만 촉박한 견학시간에 쫓겨 차안에서 과자를 먹으며 버스 창밖으로 보는 현장체험학습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¹⁰⁾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강연은 북한사회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이 있던 지역에서 체험한 경험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 그 전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실상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북한에 대한 불신감,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이는 통일무관심과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 통일과 연계된 고리가 없는 북한실상 이해교육이 실패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물론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강연뿐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관련 특강이나 교육청 단위의 통일교육 연수의 경우, 양 중심의 통일교육을 경쟁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통일교육 지역협의회가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각 협의회와 교육센터들은 참가인원수를 교육이수 수로 기록한다. 일반적 음악회에 통일관련 노래가 1곡 수록되게 하고, 여기에 참가한 지역 구성원 모두를 통일교육 이수자로 기록하는 것은 유명하면서도 보편적인 사례이다. 매년 이루어지는 전국 교육청 단위의 통일교육 교사 연수 또한 300~500명을 강당에 동원하여 몰아놓은 상태에서 강사 1명 또는 2명을 불러놓고 강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통일교육 실적 보고는 자랑스럽게 위로 보고된다. 그러나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통일의식은 더욱 저하된다. 통일교육을 받으면 학습자들의 통일의식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 통일교육계의 정설이다.

10) 최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탐색,” 『제3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008), p. 86.

3. 이상적 통일교육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부나 교육단체에서 주장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이 매우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해 통일교육 시수의 증대, 교과서 편재상의 재구성,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출제, 범교과화 등의 주장도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심지어 통일교과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 비현실적인 것이었으며,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도 이는 여실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면서 지금도 주장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범교과화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현실은 통일교육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교육과정이 국·영·수 등의 입시에 필요한 주요 교과목 위주의 학력 증진과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2009개정교육 과정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는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009개정교육 과정은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 과정의 재설정, 집중 이수제를 통한 교과목의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학생의 진로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교조와 미래형 교육과정 저지 공동대책위에서 조사한 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와 수학의 수업시수를 늘린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¹¹⁾ 이럴 경우 입시와 크게 관련이 없는 통일교육이 교육현장에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2009개정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을 범교과 학습으로 편성하고 있다. 물론 통일교육은 학제적이고 범교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단일교과에서 전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교과나 교과외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범교과 학습으로서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으며, 그동안 그래왔다는 점이다.

4.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통일교육

통일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접근방식은 크게 체계중심의 접근과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계중심의 접근이란 남북한의 이념과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체제, 교육체제, 통일정책 등과 같은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민사보다는 당사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치체제 중심의 접근에서는 대체로 남북한의 통치구조와 정치과정을 비교한 후 북한의 통치구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치체제의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제체제 중심의 접근의 경우도 주로 북한의 경제정책과 메카니즘, 그리고 특징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회체제 중심의 접근에서는 주로 사회정책 및 사회체제의 특징, 사회조직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교육체제 중심의 접근에서는 주로 북한의 교육정책과 제도, 정치

11)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09개정교육 과정의 영향으로 전국 중학교의 약 70%가 영어 수업 시간을 늘렸고, 57%는 수학 시간을 확대한 것으로 6일 조사됐다. 미래형교육과정 저지공동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antimire/>>(검색일: 2011년 2월 5일).

사상교육의 특성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내용을 학습자들이 학습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북한에 대한 지적 소양이 넓어지고 통일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는 데 기여하게 될까? 모든 부분에서 실패한 체제로서 알게 되는 시점에서 북한과의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까? 어쩌면 그나마 전달되었던 통일의 당위성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초청 강연을 통해 헐벗고 굶주리며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접하게 된다면? 그동안 희미하게 존재해 왔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급격하게 저하되게 된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남북한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배치될 수도 있는 이질적 문화에 의하여 채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삶을 지배하였던 공동생활의 원리(주로 전통적인 규범문화)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인정주의와 연고주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학벌주의 등은 대체로 동질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질성은 과연 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통합에 저해한다면 통일교육에서 ‘동질성 제고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통일교육의 대명제는 어떻게 될까?

비교적 통일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은 수업에서 남북한 청소년들의 동질성을 발굴하여 학습자들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통놀이, 예컨대 북한에서 단오 때 즐겨하는 놀이나 명절 때 하는 놀이를 소개하면서 남북의 놀이문화의 동질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그러한 놀이는 일상적으로 즐겨가면서 향유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환상적 동질성이 아닐까? 더욱이 실패한 체제라는 결론과 동질성도 별로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통일에 대한 희망은 무엇일까?

5. 욕심 많은 강요형 통일교육

1990년대부터 이미 지적된 내용이지만 통일관련 교과서 내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논의의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거대담론 위주의 통일논리를 당위적인 과제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예컨대 통일은 민족사적 과제이며 북한을 진정한 동포로서 인식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와 함께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래 교사의 글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분단 3세대인 학생들에게 북한주민을 ‘동포’ 라고 강조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만 한다고 등을 떠미는 것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며, 북한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지식은 별다른 가치가 없어 생활과 유리된 암기사항일 뿐이다.¹³⁾

강요형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또 다른 문제는 더욱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급별 성취기준으로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 것과 분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희망하고 이루려는 마음과 실천의지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 이해의 측면에서는 초보적 수준이지만, 북한의 위치와 상징, 사회적 특성과 북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12) 이미경,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구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39; 통일교육 지침서는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13) 김상국, “범교과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학교통일교육의 발전방향과 사례』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35.

통일교육의 성취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범위는 중등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분단과 전쟁의 문제, 통일노력 문제, 북한사회 이해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삶 문제, 통일미래상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단국 통일 사례, 북한 식량난 및 대북지원 문제, 남북언어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구성 범위가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전체와 동일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과 문화수준 등에 대한 고려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와 범위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의 경우 내용 범위나 수준을 고려해 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른다.

IV.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1. 공감대의 혁신적 제고

북한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재인식되고 재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개편,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반공교육이 통일교육의 전부였으며 국가가 통일교육과 그에 관한 담

론을 독점했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정부와 민간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¹⁴⁾ 통일교육은 정권의 성향과 통일정책에 따라 변화하겠지만, 이는 또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교육 방향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가 낮은 수준에 있을 경우 학교 통일교육은 혼란을 겪게 된다.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 대 급진 세력간의 갈등이 초래 되는 상황이라면 통일교육은 활성화될 수 없다.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던지 간에 새롭게 설정된 통일교육이라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교육전문가들(이론적인 전문가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임)의 자문을 받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¹⁵⁾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혼동을 극복해야 한다.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통일교육은 그 방향성을 표류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정책은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정치권력이나 개선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즉 초당적 형태의 통일교육 방향이 확고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곧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14) 조정아, “통일교육을 다시 조명한다,” 『민족화해』, 통권 제37호 (서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2009).

15) 오기성, “인천광역시 초등학교사의 인식을 통해 본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기전문화연구』, 제31집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2004), p. 187.

결단에 달려 있다.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는 것은 후진국 정치문화에 기인한다.

통일교육은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교과학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가치중립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나 산술적인 결합이 아니라 일종의 창조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창조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가치판단이다.

동양철학에서 우리는 체(體)와 용(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체(體)는 시공간의 변화속에서도 불변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용(用)은 그 근간은 체(體)에 기초하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體)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통일되기 이전까지 변하지 않는 중요한 명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현재로서 북한 이해의 이중성, 즉 경계의 대상(적)이자 화해협력의 대상(동포)이라는 점,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문제라는 점, 안보는 통일을 위한 수단이면서 통일 이후에도 국가존립의 수단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명제를 토대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통일교육지침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지침은 변하지 않는 체(體)의 토대 위에서 통일교육 현장과 교과서와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면서도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환경의 변화, 북한의 변화 등에 따라 통일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혼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갖대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정세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보편 타당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형태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2. 학습자의 생활세계와 밀접성 확보

학교통일교육은 통일환경 변화와 세대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 하되, 추상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통일교육, 당장의 통일을 ‘꿈꾸는’ 당위 론적 통일교육보다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로부터 출발해 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일교육 시범학교 보고서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북한 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이나 또래 청소년들의 생활에 집중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식적·추상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이러한 학생 들의 관심과 주변의 일상 생활사례와 관련된 북한사회의 여러 측면들에 대 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시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 다. 첫째, 통일교육은 시간적 차원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부터 출 발해야 한다. 예컨대 분단의 원인과 과정, 폐해, 교훈 등을 다룰 경우 무엇보다 현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컨대 학급회의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과 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 고, 여기에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능력을 갖추 고 있는지를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교실, 학교생 활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컨대 분단의 폐해 중 하나인 이산가족의 고통 문 제는 가정에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베풀어 주는 여러 가지 배려와 사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 등을 기초 로 이산가족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학습동기 차원에서는 아이들의 관심 등과 관련된 문화적 차원을

중시한다. 예컨대, 북한사회를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경우, 지도자, 권력구조, 이념 등의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또래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내용 구성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조건 당위적 접근을 통해 강요하기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에 당위적 접근을 첨부하는 방식에 따라 내용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국방비의 교육복지로의 전환, 국제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메달의 수, 월드컵, 육로를 통한 북한 지역, 나아가 유럽으로의 수학여행 등 통일이 가져다 줄 혜택의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여기에 민족사적 차원이나 동북아의 평화, 해외동포와 이산가족 등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당위적 측면을 부가하여 접근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화롭게 인식하도록 구성한다.

3. 현실을 인정하는 통일교육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해 통일교육 시수의 증대, 교과서 편재상의 재구성,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출제, 범교과화, 독립교과 설립 등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2009개정교육 과정에 따라 구성되는 통일관련 내용에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이나 통일교육 관련 정부기관이나 부처가 나서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개발시 통일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건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노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이외 보다 현실적으로 통일교육 시수를 부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음 교사의 제안은 매우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현행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보면 학년 연간계획을 세울 때 안전 교육관련 통합교육으로 연 15시간 이상을, 성교육으로 10여 시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육도 이처럼 연간 교육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적이지는 않더라도 통일교육 운영 내용이 포함된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안 예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¹⁶⁾

아울러 통일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일문제 관련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최근 통일교육은 교실에 앉아서 듣는 고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교육, 실천하는 교육,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교육의 형태가 지방자치단체나 통일교육 관련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형태는 전전세대, 전후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참가하여 실천하고 즐기으로써 통일의지를 고양시키는 데 있어 좋은 교육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통일교육은 전전세대, 전후세대, 386세대, 청소년 등이 모두 참가하여 진지하게 통일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앉아서 듣는 형태가 아닌 체험하면서 즐길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특성이다.¹⁷⁾

16) 위의 글, p. 185; 박관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교과교육이 되든지 범교과교육이 되든지 간에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인 이수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컨대 해마다 봉사활동 최저 이수시간이 있듯이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 이수시간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의무적으로 통일교육 영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박관주, “통일교육, 의지가 중요하다,” 『광주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자료집』 (2010.10.29), p. 86.

17) 파주시의 경우 민족의 통일염원을 연에 실어 날려보기는 ‘임진강 통일 연날리기 축제’와 시민들에게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정세 보고회’, 그리고 시민들의 통일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평화통일 기원 시민 걷기 대

통일을 테마로 하는 이러한 문화예술행사는 다가가기 쉽지 않은 통일문제를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올바른 통일의식을 형성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통일 및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한다. 또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어린이부터 한국전쟁을 겪은 기성세대까지 그 참여 대상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4. 통일의 비전을 가꾸는 통일교육

룰 메이커(Rule Maker)와 룰 테이커(Rule Taker)라는 용어가 있다. 전자는 규칙을 정하는 자요, 후자는 그 규칙을 따르는 자이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자. 우리 역사에 있어 룰 메이커의 입장에 있었던 시기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침략과 임진왜란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 강대국이 룰 메이커로서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려고 한 때가 아닐까? 일제 식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규칙의 강요를 넘어 우리의 규칙을 말살하고 자신의 규칙을 뿌리깊게 심어놓으려 한 시기가 아닐까? 그러면 IMF는 어떤 것인가? 이는 우리가 미국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IMF 체제 속에서 그 체제가 정한 규칙, 이른바 글로벌 시스템을 따라야만 하는

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예총에서 주관하는 '통일예술제'는 분단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예술축제이다. 이 행사를 통해 통일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통일의 당위성,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일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평화적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4년 6월호, pp. 82-83.

입장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IMF가 극복되었다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롤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다. 롤 테이커로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롤 테이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롤 테이커로서만 살 것인가? 더욱이 롤 테이커로서의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인가? 물론 단기간내에 우리가 롤 테이커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국에 롤을 강요하는 롤 메이커는 단기간내 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롤을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롤 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롤 메이커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지방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통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이 통일의 희망이 아닐까?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자신들만의 모습을 일구어 왔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서로 다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이질화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같음, 즉 동질성을 지녀왔다. 문제는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반드시 긍정적 작용만을 하지 않으며, 이질성이 반드시 그것에 부정적 기능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애니메이션 또한 다른 방향을 지향해 왔다. 우리의 경우 디즈니류의 영향을 받아 선이 뚜렷하고 때로는 각이 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 흔히 이를 유헤튼이라고 한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유럽의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 선이 부드럽고 장면들이 수채화 같은 인상을 준다. 이를 흔히 파스텔 톤이라고 한다.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헤튼과 파스텔톤의 창조적인 결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애니메이션을 창조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문화적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화로서 우리에게 돌아온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남북의 ‘긍정적 다름’ 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는 긍정적 다름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 문화선진국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의 희망은 환상적 동질성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 속에서 비전의 가능태로서 ‘진주’ 를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이곳에서 싹틔워야 하지 않을까?

5.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형 통일교육

통일교육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제외하면, 현재 통일문제와 관련한 수업에서 교사는 전수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흡수하고, 그 흡수한 지식, 정보, 기능을 학습지를 통해 재생하는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는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학습의 수동화·기계화·정형화가 수업의 활기를 떨어뜨리고 학습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드문 일이지만,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평가에 반영될 경우, 학생들은 교과서나 문제집 혹은 참고서를 통해 통일관련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데 치중하여 시험을 준비한다. 학생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교과서를 읽고, 정답을 맞추어 보고, 잘 맞추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훈련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창의성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통일교육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본질적 특징으로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 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 관련 문제는 과거의 사실과 관련될 경우 정해진 답변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해석 내용에 따라,

해석의 주체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있는 사실을 넘어 추상적일 수 있는 미래를 탐색할 경우, 예컨대 통일 사회의 비전이나 바람직한 미래상 등을 다룰 경우 고정된 답변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에서 이른바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가 적용될 수 있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문도 엄존하고 있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교육 내용은 결론을 빈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고민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며, 생각한다는 것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통일의 주역으로서 통일 사회를 이끌어갈 성장세대가 학습과정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통일을 일구어가고, 앞당겨 가며, 통일 이후의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가슴으로 통일을 소망하는 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 함양(인지적 측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과 적극성 함양(정의적 측면), 통일을 위한 실천의지 실천능력 함양(행동적 측면)이 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 내용, 방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오기성, “통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의 활용,”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9).

그러나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지적 측면에도 열정의 정의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 열정과 같은 정서적인 성향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 및 적극성이 판단능력과 관련한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지적인 측면이 정서적 민감성 및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민감성과 적극성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실천의지의 고양 및 실천적 행위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지, 정의, 행동의 영역에서 서로 공통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은 바로 정의적 측면, 즉 통일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적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여러 위급상황이나 딜레마 상황에서 학습자가 본능적으로 연민, 동정심을 갖게 되면 구원하려는 행동을 감행하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연민 또는 동정심을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한 정서를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지는 이차적 의사결정 과정을 갖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인지와 행동을 매개해 주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정의적 측면 즉, 통일을 학습자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소망하는 마음을 기초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진정성 있는 애정을 토대로 분단의 고통을 느끼는 정의적(affective) 과정이 있는 통일교육, 통일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소망하는 통일교육, 감동과 기쁨이 학습자의 가슴속에서 묻어나는 통일교육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⁹⁾

V. 결론

분단이 된지 거의 65년이 되어간다. 65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왔을까? 아니 우리의 노력은 통일에 다가가는 데 얼마나 기여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공교육의 형태든, 안보교육의 형태이든, 통일교육의 형태이든 통일관련 교육을 같은 기간 동안 실시해 왔다. 그러한 교육적 노력은 안보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더욱이 통일에는 어떤 기여를 해왔을까?

그동안의 긴 기간 동안의 통일노력과 다양한 통일교육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 심지어 젊은 세대의 교사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통일 의식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고시나 대학시험에 통일관련 문제가 출제되던 시기에 통일의식은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을까? 각종 통일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어느 교사가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에서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없다’라는 말을 한 때가 있었다. 당위적이고 의무적이며 강요적인 통일교육은 있으나 자발적이고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내고 그 소중함을 가슴깊이 새겨둘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그 교사가 말한 내용의 핵심요지일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건조한 통일교육적 행위를 지금도 전국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진정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출발하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1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덕과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 시각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교과와 달리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통일문제 관련 정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오기성 외. 『통일교육지침 재정립방안연구』. 서울: 통일부, 2003.
- 윤웅상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 이미경.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구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2011.

2. 논문

- 김상국. “범교과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학교통일교육의 발전방향과 사례』.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박관주. “통일교육, 의지가 중요하다.” 『광주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자료집』. 2010.10.29.
- 손기웅.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차 청년위원회 결과보고, 2006.6.
- 오기성. “인천광역시 초등교사의 인식을 통해 본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기전문화연구』, 제31집.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2004.
- _____. “통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의 활용.”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9.
- 조정아. “통일교육을 다시 조명한다.” 『민족화해』, 통권 제37호. 서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2009.
- 최 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탐색.” 『제3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008.

3. 기타자료

강현석 외. 『2009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개발지침 연구 (II)』. 서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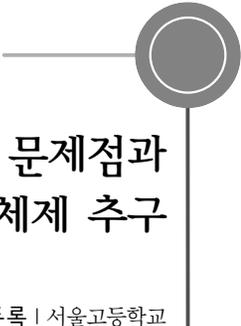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개정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41호, 2009.

_____. 『교과교육과정 개편 구상(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제5차 회의, 2007.7.30.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1997).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4년 6월호.

『중앙일보』.



현행 학교통일교육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체제 추구

송두록 | 서울고등학교

1.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유형 및 특성

학교통일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학교통일교육’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에 관한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연구자 자신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시기의 통일교육 관련 지도지침이나 통일교육 관련 교과지도 내용을 분석해서, 통일교육임에도 안보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북한 사회 실체가 실증적으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논의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이 어떤 법적 근거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유형의 학교통일교육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제2조). 그러면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며,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8조).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제23조)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과는 국어·수학·영어의 기초교과와 사회 및 과학의 탐구교과, 체육·예술교과, 그리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²⁾ 등의 생활·교양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 1) 통일교육지원법 동 조항 제3항에서는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고 대학에 관한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법령적으로는 통상 우리가 언급하는 ‘학교통일교육’에서 유아통일교육과 고등통일교육은 제외되어 있다.
 - 2) 교양교과목으로는,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등이 있는데 이 교과목들 가운데에서도 통일교육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1〉 고등학교 관련 교과목 내 통일교육 내용

| 교과 | 통일교육 내용 |
|--------|--|
| 도덕 | 민족 공동체 형성의 원동력으로서의 민족애 (총 4단원 중 III단원 국가와 민족의 윤리 중 2과 민족과 윤리, 3절: 북한주민들도 한민족 공동체의 구성원, 의식 조사 결과) |
| 윤리와 사상 | 사회주의 사상, 민주주의, 자본주의, 통일한국의 실현 (총 4단원 중 IV단원 4과 한국의 진로와 민족적 과제 중 한 항목 ‘통일한국의 실현’: 통일 한국의 전제조건—교류와 협력 등, 남북한이 함께 추진해야 할 가치—자유, 평등, 다원성, 배려 등) |
| 근현대사 | 광복 이후, 분단 과정, 6·25전쟁 관련, 북한체제 전개, 남한 통일 정책과 남북교류 |
| 한국사 | 위 내용과 유사 |
| 한국지리 | 북부 지역 자연 환경 및 인구 분포, 북한 개방정책, 남북교류 현황 |
| 정치 | 한반도 평화유지의 어려움과 과제(서해교전) |
| 경제 | 북한 경제의 침체, 통일 한국 경제의 미래 (총 5개 단원 중 V단원 3절—통일 초기 경제 문제 예상, 통일비용, 남북경제공동체의 필요성, 세계 속의 통일 한국 위상) |
| 사회문화 |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총 4단원 중 VI단원 3절 (2) 통일 문제의 이해와 준비: 통일의 필요성, 남북의 통일 방안, 통일을 위한 사회문화적 과제) |
| 국어 | 2학년(‘학, 광장’이라는 소설), 통일 관련 시 소개 |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고등학교의 관련 교과목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³⁾

3)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어지는데, 전문교과는 농생명 산업계열, 공업계열 등의 전문 교과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현행 학교통일교육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교과 역시 위 교과들과 함께 선택교

각 교과 시간에 가르치는 통일교육 내용들을 보면 해당 교과목의 주요 내용들과 관련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역사 교과목에서는 분단 이유 및 과정을, 국어 및 사회 교과목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정치·경제 문제들을, 도덕과 윤리 사상 과목에서는 통일의식 등을 다루는 식이다. 이는, 예전에 도덕 교과에서 종합해서

〈표 2〉 서울시교육청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2006년~2010년)

| 년도 | 학교명 | 주제명 |
|------|----------|---|
| 2006 | 용강중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 2007 | 마포초 | 찾아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 꿈 키우기 |
| 2008 | 오금초 | 체험학습 중심의 통일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기르기 |
| 2008 | 서서울생활과학고 | 통일시대 대비 학생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 방안 모색 |
| 2009 | 공연초 | 학생참여활동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 능력 함양 |
| 2009 | 신목중 | 학생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방안 |
| 2009 | 서초고 | 토론 및 나의 주장 발표를 통한 통일의 필요성 교육 |
| 2010 | 전동중 |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의 꿈을 키우는 실천체험중심 통일교육 운영 |
| 2010 | 서서울생활과학고 | 통일준비를 위한 관심도 고취와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방안 모색 |

과가 있기는 한데,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들뿐이어서 이 역시 현행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되기는 어렵다고 이해된다.

가르치던 내용을 그냥 각 교과목들의 특성에 맞게 분산해서 가르치고 있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근현대사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각 교과목의 제일 뒷부분에 통일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있어서 마치 군더더기처럼 덧붙여져 있다는 것이며, 교육계의 관행상 담당 교사들이 이 교육내용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별도로 연수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그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실태는 어떠할까. 일반적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통일부 등으로부터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표 2>에서처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교과 외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통일관련 시설 방문
(제3땅굴, 임진각, 통일전망대, 철책선, 통일교육원, 서서울생활과 학교 등)
- ② 통일의식 제고 체험활동
(북한 영화 보기, 통일 글짓기, 나의 주장발표대회, 포스터그리기, 북한 음식 만들기 등)
- ③ 강연회
(탈북인사, 북한 전문 강사 등)

이와 함께 통일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통일교육 시범학교들에서는

통일 관련 각종 자료 탐구, 조사를 통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구안·적용하거나 교원과 학부모의 통일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연수를 실시해 왔다.⁴⁾

지금 우리나라 일각에서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 공론화 사업의 주된 아이টে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학교통일교육 내용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최근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이탈학생 적응지도 교육이 교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이탈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그들이 장차 통일 이후에 남북한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탈학생 적응지도 교육은 그런 기대 외에도 북한이탈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으므로, 그런 그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지방 확보라는 동기도 있고, 또 다르게는 그들이 장차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4조). 동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정책적 지원노력과 이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수

4) 그러면서 법령에 분명히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각 정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추구하는 목표를 통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해 왔었다(예: 반공교육 여부 논쟁 또는 친북 반미교육 여부 논쟁 등).

용으로 북한이탈학생들에 대한 학교급과 학년배정이 우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학교 적응지도 매뉴얼을 이미 여러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서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들을 위한 통합 지도 교과서 등도 마련하고 있다.

또 다르게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별도 예산을 조성해서 남북한 교육통합을 추구하는 본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와 함께 북한이탈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교사풀(Pool)을 조성하여, 그들을 연수시킨 다음 여름·겨울방학 때 3박 4일씩 1:1 멘토링 지도 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육청 나름대로 자체적인 통일교육 노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학교통일교육은 정규 학교에서보다는 ‘대안학교’ 또는 ‘홈공부방’ 이라고 불리는 유사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유형의 학교통일교육의 상당수는 종교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이를 정규 학교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이때껏 남한에서는 ‘학교통일교육’ 을 두 가지 체제로 진행시켜왔다. 하나는 현행 법령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기관에서 교과 또는 비교과 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 을 가르쳐 온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학교통일교육’ 이지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하나의 체제는 북한이탈학생을 대상으로 남한 교원들과 대안교육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학교적응을 도우면서 남북한 통합교육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러한 학교통일교육체제의 유형과 특성을 간단히 나타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현행 학교통일교육체제의 유형과 특성

| 구분 내용 | 구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 | 북한이탈학생 적응지도교육 |
|------------|---|--|
| 주된 교육목표 |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 북한이탈학생의 남한 학교 교과학습 및 생활 적응 |
| 주된 교육대상 | 남한 초중고등학생 | 북한이탈 초중고등학생 |
| 주된 교육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민주주의 • 민족 공동체 의식 • 건전한 안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사회문화 • 남한 교과내용 • 남한 학교생활 • 심리적 안정 지도 |
| 주된 교육기관 | 제도적 공교육기관 | 일부 교원들과 대안교육기관 |

II.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교통일교육체제

지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는 북한의 식량난과 심각한 경제난, 김정일의 건강 악화, 그리고 무리한 3대 세습체제 전개 등으로 북한의 체제위기 징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 환경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뜻에서, 미래지향적인 학교통일교육체제는 구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과 북한이탈학생 적응지도 교육 유형의 내용과 특성을 참고하되 다음 〈표 4〉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4〉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교통일교육체제

| | |
|------------|--|
| 주된 교육목표 | 통일한국인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가치관·태도 함양 |
| 주된 교육대상 | 남한 유초중고대학생 및 북한(이탈) 유·초·중·고·대학생 |
| 주된 교육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 보편적 가치 • 민족 공동체 의식 • 남북한 교과내용 • 남북한 학교생활 |
| 주된 교육기관 | 제도적 공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보조) |

이는, 지금 비록 지지부진한 듯 하지만 최근까지의 개성공단의 발전상황을 지켜보건대 앞으로의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화해·교류 협력 단계를 쉽게 넘어설 것을 예상하고 통일 무렵 및 통일 한국 이후를 상정한 것이다.

이 때 쬐이면 남북한 통합 이후 새로이 대두될 남북한 간의 갈등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북한 국민 간에 존재하는 배타적인 이질감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전국의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남북한 이주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의무·역할 분담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 수 있으려면, 예컨대 그동안 북한에서 대중 무산계급 혁명에 기반해서 역사를 인식해 온 것과 남한에서 불교 및 유교문화에 기반해서 닦아 온 역사관의 관점차이를 해소하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발표지는 위와 같은 학교통일교육체제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학교통일교육체제와 실제

본 발표자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학교통일교육은 일부 사람들에게 관념적으로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실제적으로는 남북한에서 공히 실종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림 1〉은 남한의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도이다. 이를 보면 놀랍게도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담당자나 담당부서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남한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내용을 총괄하는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해당 과의 29개의 업무 내용들 가운데 ‘통일 대비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사회의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이 있기는 하다. 그런 것을 보면, 〈그림 2〉에 있는 교육과정과의 업무 분담자들 중 범교과학습⁵⁾을 담당하는 교육연구사가 통일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유추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 7천만 명의 생존 및 생활 문제가 결정되고, 장차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의 장래가 결정된다. 좀 더 세세하게는 만약에 4~5년 후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남북한 간의 교사들 몇 만 명이 재직하고 있는

5) 사실, ‘범교과학습’이라는 용어는 이미 폐기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용어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교과·특별활동·재량활동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량활동이 교과 재량활동과 범교과 재량활동으로 나뉘어져서 범교과 재량활동 때 통일교육이나 경제교육, 철학교육 등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분담표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어서 아마 그 업무 담당 연구사가 통일교육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그림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업무 분담

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 업무 총괄
 팀장 02~2100~6477 교과서기획팀 총괄
 팀장 02~2100~8637 동북아역사대책
 장학관 02~2100~6205 교육과정 개정 및 관리
 교육연구관 02~2100~6472 교과용 도서 개발 총괄
 전산사무관 02~2100~6204 주5일 수업제
 교육연구관 02~2100~6469 교과 교육과정 개정·관리
 행정사무관 02~2100~6475 교과용 도서 업무(발행 공급, 법령 제·개정, 예·결산 등)
 행정사무관 02~2100~6474 e~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교육연구관 02~2100~8695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교육연구사 02~2100~6206 교육과정 후속 지원
 교육연구사 02) 2100~8638 에듀넷 시스템/정보/도덕
 교육연구사 2100~8694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육연구사 02~2100~8639 범교과학습
 교육연구사 02~2100~6207 특수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교육연구사 02~2100~8720 인정제도개선 및 수정보완 지원
 교육연구사 02~2100~6208 독도 문제 대책 및 중, 일 언론동향 분석
 교육연구사 02~2100~6469 전문계고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홍보
 교육연구사 02~2100~6326 창의적체험활동
 교육연구사 02~2100~6473 국정도서 편찬업무
 교육연구사 02~2100~6476 교과용도서 구분 및 인정제도 내실화
 교육연구사 02~2100~8722 검정도서 제도 개선 지원
 교육연구사 01~2100~6326 교육과정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경제교육, 한자교육
 교육연구사 02~2100~8640 국정도서 편찬 지원
 교육연구사 02~2100~8721 국정도서 편찬 지원
 교육연구사 02~2100~8726 역사교육과정/학교자율화 추진/중학교교육과정
 주무관 02~2100~6204 성과관리, 사업비 결산 및 특별교부금 정산
 주무관 02~2100~6468 교과용 도서 발행 공급
 주무관 02~2100~6209 동북아역사대책팀 예결산 및 국회업무
 주무관 02~2100~6471 교과서 관련 단체 지원
 주무관 02~2100~6329 과내 서무, 지출업무
 주무관 02~2100~6470 일반행정 업무 및 문서관리

곳을 떠나서 남한 또는 북한에 가서 근무해야 할뿐더러, 남북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보급되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한 명의 교육연구사가, 그것도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서 기획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만의 하나, 혹시 통일 독일처럼 예견하지 못한 통일이 갑작스레 닥쳐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남한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를 대량 생산해서 북한학생들에게 보급하고, 남한 선생님들 2~3만 명을 차출해서 단기연수시킨 다음에 북한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다. 이러한 선풍적인 교육통합 노력이 통일독일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 체제 추진의 어려움은 교육 자치제가 적용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2〉에서처럼, 서울시교육청 소속 2,200여 개의 학교 교육현장의 학사 지도를 맡고 있는 책임교육과와 교육과정과의 주요 업무내용들 가운데 학교 통일교육이 빠져 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2실 2국 9과 중 학교정책과의 18명의 장학사 또는 주무관이 담당하는 122개 업무내용 가운데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기는 한데 그 장학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7개 업무내용 중의 하나로서 맡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4〉 참조). 그런데 그 장학사가 맡고 있는 다른 업무들을 보면 그 하나 하나가 업무부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닌 것들이다. 통일한국인을 기르기 위한 막중한 학교통일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좀 더 검토해봐야 할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실종현상은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그림 5〉는 본 발표자가 2006년도에 북한

〈그림 3〉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 주요 업무 내용

[책임교육과 주요 업무]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기본학습 능력보장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및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 존중과 배려의 생활교육 지원
- 소통과 배려, 자율과 참여의 민주시민교육
-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운영을 통해 교육평등, 평생교육 이념 구현

[교육과정과 주요 업무]

-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 과정의 질 제고
- 초등장학, 초등학업성적 및 학력평가, 초등교수학습개선
- 중등장학, 독서 토론 논술교육, 교수학습개선(교과교실제, 수준별이동수업)
- 학업성적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전국연합학력평가
- 무상 교과서 지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그림 4〉 강원도교육청 통일교육 담당 장학사의 주요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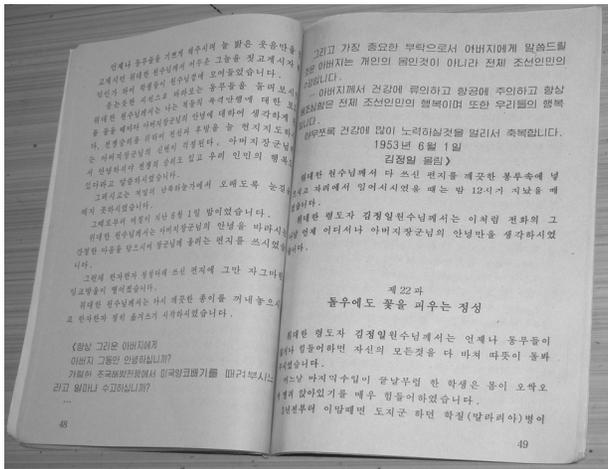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업무
- 창의경영학교
- 학력관리 및 학력향상 관련 업무
- **남북교류, 통일교육 관련 업무**
- 교과교육연구회 관련 업무
- 학적 및 학업성적 관리(생활기록부 포함) 업무
- 학이시습 관련 업무

평양의 모란봉 제1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획득한 자료인데, 학생들 왕래가 잦은 교실복도 벽에 부착되어 있었다. 북한 교육체제의 특성상 김일성의 어록을 모란봉 제1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그냥 쉽게 보고 넘길 리는

〈그림 5〉 모란봉 제1중학교 복도 벽에 부착된 김일성 어록



〈그림 6〉 평양 제4소학교 4학년 학생의 국어 교과서



만무하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림 6>은 평양 제4소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펼쳐 놓은 교과서인데, 좌측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렬찬 해방전쟁에서 미국 양코배기를 때려부수느라고~’ 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북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통일 이후의 남북한 통합을 대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IV.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체제 추진이 어려운 이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여기에서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정치적 과열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 정파에 유리하게 ‘민족통일’을 정치구호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개념은 통일지상주의자들의 환상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의 우상화(偶像化)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교육관료들의 무소신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관료들은 권력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 성향에 맞추어 통일교육 내용을 편성하고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도록 했었다. 그러다가 집권 세력이 바뀌거나 또는 힘 있는 특정 정치인이 통일교육 내용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 자신들의 승진이나 진급 등에 악영향이 끼칠 우려가 높은 업무가 된다. 교육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 교육 관료들로서는 당연히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다.

셋째, 교사들의 지도 전문성과 지도의지 부족 때문이다. 현재는 6·25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 교직의 주된 구성원들이다. 그들은 남북한이 분단된 뒤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그러한 만큼, 구태여 대학입시나 미래의 진로 설정과 연관도 없는 통일교육내용을 강조해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게다가 통일교육 관련 교과내용들이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배경지식이나 교과 지도의 유의점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냥 자신들이 학생 때 들어서 알고 있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재편집해서 ‘전달’ 할 뿐이다.

넷째, 북한체제 때문이다. 북한체제는 이때껏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 아래에서 계급성·혁명성·투쟁성을 강조해오고 있을 뿐이고, 체제위기에 가까운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어서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특유의 호전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비호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자체 교육제도도 붕괴되는 위기상황인 만큼 북한이 자체적으로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을 할 의지와 여력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통일교육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통일교육은 여러 중앙부서나 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자의적이며 무체계적으로 실행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지나치게 중복되면서 낭비되는 요인들이 많았다. 아니면 통일한국 대비 차원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적 가치들은 생략되면서 오히려 비교육적 지식이나 가치들이 강조·주입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V.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체제 추진 필요

본고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학교통일교육 컨트롤 타워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남북한의 현재 통일환경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남북한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는 학교교육 전문가들로서 팀을 구성해야 한다. 물론, 정치적 편향이 없는 전문가들이어야 할 것이며, 그 팀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둘째, 화해·협력 단계를 넘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비용·분단비용 논쟁이나 남북한 경제교류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는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각 교과내용을 현장교사들이 숙지하고 통달할 수 있도록 연구 체제를 구성해야 하며,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교육을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새롭게 마련된 교육과정을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남한 교사들의 현직연수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에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교사나 북한의 예비교사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한 학습마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어마을과 같이 가칭 ‘통일한국인 체험마을’을 곳곳에 만들어서 남한학생들이 북한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의 체험과 함께 통일한국 시대의 생활상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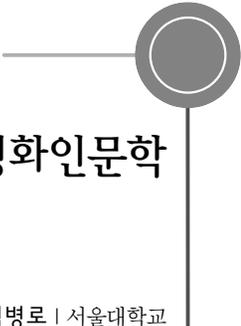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반드시 북한학생들을 위한 그 반대의 체험마을을 미리 구안해서 실험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을 보는 마음이 한결 덜 조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 현장이 하루빨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체계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제적 사회통일교육

- 통일교육과 한반도형 평화인문학 | 김병로 • 서울대학교
-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만남 | 전영선 • 건국대학교
- 방송에서 바라본 통일교육 | 공용철 • KBS
- 분열과 통합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전망: 지구사적 관점에서
| 권희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일교육 | 정용길 • 동국대학교



통일교육과 한반도형 평화인문학

김병로 | 서울대학교

1. 평화인문학의 필요성

21세기 한반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다음 어떤 비전을 갖고 앞으로의 백년을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시대에 들어서 있다.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동북아 지역화への 적용, 지속적 성장동력의 확보, 실업문제의 해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의 대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준비 등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합적 사고와 미래를 대비하는 전망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영역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큰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미래는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국

가건설, 산업화, 민주화와 같은 수준에서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조망할 큰 전략적 목표나 비전은 무엇인가? 역사적 전환기에는 즉각적인 대응역량보다도 큰 흐름을 주목하는 총체적 예지의 발휘가 중요하다. 주어진 모델과 조건 하에서의 기술공학적 계산으로는 모델과 조건의 변화 자체를 통제하거나 이끌어가기 어렵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친숙한 모델을 넘어서 정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가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우리 세대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고려하는 감각이 요구되며 한반도의 남쪽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 및 동북아와 전지구적 공간을 아우르는 사유의 폭이 필요하다. 한국적 문제의식 못지않게 세계사적 문제의식이 포괄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 그런 근원적인 깊이를 지닌 한국적 비전이 만들어질 때 21세기 한반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형 평화인문학은 바로 인류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갈등과 평화의 문제를 한반도의 맥락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종합적 기획이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비전으로서의 평화(peace)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 프로젝트인 것이다. 한반도형 평화인문학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론적 문제의식까지 포괄하는 문명론적 평화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필요한 담론과 제도, 가치와 문화의 창출을 지향하고자 한다.

평화인문학이 지향하는 시도는 20세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되 21세기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가치지향적 전망을 포괄하는 융합적 연구가 될 것이다. 전쟁방지나 분쟁해결에 주목했던 초기 평화학이 현실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주력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단은 인간의 심성, 가치와 정서, 담론과 습관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인간

활동의 전 영역에서 평화를 탐구하는 평화인문학을 지향한다. 평화를 주로 전쟁억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이 국가 간 관계에 주목한데 비해 평화학은 평화를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협과 연관시켜 광범위하게 검토 하며, 국가 이외의 개인과 공동체, 문명과 담론질서까지를 연구의 대상에 포괄한다. 평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그것을 가능케 할 철학적 사유, 예술적 상상력, 종교적 가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미시/거시, 제도/담론, 이론/실천, 보편/특수, 분석/가치의 차원들이 이 평화인문학 내에서는 통합되고 소통되며 융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화인문학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평화연구의 흐름과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연결해 ‘21세기 한반도발 평화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지구보편적 가치이고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그 논의 속에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녹아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그러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 변형작업이 불가피하다.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는 남북분단의 구조와 이와 연관된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통해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간규모 국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평화론의 세계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대결구조, 평화체제 논의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 생활양식, 담론, 습관과 사유의 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수행할 것이다.

한반도형 평화인문학이 지향하는 평화인문학은 현실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학적 함의와 중장기적인 가치형성, 문화 창조, 비전구축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창조적 결합을 이루고자 한다.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론은 불가피하게 통일, 안보, 군축,

비핵화 등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과 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과학적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평화학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실천적 차원에서도 단기적인 대응론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학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 종합적 구상, 문명론적 실천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역사적 비전이며 이는 인간의 제 조건을 고려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어야만 얻어지는 큰 그림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종교 간의 공존, 다른 정체성에 대한 관용, 생태적인 평화 형성, 성별 평화 등은 물론이고 기후변화나 광우병, 테러리즘과 정체성 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명적 대안형성도 연구의 내용에 포괄될 것이다. 이런 종합적 평화연구를 통해 테러리즘의 위협과 생태환경의 위기, 기술합리성의 부작용 등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이 요청되는 21세기형 인문학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한반도형 평화인문학

평화의 문제는 매우 절실한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민족적,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폭력과 증오, 갈등을 관리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고 민족주의, 종족감정, 인종차별, 종교갈등, 문화적 상대주의 등 문명론적 평화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울리히 벡은 현대를 ‘위험사회’로 진단하고 근대문명 자체가 낳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9·11 이후의 테러위협은 이전과는 달리 국가간 전쟁과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폭력, 불안, 갈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결국 이런 점에서도 평화의 구현은 새로운 문명적 원리의 구축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평화담론은 지나치게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과 정책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한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의 대립, 안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평화는 늘 전쟁억제, 안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남북한 간의 첨예한 논리대결의 맥락에서 매우 정치화된 개념이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평화라는 담론은 평화체제를 둘러싼 남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가 되었다. 북한의 ‘평화통일안’과 남한의 ‘선평화 후통일론’이 팽팽하게 대립해온 맥락,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대립구조는 한국에서의 평화논의가 지닌 복잡한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도 6자회담을 둘러싸고 북한은 평화체제 논의를 선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바, 분단체제하의 평화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한반도형 평화인문학은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과제라는 전제 하에 학제적인 인문학적 탐구를 수행하려 한다. 분단된 한반도의 조건에서 유래된 삶의 방식, 의식구조, 집합적 아비투스가 지닌 문제점을 해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융합적인 지식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추구되어온 한국형 근대성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면서 동시에 서구적 탈근대론이나 다원주의의 틀로 포착될 수 없는 한반도적 미래가치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와 통일의 구축은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함께 아우르면서 새로운 문명사적 비전을 구성해내는 종합적 인문학의 주요과제이다.

평화와 통일은 구조적인 제도의 차원과 미시적 삶의 영역을 동시에적으로

포착하는 총체적 인문학적 접근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을 배제한 구조분석도 곤란하고 제도적 변수를 무시한 인간론적 접근도 불충분하다. 구조와 의식, 제도와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으로 평화와 통일을 접근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체제나 구조가 부여하는 조건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심성이나 의식이 함께 결합하여 형성되는 역사적 ‘복합구성(configuration)’을 주목한다. 평화와 통일은 단일한 구조나 제도를 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삶의 양식, 집합적 아비투스적 전면적 전환을 동반하는 복합적 상호작용이자 상승적 교호과정의 문제이기에 그것의 ‘복합구성’을 포착하고 사유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형성과 통일문제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창의적인 접근을 수행한다. 평화형성은 보다 세계사적이고 보편적 지향을 갖는다면 통일은 보다 한반도 특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적 상황은 평화를 포괄적으로 구상하지 않는 통일이나 통일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평화 모두 적실성을 얻기 어렵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보편적인 평화학이 한반도에 접맥되기 위해서는 매우 지혜로운 통일학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평화학과 통일학은 한반도적 상황을 경험적 자원으로 하여 창조적인 21세기 문명적 비전을 인류 앞에 내놓는 지적 실험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를 위해 인문학적 성찰과 서사 및 사회과학적 분석과 지식의 융합적 생산과 확장이 필수적이다.

평화인문학은 인간의 삶 속에서 평화의 가치와 평화지향을 담는 아비투스로서의 학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이는 21세기 통일을 앞둔 한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될 것이다. 평화가 21세기형 새로운 삶의 양식의 기초가 되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가치지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대응들을 조율하고 성찰하는데 필요한 지적 준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평화인문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III. 평화인문학 연구의 기본관점

1. 통일과 평화: 학제적 인문학의 대상

한반도형 평화인문학은 통일과 평화의 가치를 인문학의 대상으로 정립 하려는 시도이다. 지금까지의 통일론이나 평화론은 대체로 학제적 인문학의 주제로 발전하지 못했다. 통일과 평화가 추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면서도 실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요한 가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양자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크지 않다. 추상적으로는 통일론 속에 평화의 가치가 포함되고 있고 평화사상 속에 통일 지향이 당연히 되고 있지만, 사회적 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양자는 고립적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평화의 가치는 여러 학문영역에서 간학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담론과 제도를 연결시키고 사회과학과 소통하는 종합적 인문학으로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학제적 인문학을 통해 통일·평화의 문화와 제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기존 사회과학적 연구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그 연구 관점들을 기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통일과 평화의 문제가 단지 분단의 정치경제 구조나 법제도적 통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자연과 사회에 구체적인 삶의 기반을 둔 화해와 상생의 문화 형성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간의 경험과 가치 및 아비투스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이나 분단이 단순히 이데올로기나 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단 사회 간 그리고 두 분단 사회 내 구성원 간의 이질화와 적대성이 강화된 삶의 문제이기에 평화형성과 분단극복의 연구는 인문학적 인간 연구에 기초한 근원적 성찰

과 새로운 서사와 담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형 평화인문학은 분단 현실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을 수용, 확장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서와 심성, 경험과 기억, 가치와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역사학적,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 분단과 분단극복에 대한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제적 연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 사업은 인문학적 연구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과학적 분석을 포함하는 학제적이고 융합학문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방법론적으로 견지한다.

이렇게 본다면 통일·평화에 대한 이 융합학문적 연구는 기존의 인문학적 연구에 단순히 통일의 제도화나 평화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기계적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통일·평화를 가로막는 구조와 미시적 삶의 상호관계를 문제로 삼는 것이고 통일·평화의 부재와 구조적 현재에 대한 분석을 유지하면서도 그 조건의 비동시적인 복합적 역사성과 인간학적 차원들을 포착하고 결합시키는 인식과 논의이다. 결국 그것은 통일·평화에 대한 고답적인 기존의 논의에 사람들의 숨결과 아우성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문학적 상상이나 철학적 사유로만 존재하던 통일과 평화의 서사와 담론에 건실한 과학적 인식의 뼈대를 보태는 일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형 평화인문학은 이미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양분된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연구의 폐쇄적 틀을 넘어서는 창조적 성격을 지닌다.

2. ‘통합적 관점’: 한반도/지구적 시각

평화라는 지구보편적 담론과 가치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려면 통합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남북 분단의 대결적 구조와 이와 연관된 한반도 주민들의 복합적인 삶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보편적 규범과 이데올로기적 전제에 기초한 단선적 연구와 논의들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남북 간의 분단과 체제의 대립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통일·평화 가치의 한반도적 ‘특수성’이 온전히 해명되지 못한다. 통일·평화가 한반도에서 문화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평화부재의 중층적 차원과 남북분단의 복합적 구조가 실은 남북 상호간의 대립적 규정과 상호 연루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제도와 구조 및 대결적 정책과 체제의 발전에 남북한 상호간의 배제와 대결 및 영향과 규정, 전이의 차원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분단 일국적 관점을 넘어서 한반도와 지구세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integrated perspective)’이 요청된다. 흔히 분단 양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나 이데올로기 및 내적 사회 문화발전의 양상으로 보이는 것도 심지어 그것의 심층에서는 남북 상호간의 영향과 지구세계와의 결합이 다차원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분단 양 국가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매개는 양 체제 내부의 고유한 독자적 역동성이나 특징적인 규정 요소뿐 아니라 양 체제 사이, 그리고 지구국가들과의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인 배제와 연루의 상호작용이었던 것이다.

이 ‘통합적 관점’에서는 먼저 한반도 분단 양국의 정치와 사회 발전의 조건과 배경의 유사성 및 병행적 발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관점은 남과 북의 오랜 ‘적대적 공생 관계’ 및 분단체제 지속과 남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 관점은 이미 적지 않은 인문, 사회과학자들이 분단일국적 인식틀을 넘어서기 위해 제출된 다양한 개념들과도 조응한다. 나아가 ‘통합적 관점’은 한반도와 보

편적 지구국가들과의 연결과 소통의 맥락에서 상호 연루와 보완의 복합적 성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통합적 관점’을 통해서 상호 배제와 단절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고 통일과 평화를 위한 ‘상생적 공생관계’ 및 긍정적인 발전의 상승적 상호작용의 요소와 차원들을 밝혀내는 실천적 전망과 지평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3. ‘구조적 생활사’ 탐구: 미시-거시 연관

이 연구 사업은 거대담론이나 구조와 제도중심의 기존 통일론과 평화학 연구를 보완하면서 인간의 경험세계와 내면 영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한다. 통일·평화의 문제는 분단체제에 살고 있는 한반도 주민의 구체적 삶에서 발견되고 있기에 항상 구체적이다. 자연과의 소통과 공생, 분단과 이념의 적대를 극복하는 상생과 화해의 가치와 문화 또한 추상적 평화 담론이나 제도적 접근에 의한 통일논의로 곧장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국토의 분단과 분단극복의 과정 또한 모두 생태적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서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다시 궁극에는 그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적대의 과잉을 특징으로 하는 한반도 남북한의 정치현실에서 상생과 소통의 통일·평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권력에 포획되기 이전 또는 그 너머의 경험세계와 의식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과 체제경쟁에 의해 강화된 성장지향 사고와 다양한 주민집단들 및 분단극복의 민간 주체들에 대한 미시적, 경험사적 연구를 통해서 분단과 체제경쟁에 관련된 그들의 생활사적 굴절과 고통 또는 다기한 실천적 지향과 정체성들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분단상황에서 벌어지는

통일담론,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안보와 평화의 적대적 대결을 해결하고 평화의 문화형성과 공유 지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동원 너머의 다양한 집단 정체성과 심성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경험과 기억, 가치와 아비투스, 정체성과 심성을 다루는 다양한 미시적 사회과학 방법론과 미시사, 경험사, 구술사 등의 역사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단 한반도의 다양한 인간 주체들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미시적 경험 세계와 집합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구조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과 평화의 이데올로기적 대결 구조가 낳은 대중들의 미시적 삶과 의식을 경험사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파편적이고 회고적인 삶의 이야기 자락들을 모아 나열하는 호사가적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구조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서사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인간 주체들의 집합적 정체성과 지향의 역사적 현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지향의 평화인문학은 분단 구조의 생애사적 서사이면서 현재적 경험사를 지향한다. 아울러 바로 이와 같은 구조적이면서 현재적인 미시적 경험세계와 가치 문화의 분석을 통해 분단을 가로질러 생겨나는 새로운 가치와 인간적 가능성의 여지들도 찾아낼 수 있다. 문화와 발전 발전패러다임의 다양한 인간적 경험을 생애사적 연구들을 통해 매개함으로써 이 연구 사업은 한반도 통일·평화 서사의 실마리들을 학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미래가치 형성을 위한 문명발전 인문학의 구체성을 확보할 것이다.

IV. 맺으며: 평화인문학에 기반한 통일교육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체제와 제도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화와 심성의 준비도 필요하다. 우리가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보듯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통일을 이루었지만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장벽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체제와 제도적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인간 내면의 생각과 감성이 대립과 분열의 상처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한 원만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사람 안의 통일, 사람 안의 평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통일교육은 바로 이러한 사람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삶을 예견해 볼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서로 다른 생활경험, 이질적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가진 남북한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 생활양식만을 고집하고 앞세울 때 발생할 개인적,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원만히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남북한 간에 분단과 전쟁, 대립으로 인해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적대적 감정과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남북한의 통일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 예상되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 각종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야기될 분쟁과 대립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결국 통일체제의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민주적 행위규범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인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주민의 삶 속에서 평화의 가치와 평화의 아버투스를 지향하는 평화인문학 교육을 통일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다.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만남

전영선 | 건국대학교

1. 통일교육의 개념

1. 통일교육 개념과 근거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일체를 의미한다. 정부(통일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목적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기반의 확충과 함께 통

1) 통일부, 『200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9), p. 200.

일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합의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온 국민들이 갖도록 한다. 둘째, 통일조국의 형성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세계 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한다.

통일교육의 기본 근거가 되는 것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이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하고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된 법이다.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었고, 200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었다. 2008년 개정에서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 통일교육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심의·의결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로 대체하였다.

2. 통일교육 주체와 통일교육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 보급하는 주체는 통일부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규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지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와 지도방향을 담은 것으로 초·중·고에 보급하여 통일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학교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국어, 도덕, 사회,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에서 통일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통일교육의 개념은 1989년 『통일교육지침서』 개발연구에서 규정한 것부터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까지 조금씩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통일교육은 통일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습득, 합리적 분석능력과 의사결정능력숙달,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형성, 평화통일실현, 통일조국달성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 공감대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1998년도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1999년부터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내용에 건전한 안보관 내용이 추가되었다.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과 시기별 규정한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규정해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국민으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관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반영하고 안보 현실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을 확립하는 것”이

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중전의 10년간의 통일교육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실상과 안보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²⁾이다.

‘미래지향적 통일관’이란 “통일은 단순한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하는 통일이며, 이는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그리고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은 통일관이다. ‘건전한 안보관’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국가를 유지·보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튼튼한 안본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균형있는 북한관’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사회 전반을 객관적·균형적으로 알리고 북한이 화해협력의 대상이자 현실적인 안보 위협의 상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관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내용이 있지만 통일 이후를 대비한 통일 미래상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2) 위의 책, p. 201.

II. 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 정도로 알고 있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통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부족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의지도 부족하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논의는 보편적 인권차원의 통일론, 북한에 대한 동정론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숙명론적 통일관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통일은 곧 ‘우리 민족의 숙명’이며, 통일은 ‘역사적 당위적 과제’로서 민족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한다.

둘째, 정치적 통일관이다. 통일은 정치적 사안이 우선으로 통일은 정치, 제도의 통합, 체제와 국가, 외교권과 군사력 보유가 통일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주로 통일과정의 제도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통일과정의 통일방식과 통일 이후의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롯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다.

셋째, 경제적 통일관이다. 남남갈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통일관이다. 합의가 어려운 정치적 통합 과정보다는 상대적으로 통합이 쉬운 경제분야로부터 통일을 이루어가자는 입장이다. 남북 사이에 임가공사업이나 공동생산 등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화폐, 경제권의 통일을 이루자는 입장이다.

넷째, 인문학적 통일관이다. 통일의 제도적, 경제적 측면보다는 인본주

의에 근거한 통일관이다.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을 통해 인문학적 통일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분단에 대한 내면적 성찰과 통일 이후의 사회적 분열과 통합에 무게를 둔다.

III. 통일교육의 이론과 현장

1. ‘Why’ 세대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교육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통일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대부분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공감, 즉 울림이 없기 때문이다. 공감이 없는 논의는 공허하고 이상적이기 쉽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기 보다는 현세대에 맞는 통일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현세대가 요구하는 통일논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모아진다. 통일교육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예림당출판사의 아동학습만화 ‘Why’ 시리즈가 있다.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국내는 물론,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 시장을 휩쓴 초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기네스북에도 오른 시리즈물로 기록되었다. 2007년 1,000만 부를 판매하였고, 2009년 2,000만 부를 돌파하였고, 2010년 5월 3,000만 부를 돌파하였다. ‘Why’의 구성은 간단하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궁금해 하는 상식문제를 제기하고, 체

계적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Why 시리즈’가 새삼스럽게 초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우리 시대가 ‘Why’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산업화를 살아왔던 세대들에게는 ‘Why’는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일심단결, 국론통합이 중요하였다. 산업화, 선진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유보하거나 희생하였다. 경제성장이 정치적 정당성을 대변하였고, 선진국에 들기 위한 노력의 대열에서 낙오는 있을 수 없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이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경제발전과 성장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과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청년이 자랑스러웠던 시대’는 아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살아왔나?’고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

통일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대답을 생각하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다. ‘통일을 왜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안돼죠?”라고 물어온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아버지들에게 아이들은 물어 온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이제는 이 물음에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 논술이나 토론에 익숙한 세대들이고, 논리의 시대이다. A4 몇 쪽으로 정리되는 통일교육으로는 통일문제를 접근할 수 없고, 나에게 절실한 문제로 다가서지 않는 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리 만무하다. 통일교육의 현장

에서도 ‘Why 세대’에 맞는 통일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성세대들 역시 ‘Why 시대’에 살고 있다. 2010년 출판계를 휩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자. 『정의란 무엇인가』는 1년이 채 안 되어서 100만 부가 팔려나갔고, 우리 시대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책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이지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정작 책의 주요 내용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의가 될 수 있고, 정의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정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어 보게 한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통일이란 무엇인가?’ 역시 이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통일은 무엇이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왜 통일을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통일’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가 불행해지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록 통일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민족의 사명이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통일된 세상을 물려주어 잘살게 하자’는 설득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면 통일에 대한 동력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우선 나부터 행복해야 하고, 통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 분단에 대한 성찰로부터 통일 논의를 출발하는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IV. 통일교육과 인문학

통일교육, 나아가 통일문제에서 인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통일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의미는 대체로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1. 통일교육의 보완으로서 인문학

통일(교육)의 보완으로서 인문학적 접근이다. 기존의 통일문제나 통일교육에서 인문학적 접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은 현실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의 영역이었고, 인문학은 근본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라는 거리가 있었다. 통일교육은 통일과 관련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차원에서 통일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통일교육의 다양한 논의에서 적극적인 인문학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통일을 사유하는 인문학자들의 논의 또는 인문학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사유 영역에서 통일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의미한다. 인문학적 작업은 다음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객관화의 대상으로서 인문학적 통일담론을 이끌어 낸다. 통일문제를 학문적 객관화의 대상으로 보고 인문학적인 통일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미래의 상상력으로서 인문학적 접근이다. 새로운 미래 고향으로서 통일한반도를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다. 통일이 되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주로 한다.

셋째, 분단체제 극복으로서 인문학적 접근이다. 한반도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분단체제 속에서 내면화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내면의 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치유적 사유방식을 제시한다.

2. 통일에 대한 사유 방식으로서 인문학

통일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서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문학적 참여의 차원을 넘어 통일문제 자체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정치나 제도, 경제적 편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분단문제를 성찰하고, 분단으로 인해 고착화된 생활양식과 사유방식의 틀을 깨는 방향으로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접근한다.

첫째, 통일은 인간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과학 분야의 기계적인 결합, 기술적인 통합에서 제기되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문학적인 사유방식을 의미한다. 인문학적인 고유의 관점과 방법을 통일문제에 적용하고, 대상에 기초한 사유방식으로서 인문학은 사회과학의 통일담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몸과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심리적 층위를 분석에 중심을 둔다. 심리적 층위로서 분단체제에 주목하면서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분단체제가 인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어진 삶을 온전하게 바로 잡는 과정을 통일의 과정으로 본다.

셋째, 분단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내재되고 축적된

내면의 분단의식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주목한다. 갈등의 근본은 무엇이며, 대립의 출발은 무엇이며, 분단체제가 우리에게 야기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통해 분단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3. 강단인문학에서 실천인문학으로

인문학이 지적 유희에서 실천적 인문학으로의 위상 정립에 목적을 둔다. 인문학이 현실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성찰하지는 접근이다. 인문학의 대상으로서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유한다. 통일에 대한 철학적 사유 방식을 제시하고, 분단에 대한 성찰, 갈등에 대한 소통을 강조한다.

인문학적 차원에서는 분단, 통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인문학적 차원에서 분단문제는 인간문제이다. 인문학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간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한반도에서 분단이라는 구조는 한반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적 삶은 왜곡되고 있다고 본다.

분단과 대립 문제도 내면적 삶과 연장선에서 파악한다. 현재의 남북 대립 구도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남북대립은 북방 삼각의 구도와 남방 삼각의 구도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으나 현재의 대립구도는 한반도 내부의 분단구조가 내재화된 두 개의 국가체제 내부의 동력에 의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한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은 왜 한반도에서는 끊임없이 냉전과 탈냉전의 논의가 반복으로 나타나며 냉전이라는 기본 축을 재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로부터 통일문제의 출발을 삼는다.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자기동일성에 대한 욕망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자기동일성이란 자기의 의지대로 혹은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심리학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욕망(Eros)과 파괴의 힘(Thanatos)은 사랑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관심있는 대상, 관계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자기 동일성에 대한 의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극도의 파괴된 힘, 적대적 의식으로 전환된다. 남북은 각각 자기 의지대로 상대가 행동하기를 욕구한다. 이 욕구의 근원 은 사랑이다. 사랑의 힘이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자기 동일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통합에 대한 시각에서도 긍정적 방향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분단구조의 부정적 방향에서의 통합은 또 다른 비극의 출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이란 한반도 내외의 민족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고민한다.

V. 통일에 대한 인문학의 시각

1. 인문학의 사유 방식으로서 ‘타자의 타자성’에 주목

인문학적 사유방식의 기본은 ‘타자의 타자성’에 있다. 타자의 타자성이란 ‘내’가 아닌 타자(사람, 대상)에게는 타자 고유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학문적 출발은 철학이다. 철학은 본래 ‘학문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철학은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

식에 대한 본연적인 사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이 다양한 학문으로 분화될 수 있었던 것은 대상으로서 타자(사물, 현상)가 그 자체로서 본래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일문제의 출발로서 인문학적 접근은 ‘타자’로서 북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철학에서 물리학이 독립 학문으로 나온 것은 물리학에 대한 탐구는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학 역시 인문학에서 출발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리학은 물질의 고유한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는 사회고유의 법칙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타자(통일, 북한)가 갖는 고유한 본성적 성질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고유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결과로서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는 것이 아니다.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상으로서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게 되고, 그 특성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통일논의의 출발로서 특성을 파악하고 남북 사이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통일문제를 접근하지는 것이다. 공통성과 차이점은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가 아니다. 동질성 회복이란 질적으로 같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질적으로 같게 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자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로 균일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논의는 자칫 질적 차이를 문화적 열등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문화적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남북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공통성에 기초하여 공통의 영역을 넓혀나가자는 것이다.

2. 인본주의에 입각한 고통의 감수성

인문학의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이 당면한 고통을 고민하고 풀어 간다. ‘고통의 감수성’이라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감수성을 의미한다. 우리 통일 논의에서 타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근본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성이 배제되어 있다. 정책의 입장에서 감성은 배제되어야 하지만 정책으로 인해 피해받을 사람들에 대한 긴장은 끊임없이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통에 대한 이해가 통일문제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 그 자체가 ‘트라우마’이다. 남북은 분단 이후 전쟁과 분단체제가 강화되면서, 국가 폭력이 일상화되고 합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단의 트라우마는 치유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지배질서를 강화하는데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작동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정당성을 명분으로 한 폭력성에 노출되어 있다.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을 겪어 왔으며,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과정은 피해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종속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유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은 상호 적대성에 기반한 체제 정당성을 강조하였고, 국가폭력의 구조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통해 상대에 대한 적대와 공포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에는 민주화와 시민 사회의 발전으로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상호적대성을 기반으로 국가 폭력이 여전히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다.

3.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에 주목

통일인문학은 대립적 이원주의로 구축된 개념체계를 재성찰하면서 이분법의 틈새에 존재하는 내밀한 사이의 이야기와 질서를 새롭게 인식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개체와 관계의 문제는 존재가 있고,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 남북의 관계는 남북이 있음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 남북 사이의 관계는 대립과 경쟁,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관계가 강요되어 왔다. 남북 사이에는 대립적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4. 삶을 고찰하기 위한 일상으로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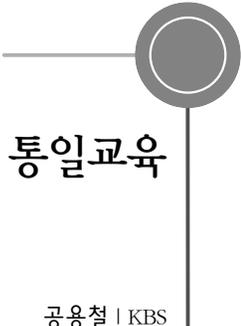
현재의 통일 논의는 체제의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체제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일논의는 국가체제의 정통성 문제와 맞물리면서 ‘통일체제’나 ‘통일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상호 대립을 양산하거나 이상적인 통일논의로 빠져들 수 있다. 이 사이에서 통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민중(국민, 민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나 생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상이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이며, 거대권력이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되는 지점이다. 호기심이나 낯설음이 아닌 인간의 모습에 관심을 두고, 사회과학의 개념, 구조, 체계의 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조망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상에 대한 연구는 통일 연구의 일정한 시각

을 열어준다. 예컨대 시장은 생산과 분배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일상이 작동되는 현장으로서 의미도 있다. 미시적 관찰을 통해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시장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곳인 동시에 사유가 교환되는 곳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관심을 둘 수 있다.

5. 삶의 방식에 대한 통합

통일 문제에서는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통일과 관련한 어떤 논의가 되든 남북과 해외 한민족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통합대상으로 민족이 있는 한 어떤 논의가 되어도 그것은 민족을 대상으로 한 민족주의 내지 민족의 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느냐,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방향이 되어야하는 논의와는 별개의 차원의 논의이다. 통일은 결코 정치나 경제, 법제도적 통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민족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함께 한 민족구성원들의 삶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성적 당위성과 함께 감성적이고 생활적인 방식의 공감을 통해 움직인다. 정치, 경제, 법과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고 동력을 불어넣는 인간적 삶의 방식에 대한 통합에 주목한다.



방송에서 바라본 통일교육

공용철 | KBS

1. 들어가며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로서 우리의 영토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반국가단체이다. 남북 교류협력법상으로 보면 북한은 교류 협력을 해야 할 대상이다. 법체계상으로 보면 우리는 반국가단체와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이유다.

특수관계는 남북관계 전반을 규정짓는 가장 큰 요소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기 때문에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협력도 병행해야 한다. 특수관계론을 교육에 적용하면 한편으로는 안보교육도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교

육도 실시해야 한다.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은 상호 모순이다. 정책으로야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교류협력을 실시할 수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호 모순적인 두 개의 가치를 심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교육이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

분단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일교육이 어려워지는 것은 특수관계에서 오는 논리적 모순 때문만이 아니다.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분단의 고통을 처절하게 체험했다. 분단으로 인해 이산의 아픔도 뼈저리게 겪었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컸기에,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강했기에 분단을 해소하려는 통일열망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어질수록 통일열망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분단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일교육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통일교육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분단기간이 길어질수록 남북한 간에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핸드폰과 DMB, MP4,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으로 무장한 채 철저하게 개인화된 우리의 청소년들과 수령과 장군을 떠받들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집단주의를 강요받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교감할 수 있는 교집합은 그리 크지 않다. 또래들과의 놀이문화가 청소년들의 의식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찌면 언어가 같다는 것 외에 남북의 청소년들이 교감할 수 있는 공감대는 사라진지도 모른다. 우리의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아이들보다 일본의 아이들이 훨씬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의식이 약화된 것이 통일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삶을 규정하는 조건과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와 개방적인 체제라는 서로

다른 어항이 그 속에서 자라난 물고기의 생태에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전개될 통일교육은 달라진 조건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방송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가 검토 대상이다.

II. 잊혀져 가는 꿈, ‘통일’

남과 북이 자주 부르는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래일 뿐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관념화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공동체의 목표일 뿐이다. 개인차원으로 내려가면 통일은 자신과는 별 상관도 없는 일이고 관심조차 기울이고 싶지 않은 영역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매년 국민통일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9%로 2008년 51.8%, 2009년 55.9%에 이어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비판적으로 답한 응답자도 20.6%로 2008년 13.5%, 2009년 19.9%보다 늘었다. 통일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시점이 7~8월이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이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대가 젊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도 보수

적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 30대와 40대는 각각 16.0%, 17.4%로 낮게 나온 반면, 20대는 23.8%로 높게 나왔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20대가 16.2%로 40대의 26.2%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통일교육협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2009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의 중고교 재학생 1,0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52.6%, '없다'는 응답은 47.4%였다.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로 '필요없다'는 응답(29.7%)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성인 일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중고생들의 통일의식을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거니와 조사방법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중고생들의 응답 태도이다. 우리나라 중고생들은 오랫동안 시험에 단련된 세대다.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응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본인은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조사를 하면 관심이 많은 것으로, 통일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다.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옳다고 교육받아온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분리해서 표현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다. 실제로 중고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요즘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과 세계관을 대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우선 좋아하는 나라의 경우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과 중국이 비슷하며 북한을 가장 싫어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복학습과 독도문제 등

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비율도 꽤 높지만, 일본과 북한을 비교할 경우 북한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음악과 만화, 영화 등을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친숙하게 받아들여진다. 반면에 북한은 문제만 일으키는 피곤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도 실제 조사결과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맞고 좋은 스펙을 갖추서 일류학교에 진학할 것인가이다. 극도로 개인화한 세대이기도 하다. 개인의 출세와 영달, 행복추구에는 관심이 많지만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통일의 책무를 물려받아야 할 청소년층으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큰 경향성으로 보면 우리에게 통일은 잊혀진 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III.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의 꿈이 잊혀져 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통일교육의 부실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필자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몇 명의 청소년, 학교 교사들에게 통일에 대해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교육 받았는지를 물어봤다. 필자와 얘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르치거나 받은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다.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론적인 교육내용만 기억했다. 통일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사회시간에 통일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르친다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보다 심화된 통일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과 과정에서 통일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부실한 것이다.

통일교육이 학교만이 전담해야 할 영역은 아니다. 통일에 대한 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도 꼭 필요하다. 사회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언론, 그중에서도 대중의 접촉도가 높은 TV매체일 것이다. 공중파 방송국들은 뉴스, 드라마, 교양, 다큐멘터리, 공연, 코미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북한을 바로 알리려고 노력해왔다. 북한의 식량난, 시장화 등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도 방송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방송교류도 활발했다. 교향악과 대중음악 공연, 각종 체육교류 생중계, 북한의 역사유적과 자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방송교류가 이뤄졌다. 남북 방송교류는 금단의 벽을 하나씩 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단편적인 교류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이 해소될 순 없었다. 경제·사회적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북한과의 방송교류를 위해서 남한 방송사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촬영할 수도 없었고 복측이 허락하고 지정된 대상만 촬영이 가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연출된 복측 영상물은 국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기 시작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큰돈을 들이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방송사들이 북한과의 방송교류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덩달아서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고 통일을 고민하는 프로그램들도

줄어들었다.

현재 공중과 TV의 경우 통일교육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도 KBS의 ‘남북의 창,’ MBC의 ‘통일전망대’ 밖에 없지만, 그 프로그램들도 시간대를 자주 변경하고, 갈수록 대중이 접촉하기 어려운 취약시간대로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 토론이나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문제나 남북관계, 통일을 소재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방송하고 있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통일보다는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 역시 대중의 접촉도가 낮은 편이다. 대중의 접촉도가 낮다 보니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편 때마다 더욱 변방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들도 간혹 방송되었다. 북한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시청자들의 호응도 아주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북한 내부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송하기 어렵다.

대중의 접촉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도 북한을 소재로 한 코너들이 간혹 방송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언어나 풍습을 희화화해 북한에 대한 거부감만 키웠다. 북한에 대해 ‘이상한 나라’ 혹은 ‘빨달린 도깨비’ 같은 이미지를 갖게 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미국에서 가끔씩 만들어지는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영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북한 간의 이질감만 키웠다. 지금까지 방송된 통일 관련 프로그램들은 아주 재미가 없거나 북한을 희화화했고,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했다. 방송사들이 통일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통일교육은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 매우 부실했다. 현재 학교든 TV매체든 북한주민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통일을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교육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V. 통일교육이 부실한 이유

1.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

그동안 통일교육이 부실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말로만 통일을 이야기했지 실제적으로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이고, 남북한이 처해 있었던 환경도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분단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통일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 교류가 활발해진 2000년대 이후 국민들의 통일의지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변화를 1990년대 중반부터 살펴보자. 고난의 행군 초기에는 수많은 아사자와 탈북자, 꽃제비가 발생한 북한의 실상이 방송되면서 북한동포를 돕자는 온정의 물결이 쇄도했다. 오랫동안 감춰져왔던 남은 반쪽의 실상이 기아와 굶주림, 아사로 드러나자 동포애가 발동한 것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국내 NGO 대부분이 90년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2002년을 전후하여 기획탈북이 시도되고 북한의 인권실상이 부각되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대륙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열악한 실상도 부각되었다.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부담도 증대

되었다. 남북경협이 확대되면서 북한 퍼주기 논란도 점화되었다. 열악한 북한의 인프라 실상이 드러나면서 막대한 재건비용도 논의되었다. ‘동포가 사는 잃어버린 반쪽’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북한이 서서히 부담스런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북한과 무엇을 하든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져야 했다. 그 무렵 독일통일의 부작용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막대한 통일비용이 화제가 되면서 동독보다 더 열악한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각되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것은 우리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실컷 도와주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3대 세습설도 등장했다. 장군님의 사진이 비에 젖는다고 현수막을 걷어가는 웃지못할 현장을 목도하면서 잃어버린 반쪽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다른 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애정을 갖고 바라봤던 나의 반쪽이 실상을 알고 나니 아주 피곤하고 골치 아픈 존재였던 것이다. 통일보다는 분단된 채 각자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면서 통일의지가 감소하고 북한 피로감이 증대된 것이다. 북한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변화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축소시킨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통일이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외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 안보교육 vs 통일교육, 모순되는 교육목표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수관계라고 하는 남북관계의 특성도 통일교육을 가로막아온 큰 장애였다.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교류협력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대북 적대감도 약화되고 통일의 꿈도 커진 듯했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도 상대적으로 관용적이었다.

지난해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 위협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국민적 패러다임이 통일에서 안보로 전환되었다.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도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통일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도 그 때문이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니 아예 흡수통일을 준비하지는 다분히 공격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다 보면 양쪽의 동질성이 확대돼 자연스럽게 통일로 연결될 거라는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다. 인식이 뒤바뀌게 된 배경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3대 세습을 하고, 테러나 일삼는 집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북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현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만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은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타도 대상이다. 압박과 봉쇄를 통해서 조기에 붕괴시켜야 할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발도 차단할 수 있는 안보부터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 국민들의 안보태세 강화가 요구되고 안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안보교육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통일교육의 프레임도 달라진다. 화해와 공존대신에 북한의 호전성을 얘기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교육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꺼안아야 할 동포가 아니라 이기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다. 수평적인 공존이나 포용이 아니라 수직적인 흡수나 합병이 통일방안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통일교육이 냉전시대의 체제대결 프레임에 갇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TV방송들도 뉴스나 다큐멘터리,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북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안보의식을 다지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방

송되었다. 경직된 남북관계가 안방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북한의 변화를 통한 점진적인 통일론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조감하면 국제관계가 좋을 때 남북 관계도 좋았고 남북 정부간의 회담이 이어질 때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했다. 정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교류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방송 역시 그러한 흐름을 벗어날 수 없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해서 무고한 우리나라 민들이 죽어가는데 한가하게 동포애나 평화통일을 논하기는 어렵다. 안보 교육과 통일교육은 본질적으로 대척점에서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이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활발하지 못했던 한 이유이기도 하다.

3. 확대된 이질화

북한주민들은 7세에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조직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조직에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역사를 배우고, 내 몸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배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집단주의를 세뇌 받는다.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금기다. 교육의 효과와 영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강렬하다. 북한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해 열렬하게 충성을 맹세할 때, 그것이 춤이나 노래, 연극, 햇불행진 등으로 표현될 때, 그들의 몸짓과 표정을 보라,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가?

그런 북한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전자게임과 만화, 감각을 자극하는

영상물에 노출돼 있다. 스마트폰과 MP4, 디카와 노트북,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 최첨단 IT장비로 무장하고 TV도 혼자서 본다. 가전(家電)의 시대를 넘어 개전(個電)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아메리칸 리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즐기는 세대이다. 친구도 경쟁자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도로 개인화된 환경에서 치열하게 성적경쟁을 하면서 살아간다.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다.

이처럼 남과 북의 아이들은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란 별로 없다. 북쪽의 청소년들이 ‘한류’라 하여 남쪽의 드라마나 대중음악을 즐기기도 있지만, 그것이 문화소비의 대세는 아니다. 문화적 이질화의 심화는 정서적 거리를 넓힌다.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서로간의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아이들은 북한 청소년들보다 일본의 청소년들을 훨씬 가깝게 받아들인다. 그런 아이들에게 북한주민들이 우리 동포라고 아무리 강조한들 마음속으로 체화되긴 어려울 것이다.

남북의 청소년들은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미래 세대다. 그들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도 원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심화된 이질화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거리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통일교육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시험에 단련된 세대다. 어떤 것을 골라야 정답인지를 잘 판단하도록 훈련받아왔다. 그들이 답안지에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적지만 마음속으로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심화된 남북한의 이질화이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통일교육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부실화시킨 것이다.

V.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교육목표 수정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져 가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통일을 자신의 일로,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대적 상황과 조건이 많이 달라졌지만 해법은 통일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달라진 대북인식과 심화된 이질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통일교육의 목표가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1988년에 천명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것은 평화적, 단계적 통일론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통일방안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주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주인도 한민족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민족사회가 되었다.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20만을 넘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결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들도 한민족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더 이상 한민족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분열된 민족의 재결합 차원이 아니라 다민족사회의 등장을 의미한다. 한민족공동체통일이니 민족통일이니 하는 개념규정 자체가 이제 낡은 틀이 되어가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는 통일방

안과 개념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방안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통일방법은 점진적 평화통일론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일논의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은 정성통일론에 가깝다. 한 나라의 붕괴는 예정된 코스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일방법론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정권에 따라서 통일방안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1988년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 형태로 발표된 것이다.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법률도 아니다. 그 얘기는 강제성 있는 통일방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6·15남북공동 선언에서는 연방제에 가까운 통일방안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되었다. 아무런 공식적인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통일방안이 바뀐 것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국민들이 합의한 통일정책을 국민모두가 공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각자가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정책이 모호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통일정책, 한반도의 미래를 큰 그림으로 디자인하는 통일정책, 국민들이 합의하는 통일정책이 제시되어야 통일교육의 목표도 분명해지리라 생각된다. 그 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통일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통일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국민적인 합의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추후에 정권의 지향에 따라 통일정책이 뒤바뀌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2.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의 병행과정 개발

통일교육이 가장 힘든 부분은 안보교육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나이다. 분단된 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분단과 대치상황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교육도 꼭 필요하다. 안보교육이 현상유지를 염두에 둔 교육이라면 통일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다. 현실적으로 안보교육에 더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의 모순은 현재와 미래의 교육목표가 달라서 초래된 것이다.

안보와 통일교육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필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는 누구도 이익을 제기할 수 없는 상수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교육이 꼭 필요하다. 문제는 안보교육의 접근 방법이다. 북한을 모두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서 두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분단으로 남북한의 갈등구조로 이익을 보는 층이 군부를 비롯한 정권이라면 주민들은 피해자일 수 있다. 정권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대할 필요가 있지만 주민들은 따뜻한 동포애로 포용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교육은 군부를 비롯한 북한 정권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면, 통일교육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안보교육의 대상이 북한 전체가 될 경우 주민들도 적이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북한주민들도 남한을 적으로 삼게 된다.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 그것은 통일을 위해서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본 것처럼 북한의 미래는 북한주민들이 결정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1990년 3월 총 선거에서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결정한 것도 동독 주민들이었다. 동독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했기에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남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국가로서 각각이 UN회원국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북한의 미래는 UN의 결정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회에 결정적인 역할이 맡겨질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 피폭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의 벽을 돌파하지 못해 의장성명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런 중국이 순수히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승인해줄리 만무하다. 북한의 미래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가 대립한다면 결국 북한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와 영국도 독일통일을 반대했지만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독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미래를 북한주민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는 논리개발과 정책수립, 교과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필자는 그것을 두 트랙으로 접근하자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 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안보 상업주의 탈피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안보상업주의의 탈피

도 시급하다. 안보상업주의는 언론과 정치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에 자주 발휘된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보여주었던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가 좋은 예이다. 방송의 경우 보도와 프로그램을 합쳐 우선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았다. 사건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방송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회사 상층부에서 프로그램 제작 지시가 내려오면 제작팀들은 서로 피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물량도 그렇거니와 접근 자세도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많았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합동조사반의 사고원인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전사자들을 영웅시하고 모금운동을 한 것에 대한 논란이 특히 많았다.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기에 망정이지 사고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고로 천안함이 부서졌어도 탑승자들을 영웅으로 추앙할 수 있는가? 북한이 했다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DMZ를 예로 들면 경계를 잘못해 적군이 아군의 후방으로 침투해서 아군진지에 포격을 하고 무사히 도망간 경우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당한 군인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DMZ에서 경계에 실패해 적의 공격으로 사망한 군인들도 영웅이 되어야 하는가? 작전 중 사망한 군인들을 위해서 왜 국민들이 모금운동을 해야 하는가? 경계의 실패든 작전의 실패든 사고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는 것이 옳다. 국가가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하거나 공훈포상 등을 통해 별도로 예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국민 모금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부분에 대해 유족들이 당국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보정국을 유도해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다른 쟁점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안보실패 사건을 가지고 사망자들을 영웅시하고 모금운동까지 한 사례는 두고두고 방송계에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안보상업주의는 시청률이 높고 독자들의 접촉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다. 뿌리 깊은 대북 적대 의식이 남아 있는 한 더욱 그렇다. 안보를 주요 쟁점화하면 자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표 언론사라는 자부심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과거에 북풍논란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반복되면 언론의 신뢰성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안보이슈라고 해서 군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발표 저널리즘이 계속되는 한, 군과 언론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우리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서 뼈저리게 체험했다. 언론의 경우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 존립근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언론의 진정한 위기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신뢰의 상실 때문이라는 국내외의 지적에 귀 기울일 만하다고 본다.

통일교육 측면에서 보면 안보상업주의는 이성과 논리에 호소하기보다 순간의 분위기와 감성에 호소해 맹목적인 반대와 적대감을 양산하게 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라고 판단된다.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련하여 첨언하면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달라질 순 있지만 언론의 편집방향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에 따라 보도 방향이 춤을 춘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 단계별 심화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은 아직 당위론 차원에 머물러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선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깊이가 없다. 통일이 우리 사회의 선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지만 내심으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도 않다. 통일에 대한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화학습 과정이란 어떤 것들일까?

첫째, 한반도를 둘러싼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북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북한이 언제쯤 무너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 질문에는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깔려 있다.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이 무너지길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한가? 흔히 말하듯이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이 될 것인가? 언어가 같고 민족이 같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고 지지해 줄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주민들이 동의하고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붕괴는 또 다른 친중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영구분단체제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내용을 통일교육이 담아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통일에 대한 프레임 전환도 필요하다. 전술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통일을 다분히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각이 대세가 되었다. 독일통일을 리뷰하면서도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 분단 비용이 감소한 측면, 통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주목하지 않고 막대한 통일비용, 오씨와 베씨가 섞이지 못하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주로 접근해왔다. 독일통일의 부정적인 측면만 확대해온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도 큰 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분단으로 인한 폐해, 분단비용에 주목해야 하고 통일의 편익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로 인해 생

겨날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말이 반도이지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로 갇혀있는 지경학적 현실에서 통일이 되면 일본과 대륙을 잇는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구 7천만이 넘는 중견국가로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오랜 분단의 폐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념의 렌즈를 벗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심의관을 만나면서 필자도 놀란 적이 있다. 그는 북한과 비밀회담을 한 주역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 당국자들을 만난 사람이다. 북한과의 수많은 회담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북한도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얼른 받아들이지 못한다. 북한이 발표하고 말하는 내용을 일단 부정부터 하려고 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진 대립과 갈등, 충돌로 인한 오랜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이 체제 대결을 할 상황은 아니다.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인구 등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라이벌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의 주도권도 우리 손에 있지 않는가? 이제는 부모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심정으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통일기반도 튼튼해질 것이다. 통일교육도 그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이 당위론, 총론차원을 넘어서 단계별로 다양한 심화학습과정이 필요하다. 학교교육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당위론적인 교

육을 했다면 중학교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심화과정,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심화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에서도 그러한 점에 주목해서 다양한 기획기사나 심층 다큐멘터리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통일문제는 늘 당국자들이 주도해왔다. 당국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해왔다. 국민들은 항상 홍보의 대상이었다.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다. 항상 공급자 중심이었다. 정책과 콘텐츠 개발과정에 국민과 수용자가 배제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정책이나 교육의 공급자들은 누구였는가? 정권담당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통일이라는 우리의 과제가 한반도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큰 그림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이익에 맞게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통일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인사홍역을 치루는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수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총론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각론은 없고, 각자의 부담차원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통일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내가 부담을 지는 것은 싫다는 얘기가. 통일정책도 그렇고 교육도 이제 수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에서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란 무엇일까? 북한 바로 알기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3대 세습을 하는 나라라는 것은 모두 안다. 독재국가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라는 것도 안다. 그렇

지만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아는 부분이 많지 않다. 식량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다는 것 외에 주민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미래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북한의 초등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고, 컴퓨터와 예체능 과외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영어와 중국어, 컴퓨터와 악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남북한 어린이들이 받는 과외수업은 공통영역이 많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다. 요즘 김일성 대학생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디카와 핸드폰을 이용해 남쪽의 영상물을 보고 있다. 젊은이들의 패션과 유행도 남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어린이들도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악기를 배운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게임을 즐긴다는 사실을 우리의 청소년들이 알게 되면 북한 학생들을 바라보는 남한 학생들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예들은 우리의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해 준다.

통일교육의 전달 수단도 수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과서가 담당하는 정규 교과과정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 청소년 영화 등을 통한 통일 콘텐츠 개발도 시급하다. 수용자 중심으로 통일교육 콘텐츠가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VI.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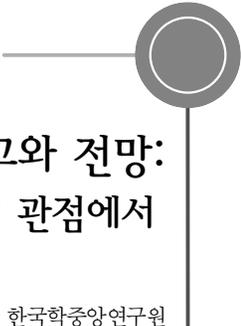
학교과정이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사회과정이든 우리의 통일교육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통일교육이라고 해야 통일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왜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육을 새롭게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새롭게 통일교육을 세팅하려는 시점에서 꼭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빚어지고 있는 역사교육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대사 교육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간에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개편하는 역사교육은 오래 가지 못한다.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념의 색깔과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통일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요구받을 것이다. 그것이 반복되면 교육의 근간이랄 수 있는 신뢰성이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정치 중립적인 통일교육,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통일교육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간의 시각차가 워낙 크고,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필자는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나 통일교육도 국민적 합의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파가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통일방안이나 통일교육내용이 꾸며진다면, 그 정책이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책이나 교육내용은 또 한번 홍역을 치르게 돼 있다. 우리의 남북관계사가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도 북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화뇌동하는 편집과 보

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당국의 발표를 여과 없이 옮기는 보도 태도도 고쳐져야 한다. 그것이 쌓이면 정부와 언론 모두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 안보이슈는 성격상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검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팩트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획득하는 것, 그것만이 정부나 언론, 통일교육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진정한 통일교육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TV방송사들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분열과 통합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전망: 지구사적 관점에서

권희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국가들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민족해방운동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제국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정치에서 그리고 전쟁에서 어느 것이 보다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이와 같이 조망하여 보는 것이 보다 유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부러 제국의 관점에서 국가의 분열과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현실정치에 보다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본고는 국가들 간의 동학을 일종의 생태학적 은유를 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의 흥망성

쇠를 고찰하면 이는 생태계에 비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국이라는 큰 거목의 그늘 하에 그 지배하에 들어가는 민족들이 있고,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국가들이 있으며 그 그들의 사이에 작은 관목의 상태로 성장하는 군소의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이 제국들의 관계가 핵심이다. 시기에 따라 제국들의 흥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소국가들의 역사 역시 제국들의 역사에 의하여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II. 20세기형 국가의 분열과 통일

지구사적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먼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에 20세기 국가생태계의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때의 중심적인 개념은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이며 제국들의 충돌을 통하여 제국의 형태변화(metamorphosis)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 틀을 가지고 20세기 국가생태계의 메가트렌드를 점검하여 보기로 하자. 우리는 20세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우선 주목할 것은 구제국에 이어서 신흥제국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제국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제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러시아, 미국 등으로 정리된다. 이들 유럽국가들은 항해 기술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하여 17세기 이래 활발하게 식민지를 개척하였으며 이들 식민지를 자국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으로

써 지구상의 강자가 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산업화가 진행됨으로써 제국들의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주로 상업적 패권을 확보하면서 제국을 이루었던 제국들 사이에서 산업화를 이루어 제조업에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들이 전통적인 상업 패권 중심의 제국들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들은 다음의 몇 그룹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① 전통적인 중상주의 중심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를 선도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제국을 내적으로 혁신하여 연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게 된 제국. 이 그룹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간다. 당연히 이들 국가들은 제국들 중에서 선도 그룹이 되면서 20세기 지구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② 하지만 19세기 후반에는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후발 산업국들의 등장하여 새로운 제국을 구성하게 되고 이들 신흥제국들은 선도 제국들과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 신흥제국으로 우리는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를 들 수 있다. 이들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남아 있는 영토를 자국의 식민지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선도그룹에 의하여 지구촌이 거의 점령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신흥제국들은 아직 산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업망을 가지지도 못한 낙후된 지역을 제국의 식민지로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중세형 제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이들 신흥 제국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③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중세형 구 제국의 존재이다. 여기에는 오토만 제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이들 구 제국은 비유럽 지역에서 제국의 패권을 유지하던 국가들이다. 오토만 제국이 중세의 제국형성을 역사적 유산으로 하여 동유럽에서 중동에 이르는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 제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④ 이 같은 제국의 분포에서 새로운 변종 제국이 등장하게 된 것이 20세

기의 특징이다. 이 변종 제국의 유형으로 우리는 독일 제3제국과 소련 제국을 들 수 있다. 독일 제3제국은 국가사회주의의 노선을 따르는 나치당(NSDAP: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을 통하여 의회주의에 도전하면서 국가 나아가서 수령의 독재에 의한 제국의 성장을 주창하였다. 소련 제국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표방하면서 당에 의한 지도 궁극적으로는 당지도자에 의한 제국의 관리를 주장한 것이다. 양 제국이 모두, 후발 제국의 성장-관리 모델을 제시한 것이 공통적이며, 국가 및 관리의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 점이 전체주의로 귀결되게 하는 요소를 가진다.

제국의 충돌과 그 충돌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생 국민국가들은 오로지 국민국가들의 자체적인 힘을 통하여 국가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제국들 사이의 전쟁과 협상을 통한 영토의 재분배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 2차 세계대전은 대량의 국민국가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국민국가들 산출의 동력은 제국의 발전 동력이 영토전쟁을 통한 식민지 확보가 아니라 보다 진화된 지배방식의 출현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화된 지배의 방식의 기저에 자본주의적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영토전쟁이 아니라 생산력경쟁이라는 방식으로 경쟁의 질서가 변화한 것이다. 경쟁의 질서가 변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양차 대전의 경우에서 보듯 제국들 사이의 전쟁과 신생 민족국가들의 저항 등, 영토전쟁을 통한 제국의 질서 유지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국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제2차 대전 후에 수많은 국민국가들의 탄생을 통한 신질서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20세기에 제국의 식민지적 영토 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국은 기본적으로 고비용적 구조가 되었다. 그 이유는 ① 제국의 유지에 정복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높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확보와 치안유지, 그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전쟁은, 높은 고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제국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파탄으로 이끌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지배계급의 몰락은 불가피해졌고 그 대신 자본가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② 20세기에는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이념이 급속도로 확산된 시기였다.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은 이제는 제국의 유지를 정치적 엘리트의 뜻대로 즉 제국의 정치적 지배자들의 뜻대로만 이끌어나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선거를 통한 지배엘리트의 교체가 가능해졌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귀족들에서 부르주아지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전비를 대기 위하여 많은 재산을 헌납하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부를 획득하기를 원하였고 이럴 때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구촌의 평화가 보다 유리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제국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따라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이에 따라 제국의 행동 유형이 서로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유형별로 제국의 질서변화로 나타난 국가들의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III. 분열과 통합 과정의 분석

1. 20세기 선도 제국의 변화와 국민국가의 탄생

이제 20세기에 전통적인 상업적 지배에 이어서 산업화를 통하여 자체 혁신에 성공한 선도제국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들 제국에서 어떻게 민족국가들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 영 제국의 경우

영 제국의 경우 제국으로부터 식민지가 처음으로 분리해나간 것은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가 영국의회가 식민 주민의 동의 없이 지배하고 과세하는 것에 반발하여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 하에 저항한 것이다. 1775년 전쟁에 들어간 식민지인들은 이듬해 1776년 독립을 선언하였다.¹⁾ 이후 영국은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영국의 백인 식민지와 비백인식민지 사이에 지배방식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게 되었다. 백인 식민지에는 백인 자치정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비백인 식민지에는 군사적인 지배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자치정부가 형성되면서 영 제국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7년에 외교권 이외에는 모든 자치권을 가진 dominion of Canada가 성립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뉴질랜드는 1907년 비

1)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한 것은 1776년이며 여기에서 그는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주장하였고 식민지를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경제적 성공에 정치적 지배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슷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1919년 1월 독립을 선언하였고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소비에트러시아만이 이를 승인하였고 이후 독립전쟁이 계속되었다. 이후 영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1922년 British dominion의 지위를 가지는 Irish Free State가 되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는 이틀만에 영국왕에게 영국에 통합되는 것을 청원하였다. 이후 아일랜드는 1949년부터 공화국이 되었다. 그리고 영연방에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

나. 프랑스 제국의 경우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식민제국을 건설한 국가였다.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에 북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그리고 인도에 식민지를 개척하였지만 영국에 밀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었다. 19세기 중에 프랑스는 광대한 식민제국을 건설하였고 제1차 대전에서도 승전국에 속하여 그 영토를 증가시켰지만 제2차 대전 중에 전쟁에 밀리게 되면서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인도차이나는 일본에 의하여 점령당했고, 시리아, 레바논, 마다가스카르는 영국에 의해, 모로코와 알제리는 영국과 미국에, 튀니지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의해 점령당했다.

인도차이나에서는 일본이 패배하면서 베트남이 독립을 선언하였다(1945). 하지만 프랑스는 독립을 인정치 않고 전쟁을 한다. 그러던 중 라오스도 독립선언을 하고(1949) 캄보디아도 독립을 한다(1953). 프랑스는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한다(1954). 이어서 알제리와 전쟁에 들어가 1962년 독립시키게 된다. 1960년대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식민지들은 투표를 통하여 독립을 얻게 된다.

이상과 같이 점진한 결과 제1차 대전 이전에 영제국에 의하여 독립을

획득한 경우 그것은 백인식민자들의 식민지에 국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제국들은 가능하다면 제국의 식민지를 제국 안에 포함시키려 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차 세계대전과 제국의 변화

영 제국의 질서는 제1차 대전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국들의 전쟁인 제1차 대전은 제국들의 판도에 큰 변화를 야기시켰다. 전쟁은 무엇보다도 중세형 제국인 오토만 제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근대화 지체된 오토만 제국은 이미 19세기 초부터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1821년 그리스는 술탄에 전쟁을 선포하였고 1829년 독립을 획득하였다. 동유럽에서는 국민주의의 물결이 일어나서 1875년 제국의 조공국이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왈라키아 및 몰다비아 연합공국이 제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불가리아 역시 가담하였다. 러시아가 이에 개입하여 러터전쟁(1877~78)이 일어나고 오토만제국은 독립을 승인하였다. 불가리아는 제국 내에 독립한 공국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제국의 해체는 계속되었다.

1881년 프랑스는 튀니지를 점령하였다(프랑스는 1830년 알제리를 점령하고, 1912년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점령했다). 1912년 1차 발칸전쟁이 일어나고 오토만 제국은 유럽의 영토를 거의 상실하였다. 같은 해 novi pazar가 오스트리아에 할양되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은 오토만 제국에 치명적인 것이 되었다. 영국은 전쟁이 일어나자 키프로스, 이집트, 수단을 합병했다. 1830~1914사이에 제국은 북아프리카의 모든 영토를 상실하였다. 1916년부터는 아랍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제국은 1918년까지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남겨진 부분은 1919년 영국에 넘겨졌다. 자

카프카즈의 지역도 러시아에 넘겨야 했다. 세브르조약을 통하여 제국의 해체는 종료되었는데 여기에서 탄생된 국가가 40개가 된다. 그럼으로써 오토만 제국은 제국으로서의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1299년 성립했던 제국은 1923년 그 역사를 다하게 되었다.

제1차 대전의 와중에 일어난 러시아혁명은 제국의 새로운 변종의 출현으로 주목되는 사건이었다. 크게 보아서 이 혁명은 제국의 타도를 목표로 하였지만 사실상은 독특한 방식으로 제국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정치적으로 강압적인 지배를 통하여 제국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공산제국이라는 독특한 유형의 제국을 산출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였다. 핀란드는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1809년 러시아자치령대공국으로 편입되었지만 혁명의 와중에 1917년 독립선언을 하고 1918년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또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3국 역시 혁명의 와중에 1918년 독립하였다.

한편 일차 대전 이후에도 제국의 시대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오스만제국의 해체를 통하여 성립한 전후체제는 여전히 여러 갈등요인을 안고 있었다. 제국의 해체를 통하여 제국 중 하나가 없어졌지만 다른 제국들은 힘을 강화했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국민주의의 물결은 더욱 강하게 일어났다. 거기에 공산 제국이 등장함으로써 공산 제국의 지배권이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근본적인 갈등은 선진 제국과 후진 제국 사이의 갈등이었다. 일차 대전에서 패배를 맛보기는 하였지만 독일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거기에 이어서 일본이 신흥 제국의 대열에 합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번엔 그 균형을 협상을 통하여 찾기보다는 대규모의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었다. 제국 시대의 국제정치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상황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치닫기 전 양차 대전의 사이에서, 전쟁을 향한 움

직임은 간단없이 노출되었다. 우선 유럽에서의 상황이다.

파리강화회의를 통하여 전후의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박탈당하고 전쟁배상금을 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전후의 상황은 제국들의 시대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미 1917년에 나타난 공산혁명이 우선 그것이다. 하지만 민족들의 해방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 공산혁명은 결국은 국제주의를 내걸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제국의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공산혁명의 방향은 그 제국의 확장지역으로 아시아를 주목하게 되었다. 유럽지역을 넘보기에는 그 제국은 아직 힘이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혁명의 결과 해방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다시 제국의 울타리로 편입되는지 그 과정을 점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소련은 핀란드와 발틱 3국을 제국에서 상실하였지만 아시아로 진출하여 몽골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보하였다. 소련은 또 1924년 몽골을 인민공화국으로 중국에서 분리시켜서 자기의 영향권 하에 두었던 것이다.²⁾ 러시아제국은 혁명을 통하여 4개국을 잃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일단 독립의 형식을 인정한 다음에 분리주의자를 탄압한 후 자발적인 통합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1922년 소련으로 재통합되었다.

이 시기 주목하여야 할 것은 청 제국의 몰락과 중화민국(및 중화인민공화국)을 통한 제국의 재등장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청 제국은 명목상의 제국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기력은 거의 고갈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청의 지배하에 있던 티베트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티베트는 독립을 유지하였지만 내전에서 승리하고 중국을 다

2) 몽골은 17세기 말 청의 지배에 들어갔다. 1911년 신해혁명시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21년 사실상의 독립을 얻었고 1945년에 가서야 승인을 받았다.

시 지배하게 된 인민해방군은 1950년 티베트를 합병하였다. 신흥 제국인 일본은 1932년 만주국을 독립시켜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

3. 제2차 세계대전과 제국의 변화

제국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2차 대전은 선진제국에 대한 신흥제국(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패전 제국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우선 독일 제국은 분단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흥제국으로 등장한 소련이 동부지방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이 독일에 대한 공격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달랐지만 서유럽국가들과 소련은 공동의 전선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자로 등장한 소련은 자기의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은 동독에서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이 새로이 획득한 광대한 지역에 소련은 공산주의형 식민지를 건설한 것이었다. 이 공산주의형 식민지는 식민자들을 통한 지배가 아니지만 당과 국가기구를 통하여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을 통제하고 지배하였다는 점에서 제국 지배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2차 대전은 또한 전쟁의 또 다른 패배자인 일본제국의 해체를 도모하였다. 일본제국은 1930년대부터 급속히 지역적 팽창을 시도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만주국에 이어서 중국의 여러 지방들을 장악하였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여야 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이 독립되고 사할린은 반환되었고 타이완은 포기하게 되었다.

제2차 대전은 단지 패전국이 지배하던 지역만을 독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민족해방운동의 물결이 거세어지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소위 비백인 식민지들도 대거 독립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영국의 지배를 받던 버마연방이 1948년, 말레이시아가 1963년,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하였다. 필리핀은 1945년 미국에서 독립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있다가 1956년 독립되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령에서 1949년 자치령이 되었다가 1950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독립되었고 다시 1971년에는 방글라데시와 독립전쟁을 통하여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자치령이 되었다가 1972년 독립되었다.

이 시기 분리된 국가가 통일을 이룬 예로 베트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공산 체제를 가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합병한(1975) 사례이다.

4.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영토 제국의 종언

베를린 장벽 붕괴의 뒤를 이은 동유럽에서의 민중 혁명은 동유럽에서의 한편으로는 민주체제의 부활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소련 식민제국의 붕괴라고도 볼 수 있다. 그와 함께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자체의 붕괴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14개의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의 붕괴는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동유럽 및 중부 유럽에 그 영향을 계속 주었다. 유고슬라비아의 해체가 그것이다. 유고슬로비아는 공산체제를 벗어던지자 계속 국민국가들이 그 안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유고슬로비아의 여섯 개의 구성 공화국 중 넷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분리 독립하였다. 잔류한 세르비아

〈표 1〉 소련 붕괴 후 탄생된 나라와 시기

| 국가 | 독립시기 |
|--|--|
| 발트3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1918) |
| 벨로루시 | 소련 내 독립(1922) |
| 우크라이나 | 소련 내 독립(1922) |
| 몰도바 | 러시아에 합병(1812) 몰다비아민주공화국(1917) 루마니아에 통합(1918) 소련점령 및 합병(1940~1991) 몰도바공화국(1992) |
| 자카프카즈 3국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 소련 내 분리독립(1936) 분리독립(1991. 4) |
| 중앙아시아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소비에트공화국(1924) 독립(1991) |

와 몬테네그로는 연방을 유지하다가 2006년 몬테네그로가 독립하면서 결국 유고슬로비아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갈등으로 1993년 분리 독립되었다. 동티모르는 1977년 인도네시아의 무력침공을 받았으나 2002년 독립을 이루었다.

이상과 같이 시대적 추세는 개별적 국가들의 독립이지 분리된 국가들의 통합은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분열된 국가들이 재통합을 이루는 드문 사례도 존재한다. 예멘의 경우가 그것이다. 예멘은 1918 예멘아랍공화국과 Aden항을 중심으로 하는 영령 예멘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1967년 영국지배에 반발하며 공산주의 체제로 남예멘이 독립하였다. 그러다 경제과탄으로 1990년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20세기에 일어난 통일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의 사례가 주목된다.

〈표 2〉 20세기에 일어난 통일의 예

| 국가 | 통일의 예 |
|-----------|---|
| 베트남 | 공산체제와 식민체제의 대립, 식민 지원군의 철수, 공산체제에 의한 무력통일 |
| 독일 | 공산/자유의 대립, 공산제국의 붕괴, 공산체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합병 |
| 예멘 | 자유/식민체제의 대립, 자유/공산체제의 대립, 공산체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합병 |
| 중국(중공/대만) | 분단 지속 |
| 한국(남북한) | 분단 지속 |

IV.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거시적 차원에서 이같이 정리하여 본다면 남북의 분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제국의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이 19세기 말 신흥제국인 일본의 영향 하에 들어갔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에 합병된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신흥제국인 일본과 유럽의 제국인 러시아와의 충돌에서 일본이 승리한 당연한 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다. 조선이 1876년 일본의 위협 하에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거기에서 조선이 독립국으로 명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1894~95년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 것은 조선의 장래를 위하여 참

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조선을 합병하였지만 만일 러시아가 승리하였다면 러시아에 의하여 대한제국이 합병될 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9세기에 제국의 자비심을 통하여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가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945년에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에 의하여 남북한이 분할 점령된 것은 미소 양국의 협상의 결과였다. 지정학적으로 보아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내전으로 아직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중세적인 제국의 마인드를 강하게 가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경우, 나아가서 공산제국의 모습을 가진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외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1950년 대한민국이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김일성은 신속히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남로당은 그에 동조하였다.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북한의 남한 침공을 승인하고 지원하였다. 이 당시 미국이라는 제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북한의 침공에 의하여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통일된 한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련제국의 지배를 받는 세계의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운이 좋았다면 1989년 혁명의 여파로 소련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아니라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서 중국이라는 제국에 식량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20세기에든 그리고 21세기에든 여전히 국제질서는 제국의 힘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소련 제국이 붕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국의 질서는 유지된다. 지금 21세기에 제국의 질서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제국들의 상호관계로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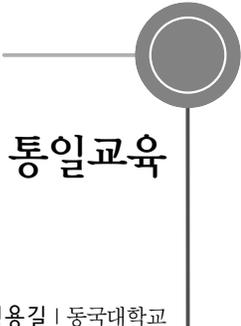
- 미국 및 서유럽: 자본의 지배를 바탕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영토적 팽창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념의 측면에서 보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 인권의 문제에 관심이 깊으며 문화적으로는 개방적이다. 만일 이들을 제국으로 본다면 제국을 유지하는 비결은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이며 이는 혁신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비결이 있다. 이들은 제국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제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일본과 독일: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였다가 패전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그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게 된 일본과 독일은 미국 및 유럽 형의 제국에 속하면서도 다른 유형이다. 그 특징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불균형이다, 경제적으로는 막강하지만 군사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강국으로 등장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러시아: 공산제국을 오랜 동안 유지하였지만 체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제국의 영토를 많이 상실하였지만 아직도 상실할 위험이 많기에 정치적으로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행하며 정치적 지배의 방식을 통한 제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 20세기 말에 개혁개방 정책을 통하여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자본주의 경제를 실용적으로 접목하여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제국이다. 이 제국은 중세형의 영토적 야심이 강하고 신흥제국으로서의 패권주의가 특징이다. 제국의 목적을 위하여 인권은 언제나 희생될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한다. 공산당의 독재가 유지되며 민족들의 독립운동은 강한 군사적 탄압을 받는다.

남북한의 관계는 이들 4대 유형의 제국들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문제가 그들 제국의

안보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북한 통일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접근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남북문제는 세계의 4대 제국의 이해관계를 따른 동학을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할 때에만 접근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제국들의 인도주의에 희망을 가지면서 나라를 잃었고 제국들의 인도주의에 희망을 가지면서 독립을 기대하였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이제도 또한 많은 사람들은 제국의 인도주의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김일성기문의 인도주의에 희망을 가지고 남북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인가?

V. 맺음말

이상에서 간략하게 20세기의 국가들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을 생태계라는 은유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충돌의 영향으로 국민국가들이 생겨나는 것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이유는 적어도 협소한 국민국가적 시각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마치 국민국가 형성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양 과장하는 통상의 역사 서술에 대하여 일종의 비판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고찰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론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하고 사례들을 좀 더 유형화하고 재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된다고 한다면 본고와 같은 접근방법은 보다 폐쇄적이고 환상적인 작금의 통일 논의에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일교육

정용길 | 동국대학교

1. 머리말

교육은 어느 나라, 어떤 지배체제, 그리고 어떤 사회질서를 막론하고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느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들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일깨워주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굳히려면 그들 나름대로 국민을 그 방향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분단국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자기 체제로 통일을 하기 위한 교육이요, 또한 통일 이후 그 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할된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1998년에 『통일교육지침서』로 펴낸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통일교육에서 통일과정 또는 통일 이후에 종교의 역할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종교는 초인간적인 신앙체계를 통하여 집단의 목적과 정의를 세우고 도덕적 기초를 부여하여 사회질서 유지와 통제에 커다란 공헌을 한다. 특히 종교는 신봉자들을 종교적 행사에 참여케 함으로써 동일집단에 소속감을 갖게 하고, 동류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종교는 사회질서를 존중하고 집단적 행동규범에 순종하며, 대인관계에서 대결과 투쟁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요구한다.

아울러 종교가 갖는 고도의 신앙심과 자비와 사랑의 정신은 교육, 문화,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 병원, 학교, 구제사업과 같은 사회사업을 통하여 인간의 양심을 일깨워 주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위험부담이 적으면서 쉽게 동질화될 수 있는 부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종교교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단국이었던 베트남, 예멘, 그리고 독일통일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은 어떠했고, 또 남북한 종교계의 교류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통일교육에서 종교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운동과 통일 후에 종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타 분단국 통일과정에서 종교의 역할

제2차 대전 후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국가로는 베트남, 예멘 그리고 독일이 있다. 특히 독일이 통일되는 데 영향을 미친 동독의 자유화 운동에 동독의 교회가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베트남, 예멘,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종교가 어떻게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베트남의 사례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은 공산화 통일에 일조를 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들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식민정부의 이기적인 정책의 폐해로부터 도피처를 구하고자 종교에 심취하였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남베트남과 공산주의노선을 따르는 북베트남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히 공산정권의 북베트남에서는 종교활동이 어려웠던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던 남베트남에서는 활발하였던 것이 특징이었다.

1955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된 남베트남의 고 딘 디엠은 베트남 주민들에 대해 철저한 독재정치를 하였다. 디엠정권은 야당 및 반정부조직을 탄압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도 참여하는 이른바 ‘칸라오’라는 비밀 정보조직을 운영하였다. 이에 반해 불교를 비롯한 기타 종교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즉 종교인을 필두로 지식인, 노동자, 농민

등 비(非)정치집단의 정치적 요구는 계속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4년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한 좌경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족 해방진선’은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와 합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1957년 이후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2년에는 ‘인민혁명당’을 조직하여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이 공산화되는 동안 도시지역에서는 지식인, 불교도,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어 마침내 1963년 디엠정권은 군사쿠데타로 붕괴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에 불안을 느낀 미국은 1964년 톤킹만 사건을 계기로 전투병력 사용과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결정하였다. 그 후 남베트남 정부군과 베트남 임시혁명정부(베트콩) 간 분쟁의 내전적 성격은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국제전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1973년 6월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일명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고, 1974년 12월부터 남베트남 정부군에 대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본격적인 총공세가 전개되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북베트남의 주도로 공산화 통일이 되었다.

당시 남베트남 주민의 97%는 종교를 갖고 있었다. 남베트남에서의 종교는 정부와의 도덕적 경쟁을 통해 사회부패를 억제하고, 그 권위로 사회정의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성직자들에 대한 신도들의 존경은 사회질서 유지의 수단이 되었고, 주민들은 종교이념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와 성직자들은 남베트남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베트남 해방군도 전쟁기간 동안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베트남해방군은 종교활동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당면 목표였던 남베트

남의 공산화를 위해서 다수의 베트남 대중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해 적대행위를 보이지 않고 적절히 이용하였다. 이것은 통일 이후 취해진 통일정부의 종교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종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국가법이나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유화정책을 썼다. 그러나 반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종교지도자와 신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정책을 펼쳐 통일 이후에 필요하였던 종교를 통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2. 예멘의 사례

예멘은 분단이전에 이슬람의 전통을 갖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계층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봉건적 신분제 사회였다. 예멘은 1962년 9월 26일 북예멘 지역에서 ‘예멘 아랍공화국’을 수립한 북예멘 정부와 1963년 6월에 결성되어 남예멘지역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무장독립운동을 주도해온 민족해방전선이 1967년 11월 30일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운 ‘남예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분단되었다.

북예멘의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면서도 자이디부족과 사파이 부족 간의 대립으로 지속적인 갈등양상을 보이며 북예멘 사회의 통합에 장애를 주었다. 남예멘 주민들도 수니파 사파이계열의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었는데,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무신론을 강조하는 남예멘 정부는 종교활동을 금지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정권 초기에는 이슬람 승려들을 모욕하거나 살해하는 등 종교교단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종교탄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주변 아랍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남예멘 정부는 폭력적 억압을 자제하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강한 보수적 성향을 의식하여 회유책으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이슬람 축제기간을 준수하면서 종교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것은 종교단체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종교단체의 운영 자금을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도록 하면서 이슬람 교리를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여 교리에서 신과의 관계를 격하시키고 해방신학적인 면을 부각하여 착취와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남예멘 정부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슬람교를 변형시키려 하였으나, 전통적인 교리를 중시하는 민중적 이슬람교도들이 종교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복고주의 운동이 전파되어 이슬람 원리연구회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전통적인 종교활동의 명맥은 계속 남예멘 주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사회주의 개혁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남·북예멘은 비록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구조, 특히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종교활동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통일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 독일의 사례

독일통일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특히 독일교회의 역할은 앞에서 살펴본 베트남이나 예멘의 경우와는 달랐다. 동독에서는 1945년 이래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었다. 국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교회를 종교적인 공간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하려 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폐쇄의 위기에 놓였으며, 1950년대에 81.6%였던 기독교인이 1970년대에는 40.0%만이 교회에 적을 두는 등 종교활동은 상당히 위축되

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독 정부는 한편으로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정책을 피하고 회유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동·서독 교회의 분리를 유도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동독의 교회는 1963년 “교회의 자유와 봉사를 위한 10가지 항목”을 채택·선언하였고, 1968년 말 ‘독일통합신교단체(VELK)’를 결성하여 ‘독일신교연합회’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정부는 목회자들의 상호방문을 허용하는 등 동·서독 개신교회 간의 교류 자체를 봉쇄하기보다는 적절히 교류와 접촉을 관리하는 온건한 조치를 취했다.

동독에서 종교활동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부터였다. 1978년 3월 6일에 있었던 동독의 호네커와 개신교연맹 의장 미첸하임 간의 협의모임에서 동독 정부는 1968년 4월 헌법개정 후 처음으로 교회의 독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모든 공적 직책은 국가의 허락 없이 교회자체가 처리하는 사안이 되었고, 동독교회의 위상은 ‘사회주의 안의 교회(Kirche im Sozialismus)’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교회는 동독에서 유일하게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공공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동독교회의 독자적인 활동과 자유로운 공간의 향유는 동독의 전체주의적인 암흑기에 체제비판적인 인사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었고, 자유시민들의 활동공간이 되었다. 이후 수년간 교회는 정부와 점점 멀어졌다. 그러면서도 동독 정부는 1980년대 초 서독에 대한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개신교회가 참여하는 평화운동을 장려함으로써 1960년대에 중단되었던 동·서독 합동 종교대회가 서독의 EKD(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와 동독의 BEK(Bund evangelischer Kirchen in der DDR)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에는 BEK(동독 기독교 교회연맹)의 연방총회에서

민주적 정당정치와 새로운 선거방법, 여행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1988년에는 국가와 교회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어 교인의 외국여행이 제한되었고, 신자들의 예배참석 방해와 교회주보의 검열 등 종교활동에 대한 억압이 나타났다. 동독정권은 동독 개신교내의 민주화운동 그룹들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했다. 그러자 동독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은 더 늘어났다. 평화, 환경, 인권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점점 더 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요컨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개신교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동독 공산주의 독재의 몰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동독의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체제저항을 한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교도로서의 양심에 따른 의무이행, 둘째, 복음지향, 셋째, 사회를 위한 개신교의 사회윤리, 넷째, 개혁에 뿌리박고 있는 개신교의 계몽효과, 그리고 다섯째, 서독 내 개신교 신자들과의 연대 등 때문이었다.

여하튼 이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1989년 5월 동독 지방선거의 부정을 밝혀내었고, 8월 13일에는 성명을 발표하여 여행규제의 완화조치와 권리보장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8월 28일에는 동베를린의 골가타교구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의 회원들이 의회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요구하며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창당을 제안하였다.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와 베를린의 사마리아교회 그리고 겐세마네 교회는 민주화운동의 집결지가 되었다. 9월 9일에는 동독의 11개 지역 대표 30명에 의해 재야단체인 ‘신광장(Das Neue Forum)’이 결성되어 동독의 개혁운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하였고, 9월 10일에는 헝가리 정부가 그들의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는 사태에 이르자 동독의 변화는 견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이른바 ‘평화혁명(Friedliche Revolution)’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동독의 교회는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를 한 동독의 민주화 운동에서 분명히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III. 통일교육에서의 종교문제

체제가 다른 남북한은 종교에 대한 시각이 아주 다르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에서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의 종교관을 피력하였다. 북한의 『철학사전』도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 억압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중략)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 국가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였다. (중략) 낡은 사상잔재인 종교적 편견은 강제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중략)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힘 있게 벌리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첫째, 종교의 본질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신념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 둘째, 종교의 기능을 지배계급의 착취도구나 이용물로 보고 있다는 것, 셋째, 종교는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기 때문에 사상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위의 김일성 저작선집이나 『철학사전』의 내용으로 보아 북한에는 종교가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1959년 정하철에 의해 로동당

출판사가 발간한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라는 반종교 지침서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종교가 지배계급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도구 또는 제국주의자에 의한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반종교정책을 폈다.

이렇게 북한이 반종교정책을 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일성이 정권을 창출·유지하는데, 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하는 데 종교가 방해가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 종교인은 거의 사라졌고, 1960년대 말경의 북한은 신앙의 불모지대가 되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종교인도 반혁명적 요소로 감시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초기에 예배금지, 종교소유토지몰수와 등과 같은 반종교정책을 폈으나 차츰 완화하여 부분적으로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체제선전에 활용하였다.

북한 종교정책의 주요 변화는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즉 1972년 북한에 3년제 평양신학원이 세워지고, 사라졌던 조선불교도연맹 같은 종교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찰을 복원하기 시작하였고, 승려와 신자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종교를 반동시 하던 부정적인 시각이 종교를 이용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7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북한의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신헌법 제68조에서는 이러한 반종교 선전의 자유부분을 삭제하고,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면서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 이래로 종래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해석 및 개념을 순화해서 표현하거나 삭제하는 등 과거와 다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전에는 교회를 “반동적 사상과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신자들이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장소”라고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국가의 종교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식량난에 따른 구호물자 지원 등을 계기로 남한의 종교단체와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남한의 종교단체도 평양에 초청하였으며, 남북한 공동법회, 공동예배 그리고 동시 미사를 개최하는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그 결과, 사찰의 복원, 교회와 성당의 건립, 종교단체와 성직자들의 활동, 종교의식의 주기적 거행, 반종교정책의 수정, 남한 및 해외 종교인들과의 접촉과 교류 등은 그 정치적 목적이나 또 그러한 실상이 북한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북한의 종교현실이 되었다.

북한의 종교현실이 이와 같은 수준으로나마 변화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북한 정권은 북한에도 종교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종교를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이미 종교문제를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종교단체가 국제 종교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에도 종교가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외관계를 개선하는데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국가의 종교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데 종교단체를 활용하였다.

셋째, 남한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즉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해외의 동포 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종교

단체 명의로 대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종교회담을 빙자하여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종교인 집회를 갖는 등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며 통일전선전략에 치중하기도 하였다.

넷째, 북한의 종교정책이 변한 것은 물질적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적 종교단체 또는 종교계와 외교채널을 구축한 것이나 남한 또는 해외의 동포 종교인들과의 교류를 시도한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물질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1992년 개정된 신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는 등 외형적 변화는 있었으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원이나 신앙의 대상인 초월적 존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단체가 등장하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하여 북한에 종교가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김일성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도 우리를 반대하는데 합세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불필요한 중앙종교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의 비밀교시를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김정일도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라고 다원주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종교단체는 북한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외곽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종교 교류와 협력에 한계가 있다.

한편 남한의 종교계가 북한의 종교계와 교류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들의 종교를 북한에 전파,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포교·선교 활동은 그 종교가 행하여야 할 큰 임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실천운동이다. 각 종교마다 보시, 사랑, 구원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리가 있다. 특히 북한의 동포들은 오랜 굶주림과 인권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 부문의 실천이 요구되어졌다.

셋째, 종교교류가 ‘통일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종교교류가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그것이 후에 통일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통일교육에서의 종교문제는 북한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인 것을 감안한다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서 시행한 정치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좋을 듯하다.

즉, 정치교육이란 용어는 정당들이 정치활동의 일부분으로 행하는 교육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있어서 정치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 또는 안목을 갖게 하는 일종의 시민교육 또는 공민교육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르게는 분단된 나라들에서 상대 국가에 대한 자기 나라의 우월성을 과시하여 청소년들에게 그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까지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

서독의 정치교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 정치교육의 기본목표는 자유민주주의이념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본법을 근간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통일에서 능동적으로 기여할 능력 있는 시민을 육성하였다.

둘째, 서독의 정치교육은 기본법을 근거로 판례위주, 토론방식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또 이 교육내용이 사회현실과 괴리되어있지 않아 교육적 효과가 컸다.

셋째, 서독의 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교육의 효과가 매우 컸다.

넷째, 서독에서는 인간 삶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체제 옹호를 정치교육의 기본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통일 전이고 통일 후에 그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 종교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면서 독일의 정치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통일 후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종교계의 역할

현재처럼 분단된 남북한 간 국력의 격차가 현저히 크게 나타나 있으면서, 상호 간 경쟁과 대결이 지속되면 그만큼 통일은 어려워진다. 특히 북한 동포들은 인권문제의 사각지대에서 식량난·에너지난 등으로 매우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과 보시, 헌금을 통한 북한동포 지원이 가능한 종교단체가 그들의 종교적 이념에 따라 북한동포들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면 그 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독일에서는 분단과정에서 기독교, 가톨릭 등의 종교단체들이 동독의 교회단체, 교회부속병원, 양로원 및 기타 기관의 수백만에 달하는 동독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동독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독에 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 동독체제내의 민주화 세력을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남한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북한동포들을 형제애, 동포애로 사랑하고 도움을 베푸는 일에 나서고 있다. 즉 북한 수재민 지원을 계기로 1996년 1월 15일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그리고 천도교 6개 종단이 '범종단 북한 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범종추)'를 구성하였고, 6월에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이처럼 북한에 종교단체가 등장하고, 종교활동이 다시 일어나서 남북한의 종교인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은 남북교류에도 유익하며 후일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종교교류를 종교계에서는 '통일운동'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불교계에서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처럼 단체의 이름에서부터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고, 기독교계에서도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회의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등이 그 예이고, 천주교에도 민족화해위원회와 통일사목연구소 등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 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도 하지만 ‘통일’ 대신 반전, 반핵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였다. 평화 속에 동·서독이 존재하면, 그것으로 독일은 통일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통일 전에 동독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 개혁운동, 저항운동을 한 것은 그 근본 취지가 정말 동독 내의 개혁운동이요, 체제저항운동이었지, 그것을 ‘통일운동’ 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동독의 교회가 반전, 반핵, 평화운동을 펼쳤듯이 북한의 종교계도 반전, 반핵, 평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독의 개혁,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은 기독교인들이었으나, 북한에는 동독에서처럼 개혁·민주화운동을 수행할 만한 종교조직과 종교인이 아직 없다는 것도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종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만한 사항은 북한의 대남 창구는 사실상 하나의 단일 창구인데 반하여, 남한의 대북 창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 종교, 종파, 조직, 기구별로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각 종교, 종파들 간의 경쟁, 분과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 내 각 종교들 간에 벌어지는 교세의 확장을 위한 포교경쟁과 종교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 내 교단, 교파 간의 세력확장을 위한 치열한 경쟁도 반교류, 반민족, 반통일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종교간 또는 종파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창구를 단일화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종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 북한에서도 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키워 주는 데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종교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종교가 통일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주민들은 종교는 나쁜 것, 무서운 것, 혁명에 저해가 되어 없어야 할 것 등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이렇게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데는 그동안 계속된 북한의 반(反)종교정책에서 비롯된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11년간의 의무교육기간 동안 종교를 비판위주로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은 과거 종교인들이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탄압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은 종교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고,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동안 북한의 종교정책이 바뀌었다고 해도 전면적으로 신앙의 자유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의 종교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을 배려하는 일들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종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포교와 선교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인도적·민족적 동기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남북한 종교교류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종교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활동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북한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북한에 참다운 종교인 그리고 참다운 신도들의 수가 크게 증대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한 간의 종교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동·서독간의 각 분야별 교류 가운데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록한 것은 종교분야의 교류였는데, 이것은 독일의 기독교 문화적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종교분야의 교류는 크게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교의 경우는 정치성을 배제하려는 교구의 의도에 따라 카리타스(Caritas)와 같은 구호단체 활동 이외에는 동독당국과의 마찰을 야기하는 활동은 비교적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전통적으로 동독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던 신교, 즉 교회의 활동은 매우 두드러졌다. 서독에 본부를 둔 독일 신교연합회(EKD)는 분단 초기부터 통일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분단문제와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했다. 특히 분단 직후부터 ‘교회의 날(Kirchentag)’이라는 이름 아래 양독 지역을 망라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국적 신자모임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함으로써 양독 주민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종교교류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교회차원에서 이루어진 동독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대부분의 동독교회는 서독에 자매교회를 갖고 있었다. 특히 빌리 브란트의 긴장완화정책으로 동·서독간의 교류는 활발했었다. 이를테면 동·서독 교회 간에는 화해를 위한 기독교 NGO인 ‘Aktion Sühnezeichen’ 과 같은 단체들이 생겨 이웃국가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공동행동을 취했고, 동·서독 교회들 간 또는 도시들 간의 협력도 활발하였다.

다시 말해 서독의 종교단체는 복지구호단체(Diakonie, Caritas)를 통한 동독 교회 및 주민들에게 광범한 물질적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탈출 및 이주자들에 대한 서독 정착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신교 구호단체의 지원창구는 정치범 석방 및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내독 간 거래 창구로도 활용되었다. 더욱이 개신교회는 동독 정치범들을 직접 서독으로 이주시켰고, 그 대가로 동독 정부에 상당한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V. 맺음말

북한은 이념상 종교를 허용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통일되기 전 월맹은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위해서 종교에 대해 포용정책을 취하며 적절히 이용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독일교회의 역할은 매우 컸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종교교류에서 세 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동·서독 교회들은 ‘교회의 날’ 행사를 함께 하면서도 그것을 반전·반핵·평화운동이라고 했지, ‘통일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북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교류를 하면서 ‘통일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동독의 개혁·저항운동의 주도세력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에는 동독에서처럼 개혁·저항운동을 수행할만한 종교조직과 종교인이 아직 없다. 또한 북한은 대남 종교교류의 창구가 사실상 하나인 단일 창구인데 반하여, 남한의 대북창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 종교, 종파, 조직 그리고 기구별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남한 내 각 종교, 종파들 간의 경쟁과 분파주의도 극복되어야 한다.

물론 통일이 된 후에는 통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북한을 돕고 있으나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종교단체가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공통의 창구를 통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는 창구를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한 간의 종교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북한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차츰 바뀌게 되어 남북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통일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통일된 한반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은

다원주의 사회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종교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다원주의적인 사회로 통일이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다원화되고 계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간의 종교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9.
- 김국신. 『예멘 통합사례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기태 역. 『베트남 공산화의 이상과 현실』. 서울: 조명문화사, 1989.
- 김도태. 『베트남 통합사례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병로.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 협력의 제도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_____.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1006호. 1996.
- _____. 『북한실상 자료집』. 1995.
- 류성민. 『북한종교연구 II』.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2.
- 박재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종교의 역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66.
- 북한문제연구소. 『북한 365일』. 2004.
- 조 민.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조성을 역. 『베트남 현대사』. 서울: 미래사, 1986.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0.
- 통일부. 『북한개요』. 2004.
-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6.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공편. 『통일·북한 핸드북』.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7.

『김일성 저작집』 제22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Bidwel, Robin. *The Two Yemens*. Boulder: Westview Press, 1983.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DR-Handbuch*. Band 2, Köln: Verlag. 1985.

Hanke, Christian, *Die Deutschlandpoliti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von 1945 bis 1990*. Berlin: Duncker & Humboldt, 1999.

Oktober. *Wider den Schlaf der Vernunft*. Berlin: Elefan Press/Neues Leben, 1989.

Poter, Gareth.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1993.

2. 논문

류성민.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종교현황.” 『통일논총』, 제16호. 1998.

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협의회. “불교계 통일운동의 전개과정과 향후 전망.” 『불교운동』, 통권 제2호. 1991.

박명철.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우리의 통일 현실: 독일통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월간 기독교사상』. 1997.

_____.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교회의 활동과 윤리적 과제.” 『통일연구』, 제7권 제2호. 2003.

이말테. “독일통일에서 종교의 역할.” 『아태평화재단 소식』, 제17호. 1996.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_____. “독일의 정치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 비교.” 『통일문제연구』, 2003년 하반기호. 2003.

_____. “한반도 통일에서 종교의 역할.”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4권 제2호. 2004.

정천구. “북한 불교의 오늘과 통일시대 불교의 역할.” 『다보』, 통권 제13호. 1995.

Bickhardt, Stephan.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의 반정부세력들과 교회의 통합에 관한

관점.” 『통일연구』, 제7권 제2호. 2003.

Eckert, Rainer. “저항운동, 반대세력, 독재정치: 독일의 두 번째 독재정권(1945~1989/90) 하의 교회.” 『통일연구』, 제7권 제2호. 2003.

Brauburger, Stefan. “Vertraege zur deutschen Einheit.” Weidenfeld, Werner/Korte, Karl-Rudolf(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PB, 1993.

Cigar, Norman. “Islam and the State in South Yemen: the Uneasy Coexistence.” *Middle Eastern Studies*, Vol.26, No.2(April 1990).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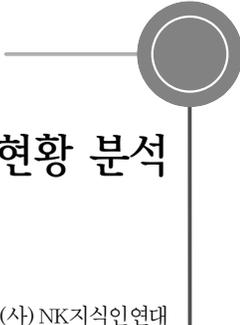
『로동신문』. 1992년 1월 6일.

『불교신문』. 1996년 12월 2일.



탈북자의 시각

-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 현황 분석 | 김홍광 • (사)NK지식인연대
- 탈북자의 시선, 통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이애란 • 경인여자대학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 현황 분석

김홍광 | (사)NK지식인연대

1. 들어가며

1990년 후반에 접어들어 북을 탈출하여 남으로 내려오는 탈북자들의 대량 행렬이 시작되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2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북한을 떠난 순간부터 탈북자들은 떠나 온 정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김정일체제를 변혁시켜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된다. 때문에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입국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여러 주체들에서 주관하는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여 남한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자신들이 체험해 온 북한사회생활체험과 실상을 전달할 때, 보수적이며 반복적인 표현을 강하는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60년 초부터 근 12년간 진행했던 반공교육과 체제경

쟁에서 완전히 우위를 차지한 1980년 이후로부터 다소 느슨해진 반공교육과 민주화의 진전이 세대 간 뚜렷한 격차를 보일 정도로 대북관, 통일관, 안보의식 등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정권교체시기 사회통일교육의 정책과 기조에 승계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의 참여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다.¹⁾ 그렇다고 마냥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탈북자들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험과 탈북 이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명의식으로 말미암아 쉽게 변동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현황과 특징들을 개괄하고, 최근 탈북자 NGO들이 사회통일교육 참여가 정부의 사회통일교육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고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에 튜토리얼 형식의 설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참여'라는 의미는 탈북자들이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각이한 주체들에 의하여 통일교육강사로서 출연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II.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과정에 대한 고찰

1. 반공교육시기

한국의 사회통일교육의 중점은 북한과 대결하는 남한 정치체제의 안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통일교육은 반공론에 근거했다. 반공론적 교육은 상대방(북한 및 공산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측(남한 및 자유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반공교육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대결의식과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반공교육은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흑백논리에 기초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부정적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2. 통일안보교육시기

반공교육은 1980년대 후반기에 통일안보교육으로 변화했다. 제5차교육과정과 제6차교육과정에 이어 1997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교육과정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1997년부터 「통일대비교육지원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통일교육지원법」(1999.8.6) “통일대비 교육 지원법” 제정을 둘러싼 두 개의 핵심적 쟁점은 첫째, 과거 보수적이고 체제수호적 안

보·통일교육에 대한 반성,²⁾ 둘째, 통일은 당면한 현실의 과제이며 이에 국민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확대와 체계화의 필요때문이었다.³⁾ 이러한 반성을 기초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사회통일교육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의 인원수와 횟수 그리고 역할은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정책적 기조의 변천과 함수관계로 변화해 왔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반공교육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대결감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더할 나위 없이 액티브하고 리얼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DMZ를 넘어 온 북한군복 차림의 귀순용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더 말이 필요 없는 반공교육이었다. 남북사이의 치열한 체제경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우리 편으로 넘어 온 귀순용사들을 통하여 국민들은 경쟁의 우위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것은 첫째, 정치 및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둘째, 국민적

2) 과거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으로서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 1) 통일교육은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도모하는 보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2) 폐쇄적이고 일방적 방식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의식과 신념을 내면화하는 등 체제수호적이고 소극적이었다.

3) 박용현,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실천과제』 (서울: 통일원,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 공청회, 1997), pp. 3~5; 장명봉,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의 요청: 통일대비교육 지원법 제정의 중요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1997.7.3), pp. 5~6.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 기반을 조성하게 하며, 셋째, 국가, 정치, 정책의 목표 설정이 일관된 기준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며, 넷째, 국민 각자의 인생목표 및 행동양식의 설정, 선택, 비판 등의 기준으로서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고, 다섯째, 소수인에 의한 급격한 정치적 변동과 변혁을 위한 획책에 대해 저항하게 하며, 여섯째, 외국의 침략과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국민적 저항의식을 고취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국가안보 향상을 도모하려는 반공교육의 성과를 확실하게 하는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80년 후반기에 민주화과정이 급속도로 진척되고 남한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역전승하게 되면서 남한국민들 속에서는 더 이상 북한이 경쟁상대가 아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저조해져 갔다. 정부도 북한의 남침위협을 정권안보를 위한 구실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공교육을 점차 통일안보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이러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이에 참여하는 탈북자들의 활용빈도와 활용범위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독차지하던 대북정보의 일반인 공개, 또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에 대거 참여하면서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출연을 요청하는 주체들이 대폭 확장되었다. 대신 북한군복을 입은 '상징적인' 귀순용사로서의 탈북자가 아닌, 북한실상에 대하여 생생한 증언을 하는 소위 '교감하는' 탈북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통일원이나 중앙정보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대북정보 대신 탈북자들의 전하는 북한내부 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실증체험에 더 피부에 와 닿게 되었고 이러한 수요는 날을 따라 커져가고 있다.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증대되는 관심 속에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입국하자마자 여기저기로 사회통일교육에 대거 출연하게 된다. 통일

부, 국정원, 통일교육원, 민주평통, 기무사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들뿐 아니라 자유총연맹, 통일교육협의회, 홍사단민족통일본부, 경실련을 비롯한 유수의 사회통일교육 주체들이 앞 다투어 탈북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북한실상강연을 진행하였다. 일부 탈북자들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회청문회, 북한관련 강연회들에 출연하여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쏟아냈다.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내부소식은 그동안 그토록 비밀스럽던 철의 장막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들이 제공하는 북한내부 실상들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체제경쟁 우위를 실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탈북자들이 사회통일교육에 대거 참여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였다. 북한사회는 하나의 칸막이 사회이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여도 개인들이 의식하고 있는 북한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자들은 청중 앞에서 서기만 하면 북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혹은 경험도 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직접 보고나 체험했다고 과장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상들은 사회주의권에서 흔히 있는 현상들이고 또 지극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북한적 현상으로 설명되거나 또는 극히 부분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북한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처럼 오도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진실’에 접근한다고 하면서 ‘과장된 북한의 진실’로 안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 경우 정부가 의도하는 정권안보에 도움이 되는 과장은 몰라도 정권안보에 위협로운 과장, 또 그 반대로 사실이라고 하여도 정권안보를 해이케 하는 사실전달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는 국내입국탈북자들의 지금 처럼 많이 않았고 보통 신변보호경찰관들이 탈북자들을 밀착 동행보호하고

하면서 이들의 동선과 성향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였기 때문에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탈북자들의 강연이 정권안보, 국가안보에 반하는 내용을 전할 때에는 그들을 배제시켰다. 이러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워낙 성향이 반복, 보수적인 탈북자들이고 보니 이들은 주로 북한의 진실 가운데서도 극히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북한의 혐오스러운 실상들만을 전달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3. 통일교육시기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쭉 계속되어 왔던 통일안보교육의 패러다임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실시하고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해오던 통일안보교육은 그 내용과 주안점, 그리고 진행형식과 방법에 의하여 근원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사회통일교육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끈 동인으로서 남북 간에 긴장과 적대감을 씻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 대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의 일방이라는 통일관에서 본다면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쪽의 특수한 사회체제를 이해하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다름없는 같은 민족이란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관한 무지와 불신은 통일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에 알리고, 이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동질성과 상이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

질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며, 상호이해의 수용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사회화적 기능을 통일교육이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전환시키는데 작용했던 주요한 정책적 기조들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 사실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였다. 사회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사회의 전반적 특성, 특히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념과 체제중심의 접근은 남북한이 체제 통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방향 전환된 통일교육에서도 탈북자들의 참여는 유효했다. 남북의 화합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북한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폭로하는 식의 북한실상 강연은 지양되었고 대신 남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진행되는 탈북자들의 북한실상 강연이 필요하게 되었다.

통일교육에서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한 탈북자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기도 하였고 당혹하게 만들기도 하였다.⁴⁾ 왜냐하면 북한체제의 반인권, 반민주, 반인민적인 제도와 정책들을 비판하거나 북한에서 살았던 아픈 경험만 전달하는 데로부터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균형적이고 비감성적인 북한실상강연을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극과 극의 반전이라 가히 말 할 수 있었다.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4) 국정원과 기무사, 통일교육원에서는 북한실상강연에 참여하는 탈북강사들을 상대로 연 1회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연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전달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에 습관된 탈북자들은 이런 경우 정치적 경향성에 따라 내용이 크게 변동됨에 대하여 토로하는 사례가 많다.

북한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자는 강연을 하면서도 이것이 통일을 더디게 하는 그래서 두고 온 북녘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지체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사회통일교육이 새로운 통일교육서비스시대에 들어서면서 강의내용은 물론, 강의의 형식과 진행방법에 의해서 이전보다는 더 높은 질적 수준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탈북자강사들은 단조로운 구술보다는 아코디언을 메고 북한의 노래를 직접 들려주면서 북한 실상강연을 하였고, 또 북한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CD나 DVD를 준비하여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통일강연을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백두한라 예술단’, ‘평양민속예술단’이 펼치는 북한식 예술공연을 통일강연과 함께 곁들여 강연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시도들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 들어서면서 통일교육은 교과적 성격을 벗어나 전 국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내실화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게 된다. 햇볕정책을 발전시킨 한반도평화번영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통일 교육분야에서도 북한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정치·제도적 통일에 앞서 사회문화적인 통합과 경제적 통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국민들의 통일외식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형식의 통일교육들이 진행되었다.

이시기 사회통일교육 현장들에서는 보다 많은 탈북자들을 초청하여 북한의 변화실상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지역과 계층들의 다양한 현장체험과 실상들을 청취하였다. 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실상전달을 위해서는 보다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양한 계층, 서로 다른 지역, 다양한 체험으로 북한의 변화상들을 전달하려는 목적 밑에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1년에 3천 명 이상 대량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성향이나 과거경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역, 직종, 연령 등의 기준에만 적합하여 특별한 고려없이 군부대 통일안보 강연을 비롯한 사회통일교육에 참여시키다 보니 원정화 간첩사건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상사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건들은 탈북자들의 사회통일 참여교육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주체들이 자립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북한실상강연 및 대북실상 설명회에서는 여전히 탈북자들이 단골손님으로 초청되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서는 복잡하고 심오한 통일논의보다는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에서의 고생스럽던 생활과 생투를 건 탈북과정에 대한 체험담들은 아직은 탈북자들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고 유다른 통일교육방법으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4. 통일안보교육으로의 회귀시기

한편 2008년에 보수적인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대북정책기조가 햇볕정책의 과오를 비판하고 실용주의적인 상생과 공영의 통일교육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통일교육의 방향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람직한 통일과 바람직한 통일한국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구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놓고 통일교육정책 작성자들과 통일교육실천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새 정부는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통일교육지원법 제 2조 제 1항)이라는 통일교육 목표

에 보다 충실하여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면서 미래지향적 통일관, 균형있는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여 통일교육의 전반적 내용과 수준, 그리고 실시방법들을 대폭으로 조정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제 통일교육은 목가적인 ‘민족우선주의’ 입장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실용주의’와 ‘민족안보 동시 고려’ 원칙에서 국민의 정부 이전시기 통일안보교육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탈북자들도 과거 햇볕정책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쏘여진 햇볕이 아니라 김정일 정치를 연장시키고 북한의 고위관료들의 사치와 향락을 극대화시켰을 뿐, 일반주민들에게는 김정일의 폭압정치를 연장시켜 더 큰 고통을 준 치명적인 과를 범하였다고 격조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10년간 사회통일 현장들에서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서 역설하다가 갑자기 북한의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야망, 정치테러집단으로서의 정체를 폭로하는 강연들을 하다 보니 물론 강사들의 마음은 편했으나 반대로 극히 일부이지만은 햇볕정책에 지지하는 일부 극단적인 청중들의 지탄을 받거나 청강을 거부하고 강연장에서 나가버리는 청중들을 지켜보아야 했다. 한마디로 말하여 통일교육이 통일안보교육으로 회귀하면서 빚어지는 국민들의 찬반의 심성과 진보와 보수로 요약하는 대북관, 안보관의 충돌을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약하는 탈북자들을 고스란히 감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반공교육시대로부터 시작하여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다시 통일안보교육의 각이한 시기에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현황과 탈북자강사들의 성향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북한을 적으로, 흡수할 동족으로, 협력과 화해의 파트너, 실용적인 통일 상대로 변천되어 온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기초의 변화를 겪으면서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 의식도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기회가 지난 시기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장하던 데로부터 특정할 수 없는 많은 관·민·학교들의 통일안보교육 초청으로 전환되면서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대상, 더 많은 청중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내부 실상 폭로, 북한체제타도로부터 대북지원의 필요성, 북한개발협력의 의의,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주제를 잡을 수 있는 자유로운 참여로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III. 탈북자 NGO별 통일안보교육 참여 현황

반공교육시대와 통일안보교육 시기에는 탈북자들이 개인적으로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초청되어 북한실상 강연에 참여하였다. 그 후 통일교육시기와 지금의 통일안보교육 회귀시기에는 탈북자 NGO들이 단체적 차원에서 사회통일교육 실행주체들과 연계하여 탈북자강사들을 파견하거나 개인적 자격으로 초청되는 경우에도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났다.⁵⁾

아직까지는 탈북자 NGO들이 사회통일교육 실행주체로서 기능은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주체들로부터 강사파견 섭외를 받아 적정자들을 강사로 파견하거나 단체활동을 북한실상강연과 접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5) 탈북자 NGO들의 사회통일교육의 참여가 대체로는 일정 단체 또는 개별적인 인원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이다. 때문에 탈북자 NGO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게 되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사회통일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요 단체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1. 탈북자 NGO들의 일반 현황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새롭게 편입되어 사회정치 생활분야에서 가장 놀라워 하는 것이 아마도 제3섹터 즉 시민사회의 존재와 시민단체들의 눈부신 활동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조직·결사·정부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공동된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도모되면 누구든 어느 때이건 2인 이상이면 바로 친목회나 동호회로부터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조직이든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처럼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할 수 있고 함께 모여 공동의 목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자유에서 엄청난 매력으로 느끼는 탈북자들은 그러한 자유가 깡그리 박탈되었던 북한에서의 할 수 없었던 실천적인 조직결성들을 하는 데서 정치사회생활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2만 2천여 명의 탈북자사회에 여러 가지 명목의 단체들이 41개가 넘게 조직되었다. 한국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2008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임을 감안하면 4배나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탈북자단체들을 활동특성상 구분하면 친목·동호회가 22개, 이익활동단체가 4개, 북한민주화 및 북한인권단체가 8개, 여성 및 교육목적활동단체가 5개, 학술연구단체가 2개다. 남한의 시민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이며, 약 3천여 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NGO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영향력과 신뢰의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면에서 열악한 탈북자단체들과 뚜렷한 구별을 나타낸다. 물론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대량적으로 입국한지 10년을 조금 넘은 것을 감안하면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통하여 성장하여 온 남한의 재야활동가들과 풀뿌리민주 운동가들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그만큼 탈북자단체들의 활동능력이나 운동경험, 세련된 리더십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주요 탈북자 NGO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 현황

가. NK지식인연대(www.nkis.kr)

NK지식인연대는 고헌력자 전문분야종사자 출신의 탈북자들로 구성된 통일부 사단법인 통일학술연구단체이다. 2008년 6월에 설립된 이 단체는 ① 북한실상의 바른 전달, ② 남북한사회통합비전 개발, ③ 북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 육성을 목표로 계간지 「북녁마을」(2010년 4월 제6호) 발간, 뉴스레터 「최근북한소식」(2010년 6월 17일 제37호), 북한내부정보 서비스, 북한전문연구용역수행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NK 지식인연대에는 통일안보 강연팀이 조직되어 있어 국정원, 기무사, 민주평통, 통일교육원 등 공공기관과 각종 민간단체, 기업체, 지자체, 학교 등에서 섭외해 오는 강사파견요청에 따라 강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NK지식인연대에서 파견하는 강사 대부분은 북한 교수, 교사, 의사, 작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고헌력출신들이다. 또한 상당수의 강사들이 각급 대학원의 북한관련학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한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통일논의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인식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 북한에 살 때에도 하부 정책집행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이 북한사회 전반을 넓은 시각에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평가는 단엽적이지 않고 편중적이지 아니며 해석적인 경향이 강하다.

NK지식인연대의 통일안보 강연팀은 홈페이지나, 유선, 내방 등을 통하여 사회통일교육 강사파견 섭의를 받으면 해당 주체가 요구하는 주제와 청강자의 특성에 가장 적절한 회원을 선발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시켜 파견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씩 강연에 많이 파견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화법과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여 강사들이 강연주제를 정확히 반영한 강의안을 작성하고 청중하게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NK지식인연대에서 파견되는 강사들의 강연내용은 요청주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몇 가지만을 간추려본다면 아래와 같다.⁶⁾

-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바람
-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실태와 변화되지 않는 부분
- 사회주의적 생활 경험과 자본주의사회 생활경험의 비교
- 북한체제의 인권상황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갖는 의미
- 북한의 교육체계의 특성과 교육방법, 대학생활
- 북한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 북한의 선군정치와 본성과 체제수호기관들의 기능
-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남공작현황

6) 각 단체의 자료들은 단체별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거나 단체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취득한 자료임.

- 북한 IT의 현황과 전망

나. 겨레하나예술단(www.cafe.naver.com/hjan54)

겨레하나예술단은 북한에서 가수, 연주가, 교사로 활동하던 탈북자들로 조직된 북한예술공연 및 통일안보교육을 진행하는 탈북자 NGO이다. 2009년 4월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에는 여타의 탈북예술단들과는 유다르게 통일안보 교육팀이 있다. 송낙한 통일교육전문위원이 탈북자출신 20여명의 강사들에게 강연방법을 훈련시키고 강사들의 강연내용을 두루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겨레하나예술단이 진행하는 통일안보교육은 진행형식이 독특하다. 북한 예술공연이 앞서 진행되고 뒤이어 북한실상 강연이 진행된다. 또 다른 형식은 3인 1조로 구성된 통일안보 교육팀들이 통일교육 현장에서 북한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나서 강사의 북한실상 강연을 연속하기도 한다. 때문에 순수한 예술공연을 진행하는 여타의 탈북예술단공연보다는 통일안보 의식 함양차원에서 활용성이 높아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여러 주체들에서 섭외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겨레하나예술단 통일안보강연팀에 소속된 20여 명의 강사들은 서로 다른 독자적인 주제의 강연을 준비하여 놓고 여러 섭외에 부응하게 된다.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통일안보교육의 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진짜 모습과 통일의 길/노래
-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긴 눈물겨운 탈북의 길/무용
- 남북의 문화예술 비교/노래
- 죽음길에서 만나 하나님의 음성/노래
-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실상/춤

- 북한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실태/노래

다. 탈북자동지회(www.nkd.co.kr)

탈북자동지회는 1997년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그의 북한의 개혁, 개방, 통일구상에 공감한 많은 탈북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북한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탈북자 NGO이다. 이 단체의 김정일 독재정권타도,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실태폭로, 북한의 붕괴를 위한 전위부대 양성, 황장엽 명예위원장의 인간중심 철학실과, 탈북자들의 정착지원 목표를 내걸고 활동한다.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에는 통일안보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있고 남한사회의 친북·맹종세력 척결을 위한 강연과 거리홍보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보내는 강사들은 대체로 북한체제의 의해 가혹한 탄압을 받았거나 북한체제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가진 탈북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보수성향의 단체나 기관들에서 많이 강사들을 섭외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에서는 탈북자동지회에 소속된 강사들을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강연, 민방위훈련을 위한 대북실상 강연 등에서 많이 활약하도록 섭외를 주관하고 있다.

탈북자동지회에서 파견되는 강사들은 반북·보수적 성향이 강한데 이들이 사회통일교육 현장들에서 진행하는 강연주제들의 일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 북한통치집단의 반인민성과, 반인권성, 반민주성
- 김정일과 일가족, 최측근들의 호화방탕한 사치생활 폭로
- 김정일의 권력세습과 북한주민들의 노예적 생활의 대물림
- 북한 요덕정치범수용소의 참상

- 탈북자들이 고발하는 북한인권실상

라. 송의동지회(www.sungy.co.kr)

송의동지회는 1980년 8월 300여 명의 귀순용사들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조직된 경찰청후원의 최초의 탈북자 NGO다. 송의동지회는 목적활동으로 북한의 남침위협을 견제하며 전국순회 강연으로 북한의 독재정치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후반부터 많은 탈북자들이 대량 입국하면서 송의동지회는 북한의 최근실상과 김정일 독재정치의 참상을 남한주민들에게 두루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통일안보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송의동지회에는 500여 명 이상의 남한귀순용사, 북한군출신 탈북자, 러시아 별목공들을 비롯하여 북한사회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을 한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경찰청이 주관하는 경찰대상 통일안보강연에 많이 출연하고 있다. 동시에 자유청연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에서 요청하는 대북실상강연, 남북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 체제우위 강연 등에도 적극 출연하고 있다.

송의동지회는 통일안보 강연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국 스탭 중에서 강연섭외를 담당할 인원이 있어 외부에서 요청하는 통일안보강연에 강사들을 보내고 있다. 강사들 대부분은 북한 정권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북한 정권 타도의 일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강연주제들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의 반인민적 법치제도의 고발
- 북한군의 남침위협과 전쟁연습 실태
- 북한 선군정치의 호전성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탄압

- 북한주민들의 반정부의식의 발전과 전망
- 북한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악랄성과 인권유린실태
- 조서노동당의 정체와 사회주의 정치의 허위성

마. 탈북자단체총연합회(www.dyenhap.co.kr)

2008년 4월, 거래하나선교회, 탈북예술인총연합회, 평화의 집을 비롯한 여러 탈북자단체들이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연대방문하여 탈북자정책 지원 단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에서 탈북자단체들을 배제시키는 이유를 물으면서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18개의 탈북자단체들이 결집하여 탈북자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탈북자단체총연합회는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정책협상의 단일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독재정권의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의 남침위협을 잇고사는 남한주민들에게 각성시키려는 목적 밑에 통일안보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 단체는 기독교사회책임(대표: 서경석 목사)과의 협력 하에 사무국에 통일안보교육단을 조직하고 주되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이 단체는 기독교사회책임과 협조하여 여러 교회와 신학대학들에서 교인들과 신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체제의 종교탄압실태와 북한에서의 지하교회 운영실태, 북한주민들의 김정일체제에 대한 반대의식과 여론,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과 조짐과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사회통일교육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북한사회연구원은 이들 강사들에 대한 강의기법과 강의내용에 대한 지도를 하였고, 인차 강사들의 수는 20여 명까지 충원되게 된다. 또 대부분이 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인 탈북자도시락공장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적지만 안정된 수입원에 의거해 1년 이상 통일안보강연을 다각도로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도시락공장이 사회적 기업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해체되면서 이에 적을 두고 활동하던 통일안보교육단도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다.

바.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통만사는 2008년 8월, 탈북자대학생들과 남한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꿈을 함께 키우고 통일에 대비한 재능을 함께 키우며, 실질적인 활동을 통하여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목적 밑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특징은 탈북자-남한 대학생들이 함께 운영하는 단체이고 대학생들의 단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통일교육 진행장소는 대학가와 중고등학교이다. 사무국에는 따로 사회통일교육 참여를 위한 업무전담팀은 없어도 대학동아리들, 여러 대학 학생회들에서 조직하는 사회통일교육에 탈북대학생들을 보내어 대학생들 속에서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통일안보강연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남북한 대학생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공간에서 남한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통일교육 과목 숙제함께하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로 진행하고 있다.

3.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에로의 참여의 의미와 역할

사회통일교육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많은 민간단체,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통일교육의 다양한 발전은 앞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얻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

로 전망할 수 있다.

통일교육분야에서는 이제 ‘사회통일교육’은 단순한 통일의 의미를 넘어서 ‘탈분단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회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진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진행하려는 일념에서 발상되는 이러한 의견개진은 귀중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회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데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몇 가지 요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관심을 제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중적인 의식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념화하려 하거나 이론화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의식화사업이 모두 그러하지만 사회통일교육 역시 분명하고 명쾌한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자들이 좋아하는 복잡한 논리나 까다로운 내용 전개는 오히려 국민들의 사회통일교육을 외면케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일교육 실천에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탈북자들은 국민들이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책이나 매스컴으로만 보아왔던 북한, 국토의 절반 저쪽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전하는 탈북자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고,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둘째, 범국민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광범한 국민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동시키며 통일실천 활동에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 것만큼 교육이라는 공식적인 형식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행사들을 곁들여 들을 맛이 있게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필요하다. 탈북자 NGO들이 사회통일 교육에 참여하여 북한실상을 직접 찍은 동영상과 실상자료들을 결부하여 북한의 실상을 전달해 주거나 또는 북한음악과 춤을 곁들여 청중의 고통된 분위기 속에서 통일실천을 호소한다면 북한주민들을 파렴치한 독재체제에서 해방시키는 데 미력을 바치려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다. 즉 문화와 예술의 형식을 활용하여 사회통일교육을 이벤트화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들에게 남북한 비교의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통일기회 비용인식을 가지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탈북자들은 남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탈북자들의 강연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다. 그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한사회의 특징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사회는 지나친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 비인간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사회는 집단주의, 인정주의, 명분과 자존을 중시하고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권위주의, 가부장적인 부정적 측면이 있다. 북한에 실재하고 있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남한사회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문자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장단점에 대한 자화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사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북한사회의 장단

점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그동안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 활발하게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점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윤곽을 그릴 수 있다. 특히 북한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북자들의 강연을 통하여 청강자들은 경제와 과학기술면에서의 우위에 도취되어 북한의 모든 것을 무시하려 하거나 또 북한을 성가신 이웃으로만 생각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 통일교육은 정치적 목적과 학술적 경쟁력의 우위선점을 위하여 북한의 현실을 간과, 과장, 은폐, 축소하거나 무턱대고 찬양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전횡으로부터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일임을 다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은 통일문제는 뒤로 한 채 친북, 대북논리로 대결되어 있으며 학자들마저도 보수 대 진보학자들로 갈려서 이들이 토해내는 친북이나 반북논리들이 양상되어 매스컴을 도배한다.

대표적으로 6·25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사회는 6·25가 북침인가, 남침인가를 갑론을박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쟁론 속에 빠져든다. 작년에 북한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때조차도, 우리 사회는 단결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입장을 필두로 극렬하게 대립되었을 뿐 아니라, 내부 갈등을 국제무제에까지 들고 가서 좌우가 한판 붙는 기막힌 구경거리를 연출하기도 했다.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범람하는 반정부여론과 친북 콘텐츠들은 분명히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대북관, 통일관을 가져야 할 우리 국

민들의 의식을 흐리게 한다. 5월 30일 모든 매스컴들에서 대서특필한 바와 같이 소위 <사이보민족방위군>이라는 친북조직홈페이지는 7,000명이나 되는 네티즌이 <김정은대장님의 권력승계를 축하한다>느니, <김정일 당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망발들이 버젓하게 게재되고 있고 여기에는 70명의 현역군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국통일교육이 우선인지, 사회통일교육이 우선인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현실적인 사회문제들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친북종북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남한사회의 화합과 올바른 대북관, 통일관을 가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천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IV. 나오며

사회통일교육은 이제 정부가 정책적 목적 달성과 안보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활용하던 시대를 벗어나 국민들에 의하여,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하여 진행되는 하나의 선진화활동이다. 선진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경제와 문명과 함께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의식함양을 필요로 한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에서 균형적이며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은 당연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균형적이며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통일교육이 이념화되지 말고 확고한 방향으로 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차적인 문제이다. 지금까지 정권교체시마다 방향이 흔들리고 내용이 달라지는 사회통일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통일교육이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국민들에게 객관적이며 자립적인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통일교육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평화와 통일, 북한에 대하여 이해와 소신, 참여의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이다. 북한이해 만큼은 복잡한 논리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실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과 탈북 NGO들을 참여시키는 사회통일 교육실천이 주문된다. 사회통일교육실행 주체들이 북한실상 교육을 겉치레식으로 실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섭외가 번거롭고 재원이 들더라도 많은 탈북자들에게 대국민 북한실상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탈북자들과 탈북 NGO들도 단순한 소득활동으로 치부하던 작태에서 벗어나 아무런 편견이 없이 자신들이 진솔한 체험과 일상들을 왜곡이 없이 전달하는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탈북자의 시선, 통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이애란 | 경인여자대학

1. 서론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하여도 대한민국은 세계의 가장 최빈국이었고 보릿고개를 넘기 어려워 울던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불과 3~40년 만에 산업화의 기적을 일구어 내고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가입국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가 회원국이 된 유일한 사례가 되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천지개벽을 하였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성공사례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경험과 경제개발 정책들은 개발도상 나라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일구어낸 이러한 성과들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와 3년간의 6·25전쟁이라는 피의 잿더미위에서 북한과 같이 시작하여 만들어낸

것들이란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전망은 300만 명의 아사자를 내고 세계적으로 가장 억압되고 가장 폐쇄된 집단 김정일의 북한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둡다고 말할 수 있다.¹⁾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과제이자 최대의 과제는 통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해나가야 하며 통일준비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는 올바른 통일정책의 수립과 함께 국민에 대한 통일교육이다. 국민적인 통일의식 제고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통일환경의 조성은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통일관련 정책과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집권자의 통일철학에 따른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지난 기간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보다는 집권자의 통일인식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상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대부분의 통일교육이 안보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김대중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강력한 햇볕정책 추진의지에 따라 통일안보 교육보다는 통일비용과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독일통일의 교훈을 통일비용에 맞추어 공론화하고 통일비용 충당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우리국민들 사이에는 통일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이 자리잡게

1)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이 대한민국이 이루어놓은 어떤 것도 한순간에 해칠수 있는 악의 집단이며 위협세력이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통일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고,²⁾ 북한의 실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³⁾

김병로(2009)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전년도에 비해 12.2%나 감소했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국민의 의식은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고 부담이 생각이 많았고 특히 개인들에게 통일은 이익(27.7%)보다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72.3%)이라는 의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통일의식의 약화는 북한에 대한 빠른 개혁개방이나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차원에서 통일의 여건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식으로 바뀌거나 아예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통일에 대한 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되는 이유는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었다.⁵⁾

이러한 결과들은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방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2) 재단법인 한민족 복지재단의 2002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9.0%와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 17.0%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3) 김영하, 배한동, 성장환(2005)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나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문화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김병로(2009)는 “통일의식의 변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에서 2007년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5) 필자가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35명 중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생은 3명이었고 7명은 통일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대답을 기피하였다. 통일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학생 중 한 학생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세금이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학생의 나이는 11살로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다.

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통일비용만 계산하고 통일의 편익에 따른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히 분단비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지나치게 북한의 정치, 경제체제에만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남한에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2만 명을 훨씬 넘어섰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남쪽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 등은 향후 통일시대에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할 갈등과 혼란의 샘플링이 되기도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남쪽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쪽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정치체제나 경제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닌 사회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나 소통의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다.⁶⁾

분단의 구조가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 정부의 통일교육은 주로 체제 중심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한 반공교육위주의 교육으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접근에 불과하였고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시기의 통일교육은 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통일교육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사회문화적인 통합이나 심리적 차원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되지 못하였다.⁷⁾

6) 장명선, 이예란(2009),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한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59.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외로움’ 36.2%, ‘문화차이’ 31.0%, ‘편견과 차별’ 27.7%, ‘자녀교육’ 16.4%, ‘부부갈등’ 4.0%, ‘가족갈등’ 3.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방안 연구』(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7) 1960~1970년대는 남북한 모두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양 체제 간의 경쟁을 통한 흡수통일이 통일의 기본 방향이었기 때문에 주로 정치와 경제체제에만 편향되어

남북한 간의 장기적인 분단과 교류의 단절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였고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편향된 교육은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지만 이 운동 역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 없이 진행된 결과 북한을 찬양하는 좌편향의 결과를 낳게 하였다(오기성, 2004 참조).

북한은 제대로 된 사회과학연구논문이 발표되지 않고 또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으며 오직 체제수호를 위한 선전과 김일성일가에 대한 우상화에 대한 자료가 전부이지만 남쪽의 대부분의 통일전문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해외에 반출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통일교육의 틀과 내용을 결정하다보니 통일교육의 내용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았다.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입국이 급증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진행하였지만 일정한 교육의 방향과 체계도 없이 각자 개인이 체험한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전달하는 북한의 실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고 오히려 북한의 실상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만을 강조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고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⁹⁾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혁명과 정보화 사회의 진입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가 다량으로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도 체계적인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있었다(조혜영, 2006: 231~252).

- 8) 대부분의 북한관련 논문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하거나 북한의 사회과학적인 현상을 분석한 것이 아닌 주로 북한의 로동신문이나 북한의 주요 잡지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북한체제선전자들의 생각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북한을 찬양하게 하는 좌편향적, 중복적인 시각을 조장하였다.
- 9) 원정화 사건과 같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교육 교사 활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에 따른 통일정책으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는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주되는 논제로 등장하였고 지나친 통일비용과 통일후 부담해야 하는 국민적인 부담을 주제로 하는 통일교육의 결과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더욱더 나빠졌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학자들 속에서 1990년대 독일의 통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독일에서의 통일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독일통일과정에 일어났던 사회통합과정의 혼란이나 사회적 갈등,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소개된 통일비용의 부정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소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통일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미래의 통일주도세력인 청소년들 속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면서 통일의지가 약해지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중되는 현실은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새롭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사료된다.

현재 북한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 세대는 북한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숙명을 지닌 세대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달성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자 민족 최대의 과제인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이상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실체를 더욱더 정확히 남한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통일 후 함께 살아가게 될 북한주민들에 대해서와 북한의 각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통일을 위한 준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탈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통일교육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보다 합리적인 효과적인 교육 방안들을 찾아낸다면 통일교육의 목표들¹⁰⁾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 탈북자의 시선으로 본 통일교육 현장의 문제점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전문가들 사이에만 주고받는 의제이고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써먹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통일이란 말은 더욱더 공허한 말이고 재미없는 이야기이다.

김대중 정부 초반까지만 하여도 탈북자들이 통일안보교육에 많이 활용되었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강연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성인들과 군인들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통일안보교육은 모두 막을 내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주로 통일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통일교육 일선에 나서 통일비용과 남북한 간 교류에 대한 통일교육이 주류를

10)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목표는 ① 통일 환경과 남북한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②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지지 확립, ③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 간 이질성 극복, ④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⑤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⑥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루게 되었고 학교 통일교육의 담당자는 탈북자들에서 대학교수나 통일전문가들로 대체되게 되었다.

필자가 몇 년 전 방문했던 인천의 한 고등학교의 실례를 들어보자.

그 학교는 이전에도 몇 번 초청되어 통일안보교육을 나갔던 곳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6·15정상회담 이후에는 주로 통일전문가들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는데 용어가 너무 어렵고 교육내용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중고등 학생들에게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와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문제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보아야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을뿐더러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워 다시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 학교 윤리교육 담당자의 이야기였다.

우리 사회의 인터넷 활용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현재는 지난 시기와 달리 북한의 정보들을 전달하는 대북 매체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북한의 정보에 대한 홍수 속에서 살면서도 남쪽의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오락, 엔터테인먼트에 열중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이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형편이다. 필자가 통일교육 현장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거의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여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관심 없는 영역에 대한 귀찮음이 많은 것 같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은 주로 도덕교과서의 일부를 할애하여 진행되고 있고 북한체제 중심적인 접근방법에 치우쳐 있으며, 교과운영과정도 학기말에 몰아서 진행하는 경향이어서 실제적인 통일교육의 효율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교육현장의 교사들의 경험사례에 의하면 특히 북한사회의 이해와 관련된 수업내용의 경우 교사들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한다. 통일은 이념적으로도 이야기하기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교사들 자체가 북한사회의 실상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실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¹¹⁾

이러한 결과로 실제로 교육수요자들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인 통일교육은 주로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평화변영정책 등 통일정책만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통일비용에 대한 지나치게 위협적인 교육으로 통일문제가 하나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만든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그간의 북한연구는 북한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인물연구와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제도에 대한 연구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북한의 실상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실상을 전하기보다는 북한의 체제와 정치지도자, 조선노동당 등 정치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쳐 있었고 결과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에서는 통일교육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강의 형식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고 참여자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극소수의 통일

11) 200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통일교육내용 중에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은 북한의 실상(70.1%), 남북한 비교(41.0%),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32.1%), 국내의 정세(18.9%),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11.7%), 기타(6.8%)로 나타났다 P&P 리서치가 2002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도 북한의 청소년 및 주민들의 삶 등 북한의 실상(29.3%), 남북한 비교(16.1%) 등으로 북한의 실상과 북한의주민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범학교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교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통일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¹²⁾

분단 반세기를 지나온 현시점에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북한사회의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학생들에게 북한사회의 객관적인 정보들을 포함하여 정확한 실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일선 교육현장들에서 헛수를 채우기 위한 구색 맞추기 통일교육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통해 우리의 통일이념이 철저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분단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너무도 멀어진 북한주민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북한주민들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 민족의 분단과 통일문제를 다음세대에 넘기기보다는 이번 세대에서 꼭 해결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현재 남쪽에 내려와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미래 통일시대의 바로 미터이다. 이들이 남쪽사회에서 정착하면서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과 북의 주민들이 다 같이 겪어야 할 혼란이고 갈등이 될 것이다.

남쪽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쪽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상 사회적인 편견과 문화적 이질감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남쪽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이질감은 이

12) 통일 및 북한사회에 관련한 정보취득 경로를 보면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학교수업을 압도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학교통일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나 한민족 복지재단 등의 조사들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고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남쪽 사회에 대한 정착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쪽 사람들과 만났을 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이념의 차이보다는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한 이해부족의 어려움이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리숙 함의 어려움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통일교육은 주로 정치적인, 체제 지향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 보니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다.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은 북한주민들과 남한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와 통일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문화적인 아이টে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재미를 곁들이지 않은 통일교육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악기다루기, 노래부르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통일교육을 하고 있고 이처럼 문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통일교육 강사들은 수명이 길고 인기가 있지만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 강사들은 수명도 짧고 인기도 없다고 한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이고 향후 통일시대에서 초래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심리적인 갈등 같은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인류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다. 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피해갈수 없다고 생각한다.

III. 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경험보다 더 확실한 지식은 없다. 자신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깨닫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한 감동적이다. 사단법인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해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북한음식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통일교육에 활용하였다. 통일을 밥상에서부터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음식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충북 소태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북한음식 만들기 및 시식회를 진행하였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북한의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북한의 실상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등을 알려준 결과 집중도도 좋았고 교육결과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여성 가족재단에서 서울시민 500명을 상대로 평양지방의 전통음식인 노치를 만드는 방법을 시연하고 평양온반 및 평양노치 시식회를 마련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특히 시식회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이렇게 북한음식도 맛보고 북한의 실상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도 따뜻해지고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원에서는 또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그리고 휘경여고 등 여러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북한음식 만들기 강좌를 만들고 북한의 지역적인 특성과 자연,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과 일상생활, 음식문화와 북한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

해주는 교육을 진행하여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었다.

사단법인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은 통일체험교육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특히는 남쪽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통일체험연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통일교육에서 체험교육은 판문점 참관이나 지하땅굴 견학, 오두산 통일전망대 참관도 좋지만 보다 효과적인 통일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예술단체들을 활용하고 실제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내용들을 개발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쓴 수기와 소설을 활용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활용자료와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실제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직접 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사단법인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는 통일체험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음식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강사를 파견하거나 사단법인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 직접 북한전통음식을 만들어도 보고 먹어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중 80%에 해당하는 북한여성들을 통일요리강사로 육성하여 각급 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파견하기도 하고 지역 문화센터나 문화회관들에서 북한음식 조리강좌를 개설하고 음식을 매개체로 한 남북한간의 소통과 화합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나 정치제도보다는 반세기 이상 갈라져 살

아온 북한과 남한의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남한의 드라마와 문화들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남조선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면 무식하다고 하고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고 부르는 풍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얻을 수 없어서 얻지 못하고 있고 남한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도 관심이 없어서 얻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남한의 문화와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지만 남한주민들 역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의식과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향후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문화적인 분단, 심리적인 장벽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이 내일 온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식들을 가르치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해 보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아무 관심도 없고 귀찮아하는 국민의 의식구조로는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진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체험 교육 형태의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론 및 제언

통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민족 최대의 지상의 과업임이 틀림없다.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대한민국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유수의 연구기관들에서도 대한민국의 발전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통일문제를 빼놓지 않는 것도 다 우리의 분단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분단으로 인해 우리 국가가 나가야 할 발전도상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작년에 일어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도 역시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과괴행위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통일의식을 가지고는 이 나라의 통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통일이 설사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혼란과 갈등, 또 다른 분단의 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고 국민의 참여도를 높여 전 국민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또한 남한 주민들이 반세기 이상 헤어져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우리의 통일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통일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북한과 남한사회를 모두 경험하여 남북한의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남한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통일

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고 실제로 체험활동을 곁들인다면 이보다 더 금상첨화인 교육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통일교육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무작위의 북한경험자들을 통일교육 강사로 내세운다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남한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북한에서의 학력이 대학졸업 이상인 고학력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유능한 통일교육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통일교육 방안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통일교육의 수준을 더욱 높이고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발제를 마치려고 한다.

[부록] 통일교육 콘텐츠 수요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서는 4개년 계획하에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시민사회 단체(1차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당 연구원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제작된 결과물이 일선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협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단체)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귀중한 분석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사된 내용은 통계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선임연구위원 허문영(연구책임자)
프로젝트연구위원 권오국(실무책임자)

조사대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먼저 기초조사를 위한 항목입니다.

1-1. 귀 단체는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____년

1-2. 귀 단체가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약 몇 년이 되었습니까? ____년

2. 귀하가 속한 단체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5. 귀하가 소속된 단체는 어떠한 성향을 가진 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① 진보() ② 중도진보() ③ 중도()
④ 중도보수() ⑤ 보수()

다음은 귀 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교육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6. 귀 단체는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1년에 몇 차례나 개최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2회() ③ 3~5회()
④ 6~9회() ⑤ 10회 이상()
7. 귀 단체의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강연() ② 현장견학() ③ 학술행사()
④ 각종 공모/전시() ⑤ 기타(_____)
8.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1회당 교육대상자 규모는 평균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① 10명 이하 () ② 11명 이상~20명 이하 ()
③ 21명 이상~30명 이하() ④ 40명 이상~50명 이하 ()
⑤ 51명 이상~70명 이하() ⑥ 71명 이상~100명 이하()
⑦ 101명 이상 ()
9. 귀 단체의 연간 교육대상자 규모는 약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① 50명 이하() ② 50~300명() ③ 300~1000명()
④ 1000명 이상() ⑤ 기타(_____)
10. 귀 단체는 통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수항목 선택가능)
① 자체예산() ② 정부보조() ③ 수강료()
④ 기부금() ⑤ 기타(_____)
11. 귀 단체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의 자체 예산

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500만원 미만() ③ 500~1천만원 미만()
- ④ 1~3천만원 미만() ⑤ 3~7천만원 미만() ⑥ 7천만원 초과()

12. 귀 단체의 통일교육 행사는 주로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 ① 외부강사() ② 내부강사()
- ③ 외부강사+내부강사() ④ 해당사항 없음()

13. 12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외부강사인 경우 어떤 사람이 진행합니까?

- ① 통일관련 석박사학위자 ② 통일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 ③ 통일관련 정부 및 단체 은퇴자 ④ 탈북자
- ⑤ 기타(_____) ⑥ 해당사항 없음()

14. 12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내부강사인 경우 어떤 사람이 진행합니까?

- ① 통일관련 석박사학위자
- ② 통일교육 관련 정부기간 연수프로그램 수료자
- ③ 통일교육 담당자(비학위 또는 비연수자)
- ④ 기타(_____)
- ⑤ 해당사항 없음()

15. 귀 단체의 통일교육 관련 담당자는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몇 번의 직무관련 연수를 받았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1~2회() ③ 3~5회()
- ④ 3~7회 ⑤ 7~9회 ⑥ 10회 이상()

16. 귀 단체는 교육대상자를 주로 어떤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 ① 초등학생() ② 중고등학생() ③ 대학생()
④ 직장인() ⑤ 주부() ⑥ 노인()
⑦ 기타(_____)

다음은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북한의 천안함 사건 이후 교육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 ① 매우 긍정적으로() ② 대체로 긍정적으로()
③ 변화없다() ④ 대체로 부정적으로()
⑤ 매우 부정적으로()
18. 귀 단체에서 통일교육 관련 주제 중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① 안보() ② 북한실상() ③ 경제교류()
④ 인권() ⑤ 통일정책()
19. 통일교육을 위해 어떤 학습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사 주도의 설명식 강의()
② 교육생 중심의 토론식 강좌()
③ 현장 체험학습()
④ 영상자료나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
⑤ 기타(_____)

20.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동영상을 포함한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21. 파워포인트 강의안(PPT)과 연계된 통일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 편당 몇 분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분 이내() ② 10분() ③ 15분()
④ 45분() ⑤ 1시간()

22. 통일교육 자료를 제작할 경우 파워포인트(PPT) 강의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23. 파워포인트 강의안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거나 또는 유념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기술) _____

다음은 통일교육 콘텐츠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통일교육 관련 교자재를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획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통일교육 관련 배포용 자료만을 그대로 이용한다 ()
- ② 통일교육 관련 자체 제작물만을 이용한다 ()
- ③ 통일교육 관련 배포용 자료와 자체제작물 모두 이용한다 ()
- ④ 외부강사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

25. 통일교육 관련 배포자료 중 어떤 형태가 교육에 가장 효과적입니까?

- ① 통일교육 관련 배포용 인쇄물 ()
- ② 통일교육 관련 배포용 PPT자료 ()
- ③ 통일교육 관련 배포용 동영상자료 ()
- ④ 기타(_____)

26. 귀 단체는 통일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주로 입수하고 있습니까?

- ① 정부발간물 () ② 학술연구물 () ③ TV/라디오 ()
- ④ 신문 () ⑤ 인터넷 () ⑥ 정부/사회단체 교육 또는 연수 ()
- ⑦ 기타(_____)

27. 귀 단체에서 통일교육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을 때 주요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수항목 선택 가능)

- ① 정보의 소재파악이 어렵다 ()
- ②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조항이 까다롭다 ()
- ③ 정부(공공)기관에서 비협조적이다 ()
- ④ 저작권 확보가 어렵다 ()
- ⑤ 정보가 범람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
- ⑥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 ()

⑦ 기타 (_____)

28. 통일연구원과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기존의 자료가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유용하다 () ② 유용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필요없다 () ⑤ 전혀 필요없다 ()

29. 통일연구원에서 통일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주제 중에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통일비전 () | ② 북한실상 () | ③ 통일정책 () |
| ④ 남북체제 비교 () | ⑤ 한반도 주변정세 () | ⑥ 북한인권 () |
| ⑦ 북한이탈주민 () | ⑧ 통일편익 () | ⑨ 통일비용 () |
| ⑩ 통일의 필요성 () | ⑪ 남남갈등 극복방안 () | ⑫ 독일통일의 경험 () |
| ⑬ 3대권력 세습 () | ⑭ 북한군사력 () | ⑮ 남북경협 () |
| ⑯ 평화체제구축 () | ⑰ 북한민주화 () | ⑱ 한국전쟁 () |
| ⑲ 이산가족 () | ⑳ 국군포로 () | |
| 기타 자유주제 (_____) | | |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항목입니다.

1. 귀 단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하여 우선 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재정부족 () | 회원/청중동원 () | 교육자료부족 () |
| 시설/공간부족 () | 전문성 부족 () | 강사섭외 () |
| 기타 자유기술 (_____) | | |

2. 귀하가 체험한 경험에 기초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통일연구원에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제안해 주십시오.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 | |
|-------|--|-----|--|
| 소속 단체 | | | |
| 성 명 | | | |
| 직 위 | | | |
| 연 락 처 | | 이메일 | |

본 설문결과를 토대로 통일연구원에서는 금년 말까지 ‘PPT 강의자료’, ‘동영상’, ‘교재’ 등을 제작·개발하여 시민단체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귀 단체의 의견은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방향과 관련하여 조사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 비밀은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du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the past,
the present,
the future

www.kinu.or.kr

통일교육

과거·현재·미래

 통일연구원

9 788984 796072 93340
ISBN 978-89-8479-607-2